

2006년 연두업무계획

**희망한국 :**  
**세계 산업4강, 무역8강 실현**

**2006. 1**



**산업자원부**



# 목 차

## 머리글 : 업무계획 요약

I. 산업·자원정책의 평가와 향후 핵심과제 .....	1
1. 참여정부 이전의 정책 평가 .....	1
2. 참여정부 3년의 산업·자원정책 및 현 좌표 .....	3
3. 향후 핵심 정책과제 .....	10
II. '06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	11
1. 비전-정책목표-이행과제 체계 .....	11
2.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	12
목표 1. 실물경제의 활성화 촉진 .....	12
목표 2. 혁신형 산업생태계의 구축 .....	24
목표 3. 초일류 성장산업군의 육성 .....	45
목표 4. 에너지강국 실현기반 확충 .....	65
목표 5.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촉진 .....	80
III. 06년 역점추진 혁신과제 .....	102
IV. 성과측정 추진계획 .....	113
V. 맺음말 .....	121

# I. 산업·자원정책의 평가와 향후 핵심과제

## 1 참여정부 이전의 정책 평가

### □ '90년대 초·중반의 산업·자원정책

- 「신경제 5개년계획」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화정책 추진
  - 인력·입지 등 요소투입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 자금공급 위주의 중소기업 육성 및 벤처기업 창업 지원
  - WTO체제 논의를 계기로 경제시스템의 세계화 추진
- 1인당 국민소득 1만불('95), 수출 1,000억불('95), OECD 가입('96) 등 외형적으로는 선진경제권에 진입한 듯 하였으나
  - 고비용·저효율의 경제체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대규모 무역적자의 누적과 기업·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 초래

### □ '90년대말 ~ '00년대초의 산업·자원정책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의 개혁 추진
  - 총력수출체제와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로 외화 확보
  - 공기업과 과잉설비부문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 시행
  - 벤처붐의 조성 과 에너지시장의 자유화·구조개편 추진
- 대규모 무역흑자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외환위기의 조기 극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나,
  - 단기적 구조조정에 정책이 집중되고, 균형발전,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에너지위기에의 대응역량 확충 등 중장기대책은 미흡

## 2 참여정부 3년의 정책성과와 향후 핵심과제

### □□ 참여정부 3년의 산업·자원정책 기초

- 우리 산업·자원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치유 및 혁신적 발전
  - 무역흑자 기초의 안정적 유지 및 외국인투자의 질적 고도화
  - 부품·소재산업의 세계공급기지화 및 지식서비스산업의 역량 강화
  - 해외자원개발을 본격 추진하여 에너지 자주공급역량을 강화
- 더불어 잘 사는 선진산업강국 실현을 위해 신규정책을 발굴·추진
  - 대·중소간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약 촉진
  - 지역산업혁신·산업단지클러스터화로 자립형 지방화의 기반 구축
  - 기술개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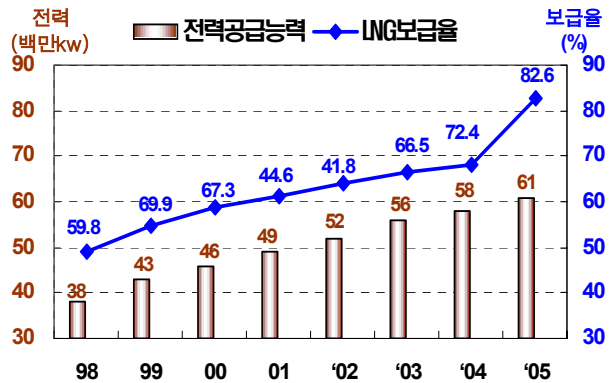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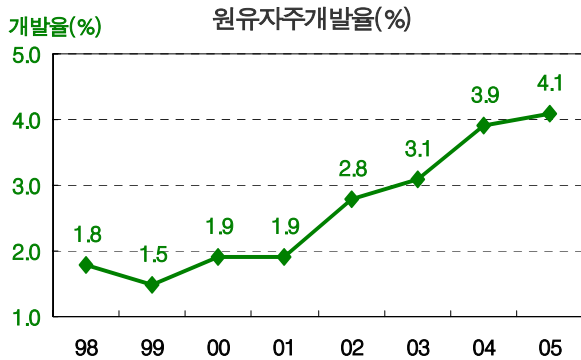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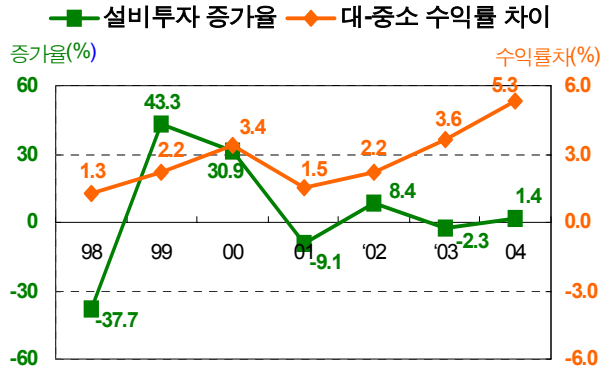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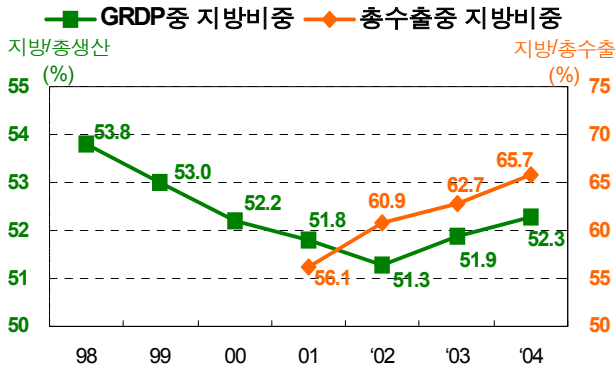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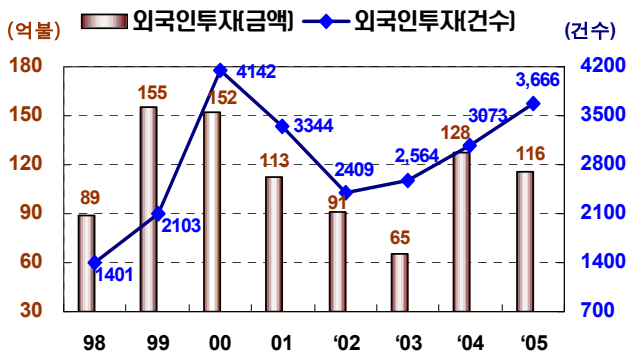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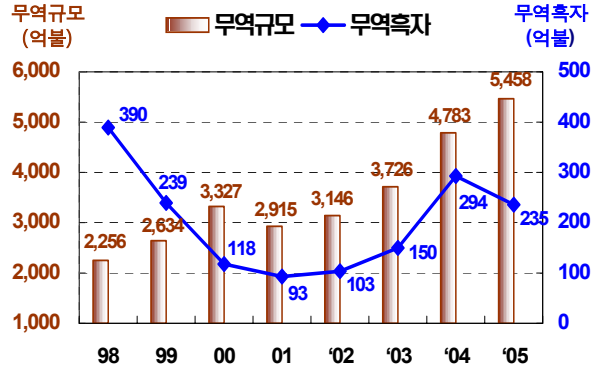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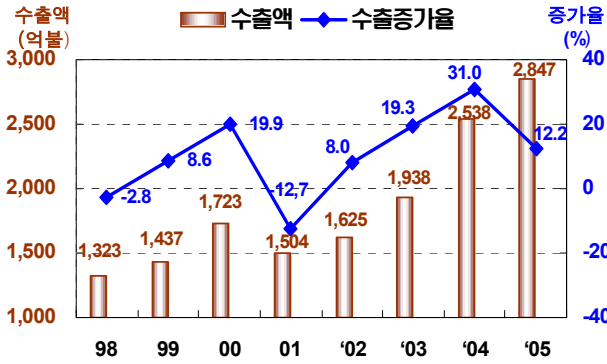
### □□ 주요 정책성과와 현 좌표

- ① **무역** : 수출의 획기적 증가 속에 미래 수출동력의 확충
- ② **외국인투자** : 질적 고도화와 투자환경개선 중점 추진
- ③ **산업** : 주력산업의 세계적 리더십 확보와 차세대성장동력 육성
- ④ **지역균형발전** : 자립형 지방화의 기틀 마련 및 성과 가시화
- ⑤ **설비투자·중소기업** : 투자부진 및 중소기업 경영난 지속
- ⑥ **에너지·자원** : 자주공급역량 확충 및 방폐장 부지 선정

### □□ 향후 핵심정책과제 : 세계 산업4강·무역8강의 희망한국 실현

- 수출 등 참여정부 들어 호조를 보인 부문은 현재의 정책기조를 지속하면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 추진
- 국가균형발전·차세대성장동력·해외자원개발 등 참여정부의 주요 중장기 역점과제는 조기에 가시적 성과 도출

## < 그래프로 본 산업자원정책 성과와 현 좌표 >



## Ⅱ. '06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참고** 비전 - 정책목표 - 이행과제 체계 (5대 목표, 21개 이행과제)

비전

**희망한국 : 세계 산업4강, 무역8강 실현**

목표

□ **실물경제의 활성화 촉진**

□ **혁신형 산업생태계의 구축**

□ **초일류 성장산업군의 육성**

□ **에너지강국 실현기반 확충**

□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촉진**

경제협력 전부문 확산

기업여건 1등국가

산업4강 실현

자주공급을 10% 확보

무역 1조불 시대 개척

이행과제

① 설비투자 확대 및 내수활성화 기반 확충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확산

③ 중소·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활성화

① 기술혁신 선순환구조 구축

② 국가 표준인증 및 제품안전관리 체제의 혁신

③ 전문성과 현장성 갖춘 산업인력 양성

④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① 주력산업의 글로벌리더십 강화

② 미래사회선도형 R&B산업 기반 확충

③ 차세대 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

④ 미래고도소비사회에 대응한 산업기반 강화

⑤ 디지털기술 융합기반 구축

① 미래지향적 에너지시스템 구축

② 에너지 소비구조의 선진화

③ 친환경·수소 경제로의 이행 기반 구축

④ 사회적약자를 위한 에너지 복지 확충

① 산업강국 견인형 新 무역체제 구축

② 네트워크형 외국인투자의 전략적 유치

③ 통상환경 개선을 통한 글로벌 경영 활성화

④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확대

⑤ 남북상생의 산업·자원협력 기반 구축

### 정책 여건

- ① 원화 강세와 아시아 인접국과의 경쟁격화
- ② 고유가 등 에너지시장 불확실성 증대
- ③ 대·중소기업 및 제조·서비스업간 양극화
- ④ 에너지기반시설 기피성향 및 시민참여요구 증대

### 고객의 정책수요

- ① 글로벌경쟁력 제고, 기업투자활성화, 취약 부문 활력제고를 핵심과제로 지적
- ② 신기술·신산업육성, 부품소재 육성 및 인력/기술/지재권 확보를 강조
- ③ 국산에너지개발, 에너지다소비구조 개선, 에너지효율향상을 고유가 대책으로 지적

## 2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 목표 1 실물경제의 활성화 촉진 : 경제활력의 전 부문 확산

#### □□ 설비투자가 본격 활성화되도록 총력지원시스템 가동

- 경제단체 등과 함께 설비투자 애로요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 「민관투자협의회」 및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하여 적극 해결
  - 설비투자 관련 덩어리규제의 발굴·정비 및 제도개선
- 업종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 투자활성화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여유자금의 투자수익처 알선·연계시스템 구축·운영

#### □□ '05 점화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대적으로 확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의 제정 및 국무총리 소속하에 '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법적·제도적 「틀」 완비
  - 상생협력의 유효성에 관한 이론적 토대도 구축
- 성과공유, 기술·인력·자금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다원화
  - 상생협력 촉진대상 업종을 그간의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異업종간의 상생협력도 활성화

#### □□ 전통 중소기업형 업종의 경기 활성화 지원

- 작년 추진한 영세봉제업체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안경·가구·공예·제화·귀금속·스포츠용품 등의 부문까지 확대 시행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확대('06년중 4개 신규 건설)하고, 「중소유통종합발전방안」의 수립·추진

**목표 2 혁신형 산업 생태계의 구축 : 기업여건 1등국가 실현**

**□□ 기술혁신 선순환구조의 구축**

- 산자부 R&D예산('06년 2조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 R&D 투자 :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제양극화 해소 중심
  - R&D 전략 : 목표지향적인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 R&D 평가 : 기술적 성과 중심→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개선
-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R&D 全週期에 걸친 지적권 확보·보호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방지 등 관리대책 강화

**□□ 국가표준·인증 및 제품안전관리 체제의 혁신**

- 다기화·중복된 국가표준·인증제도를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국제기준에 일치하도록 정비
- 사전예방형 제품안전망 구축과 危害정도별 차별화된 안전관리방법 도입 등 입체적인 공산품안전관리체제 구축

**□□ 지역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 지역전략산업(4+9)은 광역지자체 주도하에 중핵산업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기초지자체 주도하의 특화자원의 상품화사업 지원
- 테크노파크를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각종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기획·평가체계를 혁신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기업의 지방이전과 산업단지 활성화 등 지역투자 확대기반 확충

**목표 3** 초일류 성장산업군의 육성 : 세계 산업4강 실현

**□□ 산업별 핵심기술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리더십 강화**

-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여 초일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계·섬유·신발 등은 제품 차별화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
- 부품·소재산업은 '05년초 수립한 발전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력산업과 부품·소재의 동반견인형 선순환구조를 정착
- 차세대성장동력은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06년중 20개의 시제품이 上市되도록 하고,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  
(차세대반도체, 20"급 TV용 OLED, 경비로봇, 리튬폴리머 전지용 핵심장비 등)

**□□ 미래사회선도형 산업의 발전기반 확충**

- 로봇·나노·바이오 등 '미래사회 선도형산업'의 시장창출 촉진
  - 특히, 로봇산업은 기술개발·품질인증 및 보급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미래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산업으로 육성
- 미래 고도소비사회에 대응한 산업기반 강화
  - 유통·물류, 비즈니스서비스,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 고령친화산업 관련 표준 제정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고령자들을 위한 종합 생활체험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디지털기술 융합을 통한 新산업혁명 기반 구축**

- “서류없는” 기업활동 기반 등 산업의 디지털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를 확충
- e-러닝·e-헬스·텔레메딕스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新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의 유비쿼터스화 확산기반 구축

**목표 4 에너지강국 실현기반의 확충 : 자주공급률 10% 확보**

**□□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시스템의 구축**

- ‘에너지기본법’ 제정 후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모색 및 중장기 에너지전략 마련
-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산유국-소비국간 협력 등을 통해 에너지위기 대응역량 강화
  - 석유비축기지 증설(7.5백만배럴 규모) 및 350만배럴 비축유 구입
  - 발전설비 용량을 6,421만kW로 확충 ('05 : 6,174만kW)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차질없는 건설절차 수행
-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04.12)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에너지다소비 서비스업종의 자발적 에너지절약 유도

**□□ 차세대 친환경/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

- ‘수소경제 마스터플랜’('05 수립)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태양광·풍력·수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 기후변화협약 관련, 향후 의무부담에 대비하여 기업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을 확충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형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부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에너지재단’ 설립·운영
-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Energy Help Program** 추진
  - 전기·지역난방·가스요금 할인 및 요금 체납세대의 단전 유예
  - 불량 전기시설물 및 가스시설의 무료 개선 등 안전점검 강화

**목표 5**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촉진 : 무역 1조불 시대 개척**

**□□ 新무역체제의 구축 및 네트워크형 외국인투자의 유치**

- 전자무역·전시산업·수출입물류 등 무역인프라를 선진화하고, 세계일류상품·해외플랜트수주 등 미래수출동력을 확충
  - 전자무역문서 유통 확대 및 전자무역 포털을 통해 비용 절감
  - 플랜트 수주('05:158→'06:180억불) 지원 강화로 오일달러 환류
-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는 새로운 외국인투자 비전과 전략 수립
  - 외국인 경영·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R&D센터·지역본부·물류센터 등 고부가가치형 투자를 집중 유치

**□□ 통상환경 개선을 통한 글로벌경영 활성화**

- 산업발전전략에 입각한 FTA·DDA협상을 추진하면서 무역 조정지원제도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보완조치도 마련
- CHINVEST(중국-베트남-인도-중동) 벨트에 대한 차별화된 진출지원 전략을 추진하여 이들 지역을 우리나라의 아시아경영 거점화

**□□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확대**

- '04~'05년 정상자원외교 성과를 극대화하고, 유전개발펀드의 본격 도입('06년중 2천억원 규모) 등 자원개발 지원시스템 혁신
- 해외자원개발과 연계하여 에너지인프라의 동반진출 지원

**□□ 남·북한간 산업·자원협력 기반 구축**

- 제10차 남북경추위 합의사항에 맞춰 경공업과 자원개발을 연계한 수익모델을 만들고, 대북 送電 등 에너지협력 기반을 구축
- 개성공단 진출사업의 본격추진 등 남북 교역·투자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 산업·자원협력 발전계획도 수립·추진

### Ⅲ. '06년 역점추진 혁신과제

#### 2006년 혁신추진 방향

- ◇ 고객 및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의 정착과 정책-혁신의 통합으로 '가장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로 도약 추진
- ◇ 이를 위해 민원·제도개선, 전자정부, 지식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갈등관리 등 공통혁신과제의 정책적용 성공사례 도출

#### □□ 민원·제도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 애로 해결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체계적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On-line으로 공동 정보이용 및 민원처리를 하는 시스템 구축
- '외국인 고객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불필요한 민원부담 해소

#### □□ 전문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한 무역구제기능 활성화

- 수입시장의 이상징후를 분석하는 On-line 조기경보체제 가동
- 무역구제제도별 온라인 신청·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의 제공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

#### □□ 표준분야의 KMS 활성화로 국제표준 선도기능 제고

- 표준화 및 국제표준 대응업무에 지식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처리 효율화 도모

#### □□ R&D 지원업무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 R&D 지원업무의 표준화 및 통합기반을 마련하고, R&D 종합 정보시스템 및 업무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

#### □□ 갈등관리를 통한 에너지분야 현안과제 해결체제 구축

-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갈등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맞춰 에너지분야의 효과적 갈등관리모델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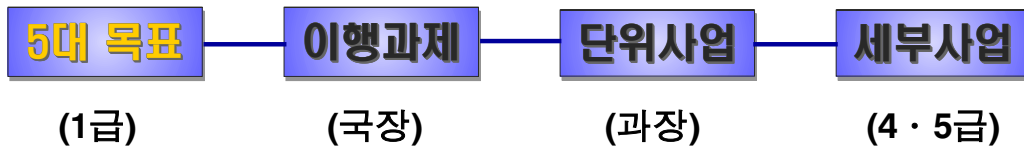
## IV. 성과측정 추진계획

### □□ 정책·혁신과제를 Code화하여 IT시스템으로 추진상황 관리

- On-Line "정책과제관리시스템"으로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

### □□ “직무미션제” 실시 및 직무성과계약 체결 (5급 이상)

- 업무계획상의 과제에 대하여 직급별로 책임자 지정 (직무미션제)



- 장관과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반기별로 평가

### □□ 성과지표를 토대로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성과급 등에 연계

- 정책과제별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지표별로 목표치를 설정  
(정책부문 : 49개, 혁신부문 10개)
- 직무성과계약 달성도, 정책, 업무혁신 등을 평가하여 자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반영

<통합평가지시스템 구성항목> (%)

직무성과계약 달성도	다면평가		정책평가		업무 혁신	홍보관리 (PCRM 포함)	전자 정부	학습 교육	계
	단순	다차원	자체평가	수요자평가					
30	9	6	10	10	20	10	3	2	100

- 평가결과를 인사·성과급·조직·예산배분 등에 반영



# I. 산업·자원정책의 평가와 향후 핵심과제

## 1 참여정부 이전의 정책 평가

### 1. '90년대 초중반의 산업·자원정책 평가

#### □ 핵심정책 기초

◇ 「신경제 5개년계획」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정책의 추진

- ① 요소투입 확대형 산업경쟁력 강화
  - 산업인력·공장입지 공급, 기업규제완화 및 기술개발지원 강화
- ② 지원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 자금공급 위주의 중소기업 육성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 ③ WTO체제 논의를 계기로 경제시스템의 세계화 추진
  - 수출촉진과 수입개방의 병행 및 기업의 국제화 여건 조성
  - 국제에너지시장의 안정으로 동자부 폐지('93) 및 석유가격 자유화('97)

#### □ 평가

- 1인당 국민소득 1만불('95), 수출 1,000억불 달성('95), OECD 가입('96) 등 외형적으로는 선진경제권에 진입한 듯 하였으나
  - 고비용·저효율의 경제체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성장잠재력과 구조조정의 자생력이 약화
    -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의 누적 ('93-'97년간 : 총△470억불)
    - 외형위주 차입경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
- ⇒ 97년말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작용

## 2. '90년대말~'00년대초의 정책 평가

### □ 핵심정책 기초

◇ 외환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금융기업·노동공공의 4대부문 개혁 추진

- ① 총력수출체제와 무역흑자기반 구축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 무역·투자확대회의의 분기별 개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정
- ② 공기업 및 과잉설비부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시행
  - 민영화: 포철·한중 등, 구조조정: 정유·반도체·자동차·전자 등 7개분야
- ③ 新기술·新산업 및 전자상거래의 육성
  - IT·BT·NT 등 신기술 개발, 벤처붐의 조성 및 e-비즈니스 촉진
- ④ 에너지시장의 자유화 확대 및 발전분야 경쟁체제 도입
  - LPG 가격 자유화('00) 및 전기위원회·전력거래소 설치('01)

### □ 평가

- 대규모 무역흑자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외환위기의 조기 극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나
  - \* '98~02년간 : 무역흑자 944억불, 외국인투자유치 600억불
- 단기적 구조조정에 정책이 집중되고, 균형발전,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에너지 자주공급역량 확충 등 중·장기 대책은 미흡
  - 양적목표 중심의 벤처육성으로 벤처거품과 자원왜곡 발생
  -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체계적 노력 미흡
  -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 등 부문간 불균형 지속 심화
  - 국제 자원·에너지 시장에 대한 대응체제 취약

## 2 참여정부 3년의 산업·자원정책 및 현 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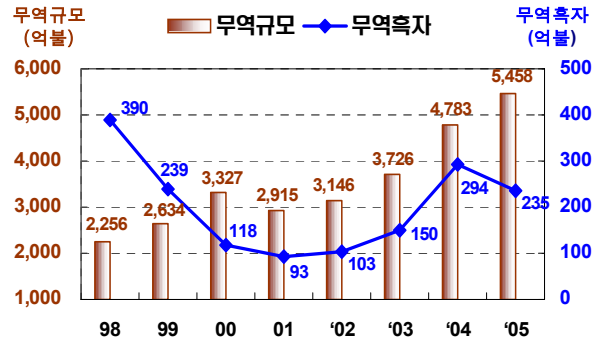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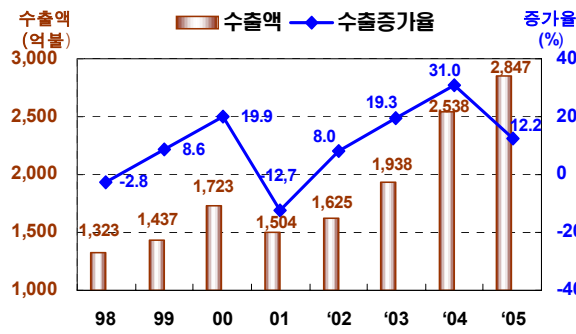
### 핵심 정책기조

- ① 우리 산업·자원부문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조기에 치유하고 혁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
  - 무역흑자 기조의 안정적 유지 및 외국인투자의 질적 고도화
  - 부품·소재산업의 세계공급기지화 및 지식서비스산업의 역량 강화
  -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가동 및 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을 구축
  - 해외자원개발을 본격 추진하여 에너지 자주공급역량을 강화
- ② 더불어 잘 사는 선진산업강국 실현을 위해 새로운 정책 환경과 고객수요에 부응한 신규정책을 발굴·추진
  - 대·중소간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약 촉진
  - 지역산업혁신·산업단지클러스터화로 자립형지방화의 기반 구축
  - 기술개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

### 1 무역 분야 : 수출의 획기적 증가 속에 미래 수출동력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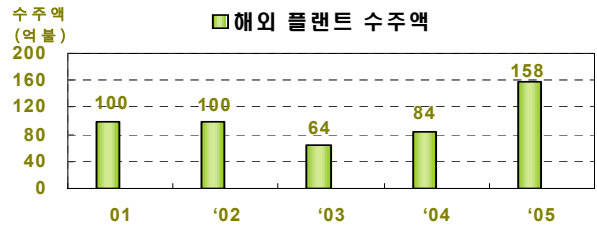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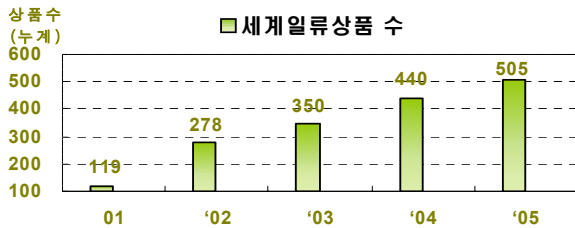
- '86~'88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지난 3년간 연속 두자리수 수출증가세를 기록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
  - '05년 세계 12번째로 무역규모 5천억달러를 돌파하고, '98년 이후의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

1. 산업·자원정책의 평가와 향후 핵심과제



□ 참여정부 3년간 새로운 수출동력의 발굴 및 선진 무역인프라의 확충을 중점 추진

- 당초('01) 계획대로 세계일류상품을 '05년말 현재 500개 이상 발굴·육성하고, 3년간 300억달러 이상의 해외플랜트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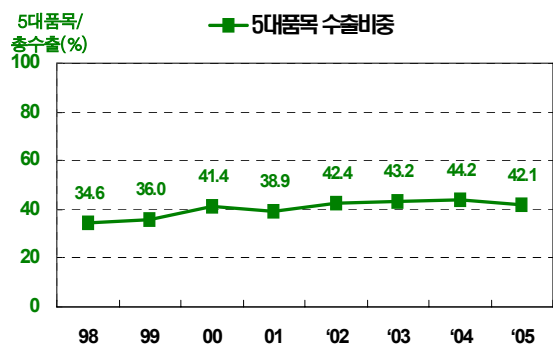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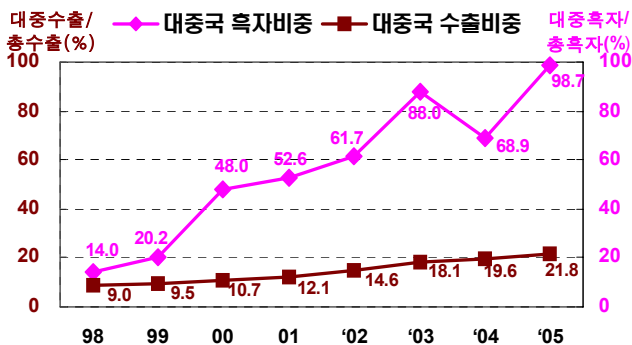


- 전자무역망의 구축\*과 전시장의 확충\*\* 등 세계 무역8강 실현을 위해 필요한 선진무역인프라를 확충

\* 전자무역망 구축 : '04.12~'07년 기간중 추진, '05년 현재 전자신용장 유통관리시스템 및 전자무역 문서보관소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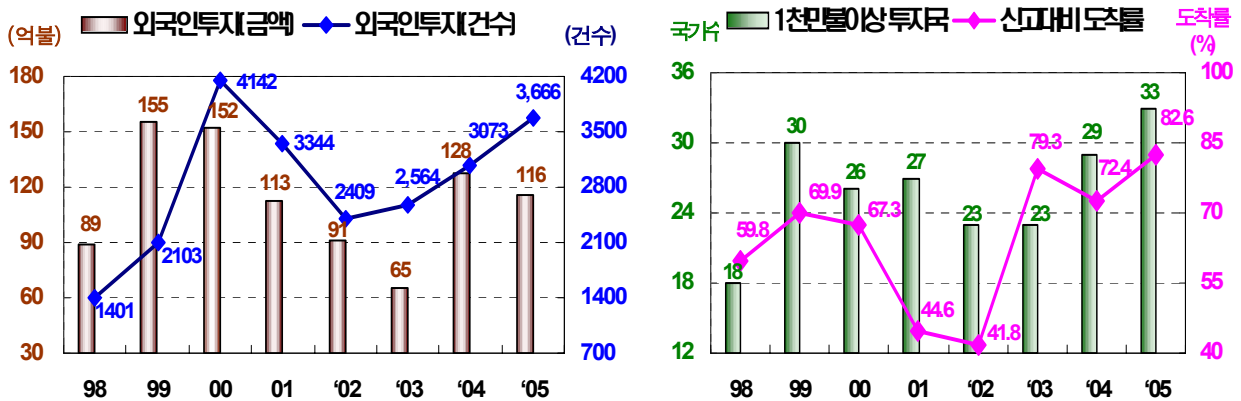
\*\* '05년 고양·광주·창원전시장 완공으로 전시장 면적이 '06년 현재 174,021㎡로 '02년말 대비 72% 증가

□ 그러나, 특정국가·품목에의 수출의존도 심화로 해당국가나 품목의 수출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취약성 상존



**2 외국인투자 분야 : 질적 고도화와 투자환경개선 중점 추진**

- '03년에는 부진하였으나, '04~'05년에는 100억달러 이상의 호조세를 지속하면서, 투자유치 내용면에서 크게 고도화
  - 투자건수, 투자국가 수, 신고대비 도착률 등 외국인투자의 저변을 나타내는 지표가 크게 개선
  - 3년간 R&D센터 22개, 물류센터 58개, 지역본부 13개 등 동북아비즈니스허브 조성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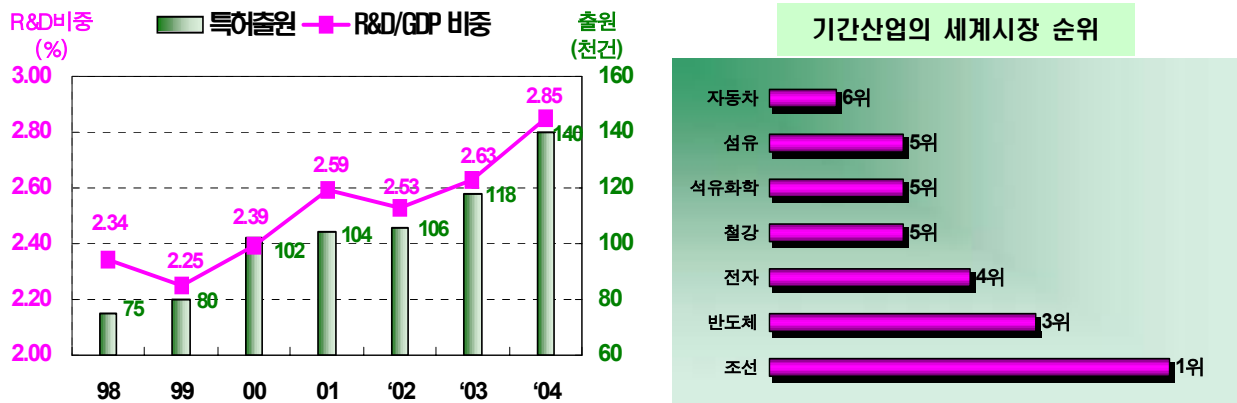
-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외국인 경영·생활환경개선 5개년계획」('04~'08)을 수립·추진중
  - 총 161개 과제중 '05년말 현재 75개 과제(경영환경 27개, 생활환경 48개)를 추진 완료하고, 86개 과제는 정상추진중
- 선진통상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 투자 비중\*이 국제수준으로 높아지도록 외국인 경영·생활환경의 지속적 개선과 인센티브 강화노력 시급

\* FDI/GDP 비중('04) : 한국 8%, 중국 15%, 세계 평균 21.7%

**3 산업 분야 : 주력산업의 리더십 확보와 차세대성장동력 육성**

□ R&D투자 확대 등에 따른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주력기간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 확보

- 조선산업(세계 수주점유율 4년연속 1위) 등 주력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지배력 확대



□ '03.12월부터 추진된 10대 차세대성장동력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103개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개발 추진중

\* 산자부 주관분야(5개) :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전지

- PDP 등 29개 제품분야의 55개 기술개발과제, 15개 기반조성과제, 7개 인력양성사업을 패키지로 지원중(1,355억원)
- 이 결과, 세계최대 40인치 OLED-TV 등 일부품목은 기술개발을 통하여 제품화에 성공

**< 2005년중 차세대성장동력 분야 기술개발 성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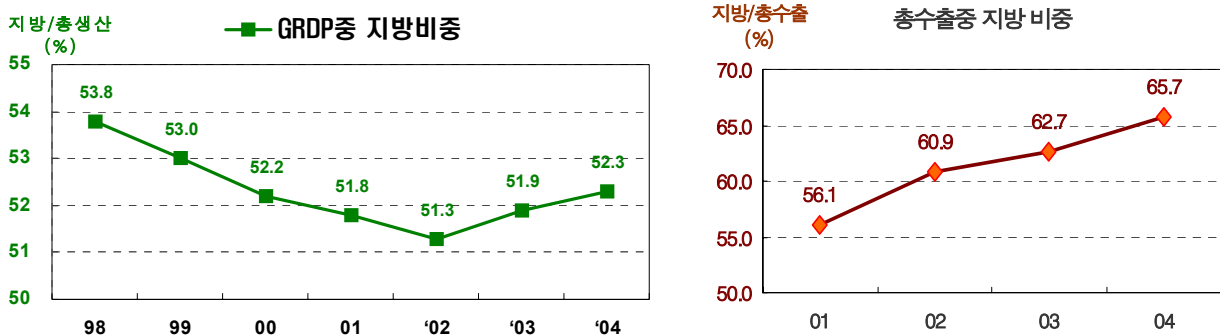
디스플레이	LCD · PDP · OLED 핵심기술 개발로 TV시장 세계1위 점유
지능형로봇	청소로봇 등 8종의 로봇을 출시, 美 · 中 제품과 경쟁대열 합류
차세대전지	대용량 노트북용 이차전지 개발 등으로 세계1위인 일본에 근접
차세대반도체	자동차용 핵심반도체 및 초저가 부품 개발 성공
미래형자동차	소프트타입 하이브리드차를 일본에 이어 세계2번째로 개발

**4 지역균형발전 분야 : 자립형 지방화의 틀 마련 및 성과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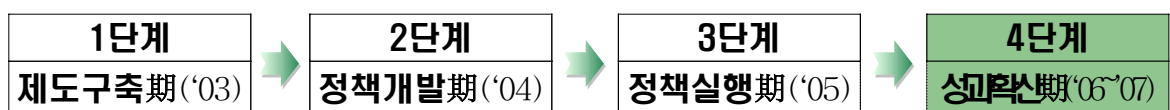
- 과거 40여년간 계속된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을 극복하기 위해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핵심과제로 추진
  - 소극적인 수도권집중 억제에서 적극적 지역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추구
-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지역별 강점 및 특성과 연계한 지역산업진흥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국가균형발전 성과가 점차 가시화

제도적 기반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04),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행 ('05)
주요 사업	· 「4+9」 지역사업 및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 : 7,268억원 지원('03~'05) ·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 : 7개 시범단지에 대해 300억원 지원 ('05) · 기업지방이전 지원 : 67개 기업, 432억원 지원 ('04~'05) · 지역혁신특성화 : 55개 프로젝트, 1,150억원 지원 ('04~'05)

< 지역균형발전 추진성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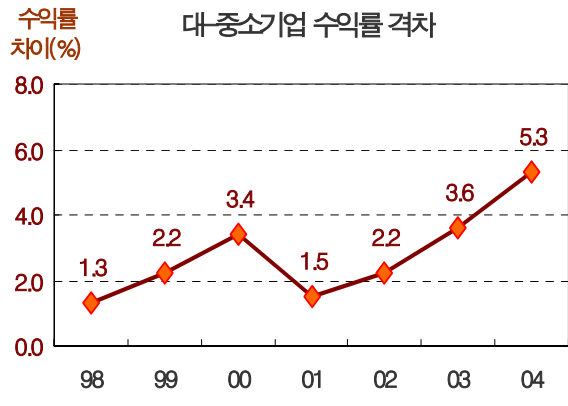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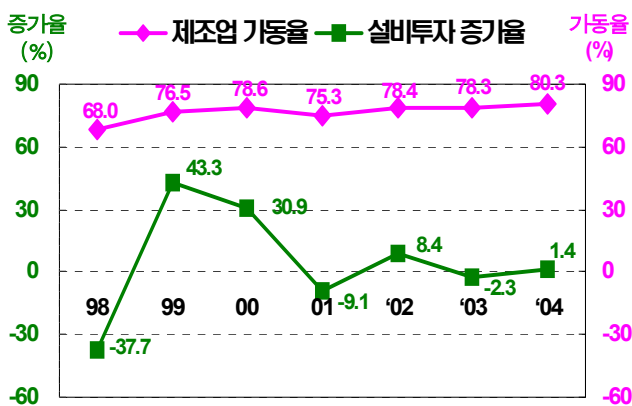


- 지난 3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금년부터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본격적인 성과거양 및 확산에 주력할 필요



**5 설비투자 · 중소기업 분야 : 내수 부진 및 중소기업 경영난 지속**

- (설비투자) 기업들이 수출 호조세에 가동을 제고로 대응함에 따라 설비투자가 부진한데다, 설비투자도 수입기계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내수경기 활성화로의 연결 미흡
    - '03년부터 투자애로요인 발굴·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氣살리기 등 투자의욕 고취노력 전개
    - '05년 하반기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증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의 진입은 미흡
  
  - (중소기업) 그동안의 보호위주 중소기업정책과 내수부진 등 구조적 요인이 가세하면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 '04년 이후 10차례에 걸친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정책 점검 회의를 통하여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혁신하고,
    - 특히, '05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점화, 중소기업 정책정보 맞춤형시스템 구축 등으로 일부 성과 가시화
- \* 10대 그룹의 상생경영 투자 : '05년 8,317억원으로 '04 대비 30% 증가  
 \* 6,638개 중소기업정책정보에 대한 맞춤형 제공시스템 시범운영('06.1월)



- '06년에는 설비투자 회복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확산으로 실물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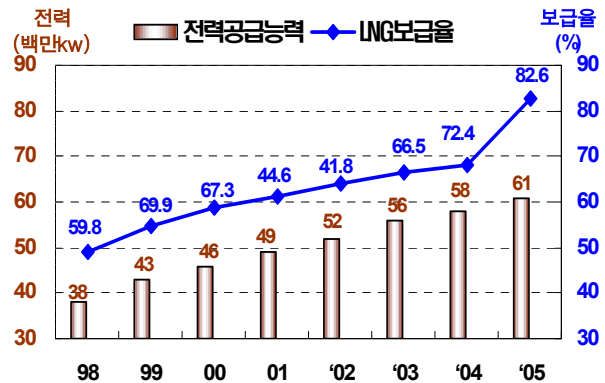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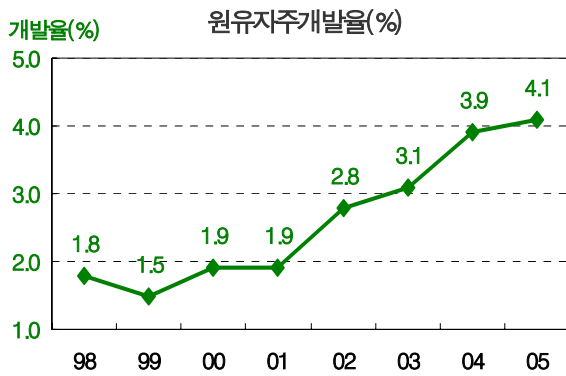
**6 에너지·자원 분야 : 자주공급역량 확충 및 방폐장 부지 선정**

- 高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자주 개발 역량의 확충을 통하여 산업발전과 국민생활안정 뒷받침
  - 정상자원외교와 자원협력을 통하여 사상 최고수준의 해외 자원개발성과\* 거양

\* '04년 정상외교로 확보한 원유 36억배럴은 과거 30년간의 성과(6.6억배럴)의 6배에 해당 ('05년 원유 자주개발률 4%대 돌파)

- '04년 동해-1 가스전의 상업생산 개시로 산유국의 꿈 실현
- 전력공급능력의 지속 확충, 도시가스의 보급률 제고와 비용인하(참여정부 출범 후 29% 인하) 달성

\* LNG도매공급비용(원/m<sup>3</sup>) : ('02) 63.7→('03) 59.5→('04) 57.6→('05) 45.4



- 한편, 과거 19년간 지연되어 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放廢場) 부지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정
  - 사회갈등형 국책과제 해결을 위한 본보기를 제시
- 다만,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에너지소비의 효율성\*의 제고 필요

\* 에너지원단위('03) : 일본 0.10, OECD평균 0.20, 미국 0.22, 한국 0.32

### 3 향후 핵심 정책과제

#### 향후 정책기조

- ◇ 수출 등 「참여정부」 출범 이후 호조를 보인 부문은 현재의 정책 기조를 지속하면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대책 추진
- ◇ 국가균형발전·차세대성장동력·해외자원개발 등 참여정부의 주요 중장기 역점과제는 조기에 가시적 성과 도출

#### 1. 설비투자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로 '06년에 실물경제 활성화

-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자영업의 경영 활성화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강화로 회복세에 접어든 실물경제의 힘찬 재도약 견인

#### 2. 혁신형 산업생태계의 구축으로 초일류 기업활동여건 조성

- 인력양성·R&D 시스템 등 산업인프라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조성
- 특히, R&D의 기반이 되는 국가표준·인증 체제를 혁신

#### 3. 글로벌 경쟁선도형 산업군 육성으로 세계 산업4강 실현

- 주력기간산업의 초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세대성장동력분야의 미래시장 선점 및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공급기지화 촉진
- 미래 고도소비사회에 대응, 지식서비스산업 및 고령화·웰빙친화산업 육성

#### 4. 안정적인 에너지공급기반과 중장기 자주공급역량 확충

- 에너지 공급능력 강화로 지속성장과 국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 환경친화·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을 구축
-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

#### 5. 무역 1조달러 시대 조기진입 기반 강화

- 무역 1조달러 시대에 조기 진입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기업의 글로벌경영 활성화 여건을 조성
- 남북한간 산업·자원협력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 II. '06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 1 비전-정책목표-이행과제 체계

비전

**희망한국 : 세계 산업4강, 무역8강 실현**



#### 정책 여건

- ① 원화 강세와 아시아 인접국과의 경쟁격화
- ② 고유가 등 에너지시장 불확실성 증대
- ③ 대·중소기업 및 제조·서비스업간 양극화
- ④ 에너지기반시설 기피성향 및 시민참여요구 증대

#### 고객 니즈<sup>1)</sup>

- ① 글로벌경쟁력 제고, 기업투자활성화, 취약 부문 활력제고를 핵심과제로 지적
- ② 신기술·신산업육성, 부품소재 육성 및 인력/기술/지재권 확보를 강조
- ③ 국산에너지개발, 에너지다소비구조 개선, 에너지효율향상을 고유가 대책으로 지적

1) 산자부 PCRM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서베이('05년 11월, 총1,770명 응답) 결과

## 2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 목표 1 실물경제의 활성화 촉진

#### 정책 여건

-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경영패턴이 재무구조 개선으로 전환되어 설비투자의 증가추세 하락 및 일자리 창출 부진
  - \* 국민계정설비투자(연평균,%) : ('81~'90)12.0→('91~'96)11.1→('01~'04)0.1
  - \* 설비투자율(명목GDP 대비 설비투자액) : ('96)14.1% → ('04)9.2%
- 수출 호조, 완만한 내수 회복 등 경제전반의 활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심화
  - \* 대·중소기업간 생산증가율 격차 : ('04)9.5%p → ('05.1~10) 11.0%p
- 중소·영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 미흡
  - \* 소상공인BSI('05.10) : (체감경기) 80.8, (11월 예상) 91.6, (매출) 87.4, (자금) 84.8

#### 그간의 정책성과 및 추진방향

- ◇ '90년대 정부 주도의 투자촉진정책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
  - 특히, 참여정부 이후 규제 제로베이스 검토, 덩어리 규제 개선, 新樹種 육성정책 추진, 기업가정신 제고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투자 회복세 진입은 미흡
- ◇ 과거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양극화는 지속 심화
  - 참여정부 출범이후 대기업이 주도하는 대·중소상생협력정책으로 전환하여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과 정책 실효성 확보
  -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 중
- ◇ 향후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확산 및 영세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지원

**과제1**

**설비투자 확대 및 내수활성화 기반 확충**

◇ 최근 미약한 투자회복 불씨가 본격적인 투자활성화로 연결 되도록 총력지원시스템을 가동

\* 금년 투자증가율 전망치 : 재경부(6.5%), KDI(5.4%), LG研(6.8%)  
 ⇒ 목표치 7%대 이상 달성 (국민계정)

< 투자부진 원인 ('05.9월 KDI실태조사) >

- ① 내수침체, ② 중국경제의 부상, ③ 덩어리 규제, ④자금조달 애로, ⑤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미흡, ⑥ 보수적 경영행태 등

◇ 중장기 투자활성화방안 마련 및 일자리 창출 역점 지원

	'06	'07	'08
- 200대기업 설비투자액	50조원	53조원	60조원
- 기업호감도(CFI)	50.0	52.5	55.0

**1-1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5대 역점과제' 중점 추진**

① 투자애로해결 총력지원시스템 가동

○ 전경련, 대한상의, 업종단체 등과 투자애로 해결 hot-line을 구축하여 투자애로요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해결

\* '05년중 투자애로 해결사례 : LG그룹 파주공장 신증설 허용('05.11), 조선 업계 입지애로해결('05.11), 삼성전자 화성동탄부지 가격부담 완화('05.6)

○ 「민·관투자협의회」를 투자애로 해결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경제정책조정회의」와 상시 연계하는 지원시스템 강화

- 주요 투자프로젝트는 「전담요원(PM)」을 지정하여 밀착 지원

\* '05년 8건 지정(수도권내 국내대기업 공장 신증설 등 3건 기해결)

○ 중소기업체험단,\* 기업신문고 등에서 접수된 일반 애로사항은 「기업애로조정심의회」등을 통해 적극 해소

\* '05년중 467개 업체에 1,300여명 파견, 총 850건 애로중 600건(71%) 처리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과 협조하여 여러 부처가 관련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규제의 발굴·정비 노력 지속**
    - \* 총 54개 덩어리규제에 대해 정비방안('04~'05년 33개), 개선방안('06년 21개) 마련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종료시점('06.12)에 맞춰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 환경·노동·안전 등이 양호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필수규제만 존치하고 여타규제는 일괄 철폐하는 **“규제네거티브 방식” 도입**
    - \* '06년중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정
  - 과거 규제완화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성과평가분석 실시
- ② 설비투자 관련 세제·자금지원 강화
-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R&D 세제지원 실효성 강화
    - 매년 일몰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06년 공제율 7%)
    - R&D조세지원제도('06년말 일몰)는 수요자관점에서 개편·보완
  -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05.6)의 차질 없는 시행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구조를 개편하고 신용도에 따른 지원금리 차등화를 확대
    - 기업스스로 상환방식을 선택하는 **맞춤형 상환방식\*** 도입
      - \* ①체증식, ②매출액 변동식, ③현행(일정기간 거치후 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 부품·소재기술개발 이후 단계의 **사업화 촉진**과 부품·소재 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위한 **설비투자자금 지원 확대**
    - \* R&D자금 : ('05)1,600억→('06)1,800억, 설비자금 : ('05)600억→('06)732억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과 「부품·소재산업육성 설비투자 지원사업(산업기반자금)」의 연계 강화
      - \* 개발된 제품에 대해 설비투자를 위한 **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시설투자 수요의 **안정적 충족**을 위한 자금지원 강화
    - \* ('05)9.5조원→('06)11.1조원(産銀 9조, 구조개선 1.5조, 협동화 28백억, 산기반 31.5백억)

### ③ 중소기업 창업 및 구조조정 촉진

- 최저자본금제도(5천만원) 폐지 등 법인·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 하여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감하고 창업을 촉진
- 사업전환 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 등 지원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단축 등 절차 간소화 및 사업전환자금 지원 등 추진
- 기업구조조정조합(CRC)의 사모투자펀드(PEF) 참여허용으로 M&A를 통한 투자 활성화 (산업발전법 개정 : 국회 계류중)
  - \* 대기업/중소기업 설비투자 증가율(% , 산은) : ('04)45.9/3.8→('05)8.2/△2.3

### ④ 제도개선·인프라 확충 및 산업자원 관련 투자사업 확대

-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첨단 고부가가치업종의 입주를 촉진 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대상 확대
  - \* 대학·기업부설 연구소·창업보육센터 등 ('06.상반기중 산업집적활성화법시행령 개정)
- 소필지화 사업(광주첨단), 임대형 공장(시화) 및 APT형 공장(녹산)의 건립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지공급 확대
- 산하공기업 및 재래시장 개선 관련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 \* 산자부 산하공기업 설비투자(잠정) : ('05) 8조 506억원 → ('06) 10조 5,286억원
  - \*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 ('05) 1,268억원 → ('06) 1,478억원

### ⑤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여건 조성

- 원자재구매자금 지원 지속 확대
  - \* ('05년) 3,500억원 → ('06년) 3,535억원
- 주요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시행으로 수입부담 완화
  - \* 철광석·납사·산화니켈·철스크랩·합성수지 등 주요품목 포함
-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규모 확대
  - \* ('05) 25일 → ('06) 30일분

## 1-2 중장기적인 투자활성화방안 수립·추진

- ①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을 위한 업종별 투자로드맵 수립·지원
  - 「2015 산업발전비전과 전략」(‘05.9)에 맞춰 주요 업종별 특성에 맞는 투자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
    - 산업발전단계별 투자유망분야 및 설비투자·외국인투자·R&D·인력개발 투자 등을 종합 고려한 투자활성화방안 마련
    - 여유자금의 투자수익처 알선·연계기능 확충(투자 아이디어뱅크, 투자복덕방 등)
  - 생산활동 외에 디자인·마케팅·컨설팅 분야의 뉴비즈니스 및 시장진출 관련 전략적 투자여건 조성
    - \* 기계산업의 경우 최근 조립, 제작, 판매보다는 부품, 유지보수, 컨설팅, 교체서비스 등 서비스 영역에서 부가가치가 더 커지는 추세
  - 현행 대기업·제조업 위주의 투자동향 조사를 중소기업·비제조업까지 확대·정례화
    - ‘200대기업 설비투자 조사(산자부)’의 보완·신규조사 추진 등
    - \* ‘03년 이후 대기업과 제조업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과 비제조업의 투자가 부진
- ②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기업 「氣」 살리기 지속 추진
  - 「기업 氣살리기 5대 중점과제」\* 신규 보완 및 추진
    - \* ①기업사랑운동의 전국적 확산, ②훌륭한 기업·기업인 발굴·홍보, ③경제교육의 내실화, ④토론회·포럼 활성화, ⑤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
  - 투명·윤리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
    - CSR 지표 개발 및 사회보고 가이드라인 보급

### 1-3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전방위 지원

#### ① “이공계 기술인력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속 추진

- 이공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통한 취업연계 지원(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06년 2천여명)
- 이공계 석·박사와 중소기업간 매칭을 통한 취업촉진 및 중소기업 R&D 경쟁력 강화(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06년 500여명)

#### ②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사업('06년 4,500명)을 통해 청년층 중소기업 현장연수 및 취업 촉진
  - \* 청년 미취업자에게 5개월간 직무교육 실시후 중소기업으로 취업 알선
-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통해 인력유입 여건 조성
  -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06년 57천명), 생산현장 직무기피 요인 해소('06년 240억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특별 공급 규모 확대('05년 700호 → '06년 800호)

#### ③ 무역분야 청년층 취업기회 확대

-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역인력양성('06년 190명), **Trade Incubator** ('06년 300명) 사업 내실화
  - \* 산자부-무역협회-대학교-지역협력업체가 연계하여 추진
-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미취업자 대상,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06년 400명) 지속 추진

**과제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확산**

◇ '05년 점화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06년에는 전체 기업으로 확산시키고, '07~'08년에는 기업의 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제도적 틀 및 협력프로그램 확충

	'06	'07	'08
- 10대 그룹 상생경영투자	9,758억원	12,000억원	15,000억원

**2-1 상생협력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틀」 완비**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조속 완비
- 국무총리 소속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차원의 상생협력 이행점검체계 구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상생협력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 제시

② 상생협력의 유효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 구축

- 경제단체, 정부연구소, 학계 등의 공동연구를 통해 상생협력 이론을 정립하고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채택 유도
- 각계 전문가그룹이 참여하여 상생협력에 대한 무한토론을 펼치는 「온라인 상생협력포럼」 개설

### ③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역량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유망중소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유도
  -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에 합병목적의 중소기업의 인수 및 무역조정기업을 포함 (산업발전법 개정)
- 산업구조조정펀드(100억원)를 조성하여 CRC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동을 지원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시 필요한 자금 지원
  - \* 산업기반자금 중 대·중소기업 협력사업('06년 500억원)

### ④ 시스템적인 상생협력이행 점검체계 확보

- 대·중소기업간 협력실태 및 정책추진성과에 대한 상시적인 조사·분석 및 평가체계 구축
  - 상생협력 수준을 계량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조사, 공표
- 정부조달 우대, 하도급조사 면제 등 상생협력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인센티브 지원
- 산자부장관 주재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회의」를 정례화하여 30대그룹으로 상생협력 확산 유도
  - 현업부서 실적평가시스템 개편 유도, 실무자 포상확대 등을 통하여 현업부서의 상생인식을 제고

## 2-2 상생협력프로그램의 다원화

- ① 성과공유제를 30대그룹으로 확산시키고 전자·IT 등 업종별 성과공유표준계약서 개발
- ②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 대·중소기업 기술협력 강화
  - \* 대·중소기업 부품소재공동기술개발 : ('05) 892억원 → ('06) 1,220억원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05) 76개업체, 100억원 → ('06) 120개업체, 160억원
- ③ 대기업 전문인력 중소기업 파견, 대기업 퇴직인력 중소기업 경영자문 등 대·중소기업간 인력교류 활성화
  - \* 전문인력 파견시 인건비 지원 : 고용보험기금, 월 120만원
  - \* 퇴직인력의 중기 경영자문 : ('05) 102개사 → ('06) 200개사
- ④ 중소기업협력펀드 조성,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등 자금 및 마케팅협력도 확대
  - \* 수급기업투자펀드 : ('05) 2,340억원 → ('06) 2,700억원
- ⑤ 업종별 상생협력 및異업종간 상생협력 강화

유통	· 지역별 대형·중소 유통업체간 상생협력협의체 가동, 유통분야 공정거래관행 정착
철강	· 중소조선업계에 조선용후판 59만톤(56%확대) 공급
합성수지	· 중소 플라스틱업계를 위한 '가격예시제' 도입 추진
조선	· LNG선 핵심부품 공동개발을 위한 부품소재연구회 발족
기계	· 중견-중소기업간, 대기업-협력업체간 온라인 설계·생산 등 협업시스템(e-Manufacturing) 신규 구축

**과제3**

**전통 중소기업형 업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봉제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다른 중소기업형 업종 신규 지원

	'06	'07	'08
- 선도봉제업체 육성(수)	10	70	100

◇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

	'06	'07	'08
- 선진경영기법교육(명)	2,500	2,600	2,700

**3-1 중소 제조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① 영세 봉제업체의 시장대응력 강화

\* “영세 봉제업지원대책(‘05.5월)” 후속조치로 추진하여 중기특위를 통해 추진상황 점검

- 봉제업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봉제업체DB 기반구축, 일감 소개 및 인력 알선사업 전개

\* 동대문봉제협회 등 업종단체와 공조체제 구축 및 인력양성사업과 연계 추진

- 영세봉제업체가 고급화·다양화되는 의류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봉제클러스터 조성

- 서울·성남·대구 등 봉제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화사업장 조성 및 고부가가치 의류제작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패션트렌드를 반영한 시제품 제작지원과 함께 기능·소재 특성에 맞는 최적 봉제기법 지도 및 상품화 지원

\*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 및 대구 섬유산업진흥사업을 통해 봉제업계 지원

② 스포츠·레저용품, 안경 등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 스포츠·레저용품 : 협업기반 구축 등 경영혁신 지원
  - 영세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지원 확대
  - \* 산기반자금中 생활·레저산업 : ('05) 90억원 → ('06) 150억원이상
- 골프용품 : 기업간 협업기반 구축을 통해 유통·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외시장 판로 개척
  - \* 골프용품 원부자재의 공동DB구축 및 기업간 전자거래기반 구축
- 안경 : 안경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브랜드화, 고부가가치 패션제품화, 품질고급화 등 체계적 지원('06년 15억원)
- 가구 : 제품기획, 디자인, 소재·공정개발 지원을 위한 가구 산업연구센터 설립추진(금년내 입지 및 운영방안 검토)
- 공예·제화 : 기능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업계·대학·지원 기관(신발산업진흥센터 등)간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동운영
- 귀금속·보석 : 영세가공업체 밀집지역(대구·익산)을 중심으로 가공·판매 시설집적화 등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③ 중소 제조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촉진 지원

- 개도국의 부상에 따라 기술혁신에 의한 제품차별화가 시급하나 기술집약도가 낮아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에서 열위
  - \* 생활용품 수출 : ('94) 39억\$ → ('97) 41억\$ → ('00) 38억\$ → ('04) 31억\$
  - \* 생활용품 : 레저·스포츠용품, 안경, 가구, 귀금속·보석, 문구·완구, 우산 등
-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시장트렌드에 따라 단기에 IT·BT·NT와 접목을 통해 신제품 개발을 지원
  - \* IT + 완구 : 교육용 장난감, BT + 주방용품 : Bio-Ceramic 그릇, NT + 직물 : 공기청정용 커튼/은나노 직물 등

## 3-2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① 중소기업의 협업화·조직화에 의한 시너지 효과 고양
- 물류비절감을 위한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확대
    - 유통과정 단축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물류네트워크 확충 추진('03~'08)
    - \* 추진현황 : '03(3개 24억) → '04(3개 36억) → '05(5개 78억) → '06(4개 69억)
  - 프랜차이즈산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건전성 제고
    - 우수 프랜차이즈 성공사례 발굴·전파, 글로벌마켓 진출 적극 지원 및 사회적 인식제고
- ②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
- 「중소기업종합발전방안」 수립·추진
    - 종합적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투자증대 유도
  - 중소기업의 유통전문인력 지원시스템 구축
    - 유통관리사 등 전문인력 실태조사 추진 및 인력 DB 구축
    - 중소기업에게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연수사업 추진
- ③ 상권중심지 활성화사업<sup>2)</sup> 추진
- 선진사례 분석 및 한국 실정에 부합하는 활성화 방안 모색
  - 사업추진 매뉴얼 작성 및 전문인력양성 계획 수립
  - 「상권중심지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2) 상권중심지 활성화사업 : 관공서의 외곽이전, 교외신시가지 건설등으로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구 도심권에 문화·관광·지역특산물 등과 연계한 복합문화상권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자하는 사업

## 목표 2

## 혁신형 산업 생태계의 구축

### 정책여건

- 기술의 융·복합화 등 급속한 기술환경의 변화 속에 혁신형 생태계 구축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
- 지적권 및 국제표준의 중요성 대두 등 기술경쟁 양상의 변화
- 산업클러스터 등 지역기반 혁신시스템의 중요성 증가

### 그간의 정책성과 및 추진방향

- ◇ '90년대 이후 기술혁신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인식, R&D 투자 확대 및 H/W적인 혁신기반 확충
  - \* R&D 지원규모 : ('86) 300억원 → ('02) 1조원 수준
  - \* '95년 이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신설, 혁신인프라 확충 추진
- ◇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국가 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세계적 기술력 확보 및 혁신주도형 성장 기반을 구축
  - \* 산자부 R&D 투자 : '02년 1조원 → '06년 2조원 수준
  - \* 국제표준제안(건수) : ('03)63 → ('04)106 → ('05)118
- 그러나, 아직 R&D 투자의 성과창출 및 중소기업·지방 등 취약부문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는 미흡
- ◇ 향후 R&D 투자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식재산·표준화, 혁신창출형 인력양성·활용체계 구축 및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화 등을 통해 혁신주도형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

**과제4**

**기술혁신 선순환구조 구축**

◇ R&D 지원시스템의 개편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06	'07	'08
- 기술개발 사업화 성공률	35%	37%	40%
- 중소기업 지원비율	60%	62%	65%

◇ 효과적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 구축

	'06	'07	'08
- 산업기술개발과제의 특허출원건수	490건	500건	510건
-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민간이전률	20%	21%	23%

**4-1 R&D 예산(2조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스템 개편**

①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제양극화 해소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R&D 집중 지원

- 「기술생산형 산업\*」 및 BIT, NIT, BNT<sup>3)</sup> 등 신기술 융합산업을 중점 지원하여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극대화

\* 기술생산형산업 : 생산기반기술, 부품·소재, 차세대 성장동력 등 자체 기술개발성과의 타 산업에의 확산효과가 큰 산업

- 중점지원 대상별로 산업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통합·재편하는 방안 검토·추진

- 중소·중견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

\* 중소기업 지원 비율 : ('04) 57% → ('06) 60%

\* 비수도권 지원 비율 : ('04) 45% → ('06) 50%

3) BIT : BT(생명공학기술)와 IT(정보통신기술)의 융합기술, NIT : NT(나노기술)와 IT(정보통신기술)의 융합기술  
 BNT : BT(생명공학기술)와 NT(나노기술)의 융합기술

## ② 목표지향적인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 산업기술로드맵에 따른 R&D 지원으로 「기술개발→사업화→지적재산권 확보→표준화」 등 가치사슬 전 단계를 일관 추진
  - \* 5대 주력기간·5대 첨단·5대 신기술융합 산업(Triple 5)을 대상으로 상반기중 산업별 기술로드맵을 수립
- 차세대성장동력 육성, 부품·소재 개발 등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수단을 패키지화**하여 집중 육성
  - \* R&D·기반조성·인력양성·디자인·표준 등 관련시책을 목표별로 상호 연계 지원하는 전략적 협업체계(Initiative) 구축
- **네트워크형 R&D 수행체제**를 구축하여 기술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
  - \* 수급기업간(부품소재-완제품), 이업종기업간(IT·BT·NT),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과제를 우선 지원

## ③ 기술적 성과에서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R&D 평가

- R&D 과제의 「기획 → 선정 → 종료 → 사업화」 단계별로 **경제성 분석·평가** 실시
  - \* 개발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수출·고용효과, 사업화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
- 개발된 기술의 구체적인 성과활용 현황을 조사·분석·평가하는 「**성과활용평가시스템**」 가동
  - \* R&D 종료후 2년간 사업화 추진현황 및 수출, 고용창출 등 실질적인 기술 개발 성과를 평가
- **R&D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
  - \* 프로젝트 단위가 아닌 프로그램 단위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기법 개발

## 4-2 기술사업화를 통한 新사업 진출 촉진



### ①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실적저조시 지정 취소
  - \* 지정요건: 현행 3인 이상 → 변호사 등 3인 포함 총 10인 이상
- 기술평가경쟁을 도입하고 시장에서 평가기관의 능력 검증
  - \* R&D 경제성평가 등 정부사업 추진시 “기술평가기관”간 경쟁 유도
- 기술평가의 표준화·네트워크화를 통해 신뢰성 확보
  - \* 표준화된 평가모형을 통해 평가기관간 편차를 최소화하고 각 기관에 분산된 평가정보를 공유하여 활용 (기술평가유통정보시스템 구축, '06.2)

### ②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공급 확대

- 초기단계의 기술사업화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 기술유동화증권, R&D 프로젝트금융 등 기술의 미래현금 흐름에 기초한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
  - \* '06년 시범사업 후 '07년 이후 본격 시행 (기술이전촉진법에 근거 마련)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확대, 기술자산 신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의 자산화 촉진
- ③ R&D 혁신성과의 후속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개발기술사업화 프로그램(R&BD<sup>4)</sup>) 지원 확대('05: 16억원 → '06: 51억원)
  - 기술개량사업(P&D : Purchase and Development)의 신규 도입
    - 대학 등의 보유기술을 구매한 후 상품화하여 수요기업 등에 재판매
    - '06년 한국기술거래소 주관으로 5개 프로젝트 시범 실시
- ④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 · 거래 촉진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 사업화 전담조직 체계화
    - \* 단위조직(대학 · 연구소 TLO<sup>5)</sup>) → 중간조직(테크노파크) → 총괄조직(기술거래소)
  - 다수/소액살포식에서 소수/유망집중식으로 지원방식 전환
    - \* '06년 20개 내외의 유망한 선도 TLO를 선정하여 지원 (80억원)
- ⑤ 기술이전 · 사업화에 관한 기반 확충
  - 기술거래 중심의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확대 개편
    - \* 기술유동화사업, 기술현물출자 특례, 기술담보사업 신설, 기술평가비용의 지원, 기술 평가정보 공유 등 기술금융 및 기술평가관련 근거규정 마련
  - 기술사업화지표의 개발, 통계 등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가 기술 사업화의 수준을 평가하고, 정책수립에 활용

4)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 기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보유자와 경영지원기관의 합작법인 설립시 사업화 자금 지원

5) TLO(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 기술이전 전담조직)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해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전문조직으로서 보유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전담

### 4-3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창출 · 활용 · 보호체계 구축

#### ① R&D 전주기에 걸쳐 전략적 지재산 확보노력 전개

- R&D과제 기획시 특허동향분석을 통해 중복투자 방지 및 특허 공백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투자 유도

\* 특허동향분석 지원계획('06년) : 중장기과제 94개

- 특허경비 지원('06예산 : 30억원) 등을 통해 개발기술의 원활한 권리화 지원

#### ② 산 · 학 · 연이 확보한 지재산의 활용 활성화

- 대기업 · 대학 · 연구소 등이 보유하는 휴면특허를 조사하여 국가기술은행에 「휴면특허DB」를 등록

- 기술이전보증, 특허기술사업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휴면특허 사업화 지원

-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등 전략적 R&D사업 성과물에 대해 특허풀<sup>6)</sup>을 구성, 성과물의 신속한 사업화 유도

#### ③ 실효성 있는 해외 지재산 보호활동 전개

- 「특허지원센터(한국전자산업진흥회)」의 국제 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

\* 특허 포트폴리오 조사 · 분석, 특허분쟁 정보시스템 구축 등

- 「駐中 지식재산권전담조직(IP-China)」을 통해 중국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지재산분쟁 대응 지원 및 홍보 강화

#### ④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강화 및 해외유출 예방

-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산업기술 보호지침 제정 및 산업보안협회 구성

6) 특허풀 : 다수의 특허소유자가 특허업무 대행기관에 보유특허권을 공동출자하여 위탁 관리

#### 4-4 민간의 기술혁신 친화적 환경 조성

##### ① 민간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계획 및 실적을 주기적으로 조사·공표하는 「R&D Score Board」 제도 도입 검토
- 중소기업 등 R&D 기획능력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과 컨설팅의 연계 지원 ('06년 시범사업 운영)
- 기반구축사업으로 구축된 장비의 기업 활용실적 및 만족도 평가체계 확립
- \* 연구장비 DB 구축 및 관리시스템 혁신을 통해 기업의 연구장비 활용 편의 제고

##### ② 기술친화적 문화형성을 통한 산업기술 혁신역량 저변 확대

- 「산업기술의 달」을 지정하여 범국민적인 산업기술 붐 조성
- \* 시민·학생·주부 등 대상의 참여형 산업기술체험 프로그램 발굴
- 「기술문화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및 소비자 전문집단 (Prosumer)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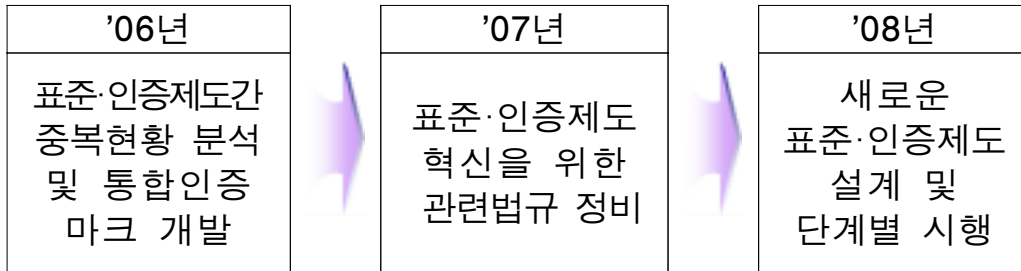
##### ③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

- 산업계와 정부의 기술개발전략협의체(Technology Round Table)를 정례 운영
- \*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산업기술정책에 대한 업계의 수요를 정부에 전달하는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고 「30대 기업 CTO 간담회」 개최 검토
- 산업계가 중심이 된 R&D 중간조직(연구회, 학회, 업종단체 등) 활성화를 통한 혁신창출 기반 강화

**과제5**

**국가표준·인증 및 제품안전관리 체제의 혁신**

◇ 국가표준·인증체제의 선진화



◇ 국제표준 주도국으로 도약

구 분	'06	'07	'08
- 국제표준 제안건수	150종	180종	210종
- 국제간사 수입	30명	35명	40명
- 국제회의 유치	연20회	연25회	연30회

◇ 제품 안전관리체제의 선진화

	'06	'07	'08
- 불법·불량제품 시중유통 근절을 위한 시판품 조사대상 확대	60종	70종	90종

**5-1 국가 표준체계의 선진화**

① 국가 표준·인증체제의 통합·정비

- 제도간 중복·모순을 방지하고, 범국가적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기준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비

**표준제도 정비 방향**

- ◇ 국가표준시스템을 국가표준 및 기술기준 체제로 단순화
  - 표준업무 소관 부서는 현행대로 표준·기술기준 개발업무를 담당하되 「국가적합성평가위원회(가칭)」가 부여하는 단일번호체제로 고시
  - \* 위원회는 번호부여에 앞서 표준·기술기준간 상호 중복문제 해소

**인증제도 정비 방향**

- < 법정 강제인증<sup>7)</sup> > 모듈화 및 단일통합 인증마크 부여(9개부처 32개 인증대상)
  - 분야별·품목별 요건에 따른 모듈식(CE마크방식) 심사체제 도입
  - 단일 국가대표 인증마크 도입
- < 법정 임의인증<sup>8)</sup> > 품목별 중복해소 및 상호인정 확대(10개부처 45개 인증대상)
  - 인증간 중복되는 품목의 인증기준은 통합 또는 분리
  - 법정 임의인증 제품의 법정 강제인증 면제 확대
- < 민간 임의인증제도<sup>9)</sup> >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체제 신설(60여개 인증대상)
  - 소비자, 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등록제 도입
  - 법정 강제·임의인증과 중복되는 품목은 단계적 조정

**② 정부와 민간의 표준관련 추진체계 혁신**

- 국가표준심의회 산하 위원회의 활동목표 설정 및 실적 점검
  - 업무가 중복되거나 활동이 미흡한 정부위원회는 과감히 정비
- 표준화포럼 등 민간 표준위원회의 활성화를 지원, 선진국형 상향식 표준제정시스템 구축

7) 법정강제인증 : 국민안전등을 위해 개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공산품안전인증 등)  
 8) 법정임의인증 :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등 특정정책목적에 따라 법에 의해 시행하는 인증(환경마크 등)  
 9) 민간임의인증 : 법적근거 없이 민간에서 자율시행(Q마크 등)

## 5-2 표준기술 하부구조의 강화

### ① 표준물질<sup>10)</sup> 개발 확대 및 보급체계 확립

- 신제품·신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산업용 표준물질 개발 확대
  - \* 반도체/디스플레이, 신에너지,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산업, 나노/바이오 등 20종
- “국제표준물질 생산기관 인정제도” 확립 및 COMAR<sup>11)</sup>와 연계된 “국제 표준물질 보급망” 구축
  - \* ('06) COMAR 가입, ('08) “국제표준물질 보급망” 가동 추진
- 표준물질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APLAC-MRA)<sup>12)</sup> 가입
  - \* ('06) MRA 체제 구축, ('08) “APLAC 동등성 평가” 수검

### ② 참조표준<sup>13)</sup> 제정 및 개발시스템 구축

- 참조표준 평가·등록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참조표준센터” 설치
  - \* 분야별 전문위원회(물리화학, 생명과학 등 9개) 구성·운영
-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운영요령 제정(산자부고시)

### ③ 법정 계량<sup>14)</sup>제도의 선진화

-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자기적합성선언제도 도입
  - 생산자 스스로 허용오차를 관리토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 강화
  - \* 제과류, 주류, 세제류 등 실량 관리가 필요한 생활필수품 28종 대상
- 법정계량기 품목 정비 및 관리기준 개선
  - 음주측정기, 속도측정기 등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유발하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계량기를 대상으로 품목확대 검토
  - \* '06년중 계량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0)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s : RM) : 특성치가 충분히 확정되어 있는 균질한 소재 또는 물질

11) COMAR : International Database for Certified Reference Material(국제인증표준물질 데이터베이스)

12) APLAC: 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아태시험소인정기구 협의체)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다자간상호인정협정)

13) 참조표준 :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로서 물리 화학적 상수, 공인된 물성값, 공인된 과학 기술적 통계 등을 통칭 (예: 국민 인체치수조사 데이터)

14) 법정계량: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

### 5-3 민간표준 활성화

#### ① 민간표준의 전략적 육성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제도 도입
  - 표준화 포럼, 신성장동력 표준화 거점기관 및 표준화 전문기관 등을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표준 초안 작성 의뢰
- 산업체, 포럼, 기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표준 지원사무국 (우수 민간표준을 선별 국가표준 제안)”을 상설기구로 확대 개편
-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표준의 지위 변경 원활화
  - \*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의 상호 전환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② 생산자단체의 표준제정활동 촉진

- “민간연구소 표준화 협의체” 구성 ('06년 100개 연구기관 참여)
- 산업계의 경쟁적 단체표준개발 촉진 ('06년중 산업표준화법 개정)

#### ③ 표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시스템 활성화

- 대학에 정규학과(부) 개설 ('06년 극동대학)
- 기업 표준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및 인사관리 우대
  - \* 기초, 입문, 심화과정 등 단계별 교육을 실시('06년 500명)

#### ④ 표준화 인식 제고, 홍보·교육 확대

- 「국가표준정보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 인터넷상에서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제안이 가능토록 조치
- 중등과정 기술과목에 표준화내용을 반영
  - \* ('06년) 교재 개편 및 교사 교육 ('07년 중학교 교과, '08년 고교 교과 반영)
- 대학 표준화 강좌의 활성화 ('05년 35개 대학 → '06년 50개 대학)

## 5-4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 ① 公的 국제표준화<sup>15)</sup> 주도국으로 도약
  - ISO/IEC 국제표준에 우리기술 반영 ('05년 118건 → '06년 150건)
  -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강화
    - \* 연 30회 이상의 ISO·IEC TC/SC회의 유치
    - \* ISO·IEC의 4대 정책이사회 중 3개 이상 위원회 참여
    - \* ISO·IEC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진출 : ('05) 24명 → ('06) 30명
- ② 事實上 국제표준화<sup>16)</sup> 지원체계 구축
  -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 \* 국제적 사실상표준 회의 개최 : ('05) 0회 → ('06) 연10회
    - \* 설명회·세미나·교육 등 : ('05) 0회 → ('06) 연10회
  - 주요 국제표준단체에 대응한 국내 「**Mirror 포럼**<sup>17)</sup>」 구성·지원
- ③ 적합성평가 분야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
  - 국내 적합성평가기관의 시험평가능력 확충
    - \* KOLAS 국제공인기관<sup>18)</sup> 확대 : ('05)485기관 → ('06)520기관
    - \* 고정밀측정 등 국내시험가능 국제규격 확대 : (05)669종 → ('06)750종
  - MRA, FTA 등을 통한 적합성평가 결과의 국제상호인정 확산
    - \* 제품인정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가입 및 KOLAS 검사 분야 가입 신청
- ④ 외국의 기술규제에 따른 국내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 무역상기술장벽(TBT) 신고 센터(신문고) 설치
    - \* On-line상에서 애로상담으로부터 문제해결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 국내 TBT 통합정보망 구축(공산품, 식품및 위생용품, 농수산물)
    - \* 기술장벽 대응의 내실화를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15) 공적표준 : KS, ISO, IEC 등 공식 표준화기관에서 제정된 표준 (유럽중심)

16) 사실상표준 : Windows 등 시장에서 사실상 결정된 표준. 본 계획에서의 사실상 표준은 기업·개인 단위의 회원으로 운영되는 포럼·컨소시엄 등에서 제정된 표준을 포함 (미국중심)

17) Mirror 포럼: 특정 국제표준단체에 대한 대응활동을 전담하는 국내 표준포럼 (1대 1로 대응된다는 의미에서국제적으로 Shadow Forum 또는 Mirror Forum 등의 용어로 지칭)

18) KOLAS 국제공인기관: 국제기준에 따라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 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정기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 5-5 입체적인 제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① 사전예방형 제품안전망 구축

#### ○ 온라인 제품안전 정보망 구축

- 통관자료 분석 및 위해정보의 실시간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 \* 불법·불량제품 신고시스템, 관세청 통관자료시스템, 위해정보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 \* 기술표준원-관세청-시·도-소비자-소비자보호원-생산자 실시간 연결

#### ○ 시민 안전모니터링단 운영

- 집중 안전관리 대상품목 선정 및 사업자와 자율안전협약 체결
  - \* 사업자의 자율안전협약 준수여부 모니터링 실시 및 정부에 피드백

#### ○ 사후관리계획 사전예고제 시행

- 연간 사후관리계획 사전 공표로 불법·불량제품 유통 사전 예방
  - \* 세관장 확인 어린이용 제품 등 사고 다발품목, 위해 우려품목 중점 추진

### ② 危害정도별 안전관리방법의 차별화 도입

기 존	변 경	비 고
안전검사(의무) 제품검사	안전인증(의무) 제품검사+공장심사	○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품목 - 어린이용 카시트, 안전모 등 20개
안전검정(임의)	자율안전확인(임의+의무) 자율생산검사, 부적합시 제재	○ 신체에 안전위해 우려 품목 - 완구, 유모차, 기저귀 등 60개
품질표시(임의)	안전·품질표시(의무)	○ 사용자 주의로 안전성 확보가능 품목 - 연필깎기, 공책 등 20개
-	법정관리 외 제품 신속조치(신설)	○ 위해제품 발견, 피해 확산 우려시

### ③ 안전기준의 전면 재정비

- 웰빙 제품 등 신제품의 안전기준 제정·보급
- 승강기 안전기준에 EU표준(EN) 등 선진기준 도입 추진
- 국내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기준의 개정

**과제6**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산업인력의 양성**

◇ 산업별·지역별 자생적 인력양성체제 구축

	'06	'07	'08
- 산업기술인력 부족율 ('04 : 6.77%)	6.5%	6.3%	6%
-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5점 척도, '04 : 4.29)	4.31	4.33	4.4

◇ 기술인력의 양성·수급채널 다각화

	'06	'07	'08
- 해외기술인력 유치실적(골드카드)	200명	300명	400명
- 퇴직 인력 전직지원	1,500명	2,000명	3,000명

**6-1 산업계 및 지역의 산업인력 양성기능 활성화**

○ 「산업×지역 Matrix」의 결합을 통해 산업기술인력정책의 종합화 기반을 구축

\*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요인인 산업과 지역을 종합적으로 반영 → 수요지향적 산업기술인력 정책 추진

## ①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기반 구축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up>19)</sup>(Sector Council)의 역할·기능 활성화
  - 공학교육인증평가 참여, 인적자원 대표자회의\*(Skills Convention) 개최 등 산·학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장 마련
    - \* Sector Council 성과발표, Best Practice 시상, 관련 학회와의 공동 학술대회·채용박람회 개최 등
  - 협의체 주관 업종별 인력수급 실태조사, 인력정책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인력정책 및 교육시스템의 현장수요 반영 강화
  -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관·기업간의 연계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채용시스템 변화 촉진
- 대기업-중소기업간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내대학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차원의 인적자원개발투자 촉진

## ② 지역기반 인력정책의 새로운 틀 마련

- 국내외 지역기반 인력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별 인력정책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 시범지역(구미혁신클러스터)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인력수급대책 제시(지역별 인력정책 클리닉 사업)
    - \* 지역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체계, 여성·해외·고령인력 활용정도 등 지역별로 특화된 인적자원개발 주요 이슈 및 정책과제 발굴
- 추진체계 및 기초 통계시스템 정비 등 지역기반 인력정책 수립시스템 개편 추진

19) 인적자원개발협의체 : 주요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회, 전문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 현재 기계, 전자, e-biz, 자동차, 반도체 등 10개 협의체가 구성·운영중

## 6-2 기술인력 양성·수급채널 다각화

### ① 여성 기술인력 활용 촉진

- 여성 공학교육 선도학교 시범운영 등을 통한 교육 인프라 구축
  - \* 여성 공대생 실험실습실 지원(Ladies Learning Factory) 및 특화 교육과정 개발 추진
- 우수 여성인력 이공계 진출 촉진 및 역량제고 지원사업 추진
  - \* 「Watch 21」 (여 공대생, 여고생 멘토링 사업), 재직여성 리더십 개발교육지원, 성공 엔지니어 발굴·포상 및 책자발간

### ②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기술인력 유치 확대

- 「Study Korea」 (교육부)와 「Gold Card」 (산자부) 연계를 통해 국내 해외유학생 DB와 구인DB간 공유를 통한 취업지원 추진
- 국제 인력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우수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해외 채용박람회 개최('06년중 '한-베트남', '한-인도' 예정)

### ③ 고령노동인력의 재교육 등 전직지원(Outplacement) 활성화

- 개인 실업자 전직지원에서 대-중소기업 인력교류 차원으로 사업을 확대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과 연계하여 은퇴한 대기업의 고급인력을 DB화하여 중소기업에 취업 연계
- 현행 수도권 위주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지방으로 확산
  - \* 현재 아웃플레이스먼트센터('02~'06, 34억원 지원)를 운영중이나 지리적 위치상 수도권 위주로 지원중

### 6-3 산업계의 수요에 부합되도록 공학교육 혁신

#### ① 공학교육인증제도 확산 및 정착

-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 공학인력을 양성
  - '10년까지 4년제 공과대학의 50% 수준까지 공학교육인증을 확대
  - \* '06년에는 30개 대학, 129개 프로그램을 인증 평가할 계획 ('01-'05년까지 22개 대학, 130개 프로그램 인증 완료)
- '09년 Washington Accord<sup>20)</sup> 정회원 가입을 위한 로드맵 구축
  - 공학교육인증시 산업계 현장수요 반영 강화, 인증대학의 정부 연구과제 선정시 우대 등
    - \* 공학교육인증평가단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 산업계 인사 비중 확대(현행 15%에서 30%로 제고)
  - 공학교육 인증 및 WA 정회원 가입 필요성에 대한 산·관·학 공감대 확산(1/4분기중 공학교육혁신 세미나 개최)

#### ②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공학교육체제 개편 유도

- 창의적 공학교육설계(Capstone-design<sup>21)</sup>)를 통한 다학제간 교육모델 구축, 이공계 졸업생의 연구소·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등
- 융합기술대학원, 기술경영대학원(MOT : Management of Technology) 운영을 통해 다학제 연구기반 구축
  - 첨단기술융합과정, 기술전략(R&D, 기술금융)·기술관리과정(지재권 관리, 기술가치평가)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경비 지원

20) 국제 공학교육인증 협의체로 국가간 공학교육수준을 상호 인증. '05년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9개 국가가 정회원으로 가입 (우리나라는 '05.6월 준회원으로 가입)

21) Capstone-design : 공학계열의 학생이 졸업논문 대신 학부과정동안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토록 하는 종합설계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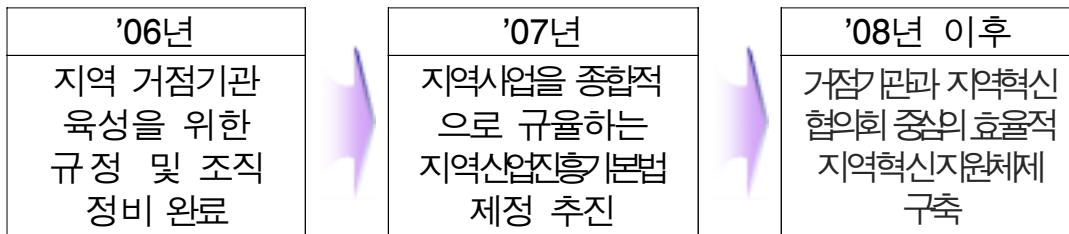
**과제7**

**지역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 지역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투자 확대기반 마련

	'06	'07	'08
- 지역총생산(GRDP)	451조	473조	497조
- 지역수출액	2,070억불	2,280억불	2,500억불
- 지역기업수(광업·제조업 기업수)	56,300개	58,900개	61,800개
- 지역의 유형자산투자 (건설·설비투자 증가분)	36.5조	41.3조	46.8조

◇ 지역사업 추진체계 개편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



**7-1 지역전략산업의 허브(Hub)화를 통한 혁신클러스터 구축**

① 지역산업로드맵을 통해 지역별 스타산업 육성

- 지역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별 특성화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 지역산업로드맵 수립
- 광역지자체 주도하에 지역산업로드맵에 따라 既지원중인 전략산업을 중핵산업으로 고도화 추진
  - 4개지역 : 既구축 인프라를 활용, 기술개발 등 S/W사업 중점 지원 (부산, 대구, 광주, 경남: '06년 국비 2,006억원)
  - 9개지역 : '07년 사업종료에 대비, 인프라사업 마무리 및 2단계 지원 계획 수립·추진 ('06년 국비 1,734억원)
  - 지역혁신기반구축 : 지역전략산업 신규지원('06년 국비 525억원)

지역	'06 국비(억원)	핵심 산업	주요 지원내용
부산	438	기계부품소재	기계부품소재 분야 R&D
대구	480	나노 등 新산업	나노부품실용화센터
광주	515	光	光산업 분야 R&D
경남	573	기계	기계산업 분야 R&D
대전·충남북	732	전자·생물	충북 반도체부품센터
전남북·제주	454	자동차·기계	전북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울산·경북·강원	548	자동차·전자	울산 오토밸리

- 기초지자체 주도하의 특화자원(예: 진주 실크, 담양 대나무)의 개발·상품화로 틈새시장 공략 및 지역산업기반을 창출 지원
  - \* 지역혁신특성화사업: '06년 국비 708억원

②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06년 국비 462억원)의 성과 확산

- 산학협력사업 확대 등 미니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R&D 역량 강화
- 마케팅·기술사업화 등 기업지원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여타 산업단지 역량을 분석하여 시범단지 추가지정 검토

시범단지	산업분야	'06 중점 추진전략
창원	기계	산학연 보유 기계·부품소재 기술의 상업화지원
구미	전자	IT 기술단지 조성 및 관련 연구소 유치
울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의 모듈화 지원
반월·시화	부품소재	중소기업 중심 업종별 미니클러스터 확대 운영
광주	光	LED 밸리 조성 및 관련 기업 유치
원주	의료기기	의료기기 분야 선도기업 유치
군산	기계·자동차	군장단지 소필지화를 통한 기업투자 유치

③ 개방형 지역사업 추진으로 국내외 혁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 지역사업과 외국인투자를 연계하고, 지역사업의 국제화 추진
  - \* 지역사업 추진시 외국인투자, 해외 기술협력 등을 우대
- 지역주도 R&D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의 자체 기획력 향상과 산학연 연계를 촉진
  - \* 지방기술혁신(R&D 클러스터, 지자체 연구소, 지자체 주도 R&D)  
: '05년 국비 305억원 → '06 국비 335억원

## 7-2 지역사업 추진체계 개편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

- ① 테크노파크(산업기술단지)를 지역거점기관으로 육성하여 지역 혁신사업 추진체계를 단순화·체계화
  - 지역사업으로 구축된 특화센터·전략산업기획단·클러스터추진단 등 기타 인프라를 거점기관 중심으로 통합 또는 연계운영
    - 거점기관은 마케팅 등 일반적 기업지원서비스 기능에, 기타 인프라는 기술분야별 전문적 기업지원에 특화하여 기능 차별화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하여 테크노파크가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아울러 지역사업 추진체계, 지역산업진흥 및 산업집적활성화 지원 등을 포괄하는 「지역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 추진
- ②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지역사업 기획·평가체계 구축
  - 지역의 혁신역량 및 전략산업 발전방향을 반영하여 작성된 지역산업기술지도에 따른 사업기획 추진
    - \* 주요 지역사업 기술개발 과제를 지역산업기술지도에 의거 Top-Down 방식으로 선정
  - 분산적으로 추진되던 지역사업 평가기능을 거점기관으로 일원화
- ③ 거점기관장의 권한강화를 통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 거점기관장에게 실질적 법인의 대표권 및 운영자율권을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부여하는 평가시스템 구축

### 7-3 지역투자 확대 기반 구축

#### ①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로 지방의 자립경제 기반 구축

- 지방이전 부지의 사전알선 및 정보제공,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절차 대행, 사후정착 지원 등 종합서비스 확대
  - \* 이전대상 기업 발굴·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지자체의 조기 매칭재원 마련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추진
  - \* 기업 지방이전 지침 제정을 통해 지방비 기확보한 지자체에 국비보조 우선권 부여

#### ② 자유무역지역의 내실화를 통해 지역투자환경 개선

- 신규(동해, 울춘) 및 기존(대불) 자유무역지역의 차질 없는 조성 추진
  - \* 신규 자유무역지역 실시설계 시행 및 대불 자유무역지역 조성 지속추진
- 지자체·KOTRA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투자환경 홍보

#### ③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기업입지환경 개선

- 실수요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유휴 산업용지에 대한 업종별 배치규정의 완화
  - \* '06년 상반기중 「산업집적활성화법시행령」 개정
-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후화(준공된지 20년 이상)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본격 추진
  - \* 대상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구조고도화 기본계획(로드맵) 및 서울디지털단지 구조고도화 시행계획 수립
- 「공장설립지원센터」 서비스 확대를 통한 신속한 공장설립 지원 및 초기 투자비용 절감
  - \* 공장설립승인 무료대행 : ('05) 1,443건 → ('06) 1,500건

## 목표 3 초일류 성장산업군의 육성

### 정책여건

- 주력기간산업은 그동안 수출과 경제성장을 주도
  - \* 8대 주력산업 : 전체수출의 81%('05년), 성장기여율 66%('04년)
- 그러나 핵심원천기술의 대외의존, 중국변수 등 위협요인으로 주력부문의 10년후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
  - \* 소수품목 및 특정지역 의존, 서비스산업과의 연계성 취약 등 문제점 상존

### 그간의 정책성과 및 추진방향

- ◇ IMF이후 주력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업계의 경쟁력 향상 노력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
  - \* 주력부문의 생산성향상이 수출증가에 미치는 영향 : (91~97) 34% → (98~04) 49%
  - \* 반도체·전자(컨버전스, 디자인 혁신), 자동차(품질혁신), 철강·조선(신공법, 첨단화)
- ◇ 참여정부 들어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과거의 구조적 문제점도 개선
  - \* 부품·소재, 지식서비스 등 산업의 基底와 연관구조가 보강되고 있는 추세
  - 다만,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책의 성과와 차세대 성장동력의 산업화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
- ◇ 앞으로 주력과 연관산업군의 다이내믹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超一流를 지향하는 산업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추진
  -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주력산업의 新르네상스 전략」 추진
  - 부품·소재 등 산업의 베이스와 지원·연관 산업군을 보강
  - RT·IT 등 신기술 융합을 통한 新산업혁명 기반 구축

**과제8**

**주력산업의 글로벌리더십 강화**

◇ 기술의 융합화·복합화에 대응,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차별화에 주력하여 세계시장에서 초일류 경쟁력을 확보

	세계시장 점유율			추진전략
	'06년	'07년	'08년	
- 자동차(6위)	7.5%	8.1%	8.7%	'07년 5강진입
- 조선(1위)	36.0%	37.0%	38.0%	부동의 1위 유지
- 반도체(3위)	11.0%	11.0%	12.0%	비메모리 강화
- 디지털전자(4위)	7.6%	8.1%	8.7%	첨단품목 확대
- 일반기계(11위)	3.2%	3.4%	3.6%	공정·품질 혁신
- 석유화학(5위)	5.1%	5.2%	5.3%	소재원천기술 확보

\* ( )는 '05년 세계순위

◇ 새로운 수출주력으로 부품·소재산업의 위상을 강화

	'06	'07	'08	추진전략
	- 부품소재 무역수지 (억불)	250	300	

**8-1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전략분야 절대우위 확보**

① 자동차 : 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 확보 및 상용화 촉진

○ 민·관 합동으로 하이브리드차·연료전지차 핵심기술 확보

\* 하이브리드차 독자기술개발 연도별 진척율(%), 선진국 양산차량 대비 수준 ('05년) 60 → ('06년) 65 → ('08년) 75 → ('10년) 85

\* 하이브리드차 개발사업 정부지원 확대(억원, 민간/정부 투자액) ('05년) 1,260/69 → ('06년) 2,122/188 → ('07년) 2,305/531

○ 하이브리드·연료전지차 운행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환경친화차 표지 부착, 차량구매자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 강구

○ 국내업체의 해외생산 본격화와 연계하여 국내부품업체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고, 글로벌소싱 참여 확대를 지원하여 "자동차부품의 글로벌 공급기지화" 추진

② **조선 : 글로벌 강국으로서의 위상 공고화**

- LNG선 화물탱크, 氷海선박, 차세대 해양플랜트 등 핵심기술 확보 및 초저온 밸브 등 핵심부품 개발계획 수립·추진
- 조선기능인력 양성('06년 770명) 및 지역별 인력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력수급 안정화
- 건조량 증가로 입지난을 겪고 있는 조선소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애로해결 지원
- IMO(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규범의 제·개정 활동에 적극 참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풀 확보

③ **디지털전자·반도체·디스플레이 : 세계1위 굳히기 전략 추진**

- 시스템반도체<sup>22)</sup>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동 분야 세계 1위 품목을 5개 이상 창출
  - \* 세계 1위 목표 : 자동차용 반도체,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구동 IC 등
- LCD<sup>23)</sup> 및 PDP<sup>24)</sup>는 초대형·저가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세계 1위를 유지
  - \* LCD(\$/인치): (05)18 → (06)15, PDP(\$/인치): (05)20 → (06)15
- 장비·재료업체 지원센터 설립, 수요 대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등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의 국산화 기반 구축
  - \* 판교 '실리콘 파크' 내에 장비·재료업체 공동 지원센터 설립 추진
- 업계의 시장 점유율 확대 노력과 공조 강화
  - \* 반도체중 낸드플래시<sup>25)</sup>의 생산비중을 확대(15%→30%), OLED<sup>26)</sup>는 개발 기술의 상용화 촉진
  - \* 차세대 휴대폰, 경박대형 디지털 TV 및 DMB 노트북 등 프리미엄급 제품 개발

22) 시스템 반도체 : 칩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도록 만든 반도체

23) LCD(Liquid Crystal Display) : 유리판 사이에 액정을 넣고 전압에 의해 문자를 표시하는 장치

24) PDP(Plasma Display Panel) : 대형 화면에 용이한 자발광 소자를 활용한 영상 표시장치

25) 낸드플래쉬(Nand Flash) :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데이터가 계속 저장되며, 데이터의 저장/삭제가 자유로운 메모리 반도체로 디지털카메라, MP3 등에 사용

26)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 발광현상을 이용하여 만든 유기물질

## 8-2 기계·섬유 등 新 활력분야는 차별화로 경쟁우위 확보

### ① 기계산업군 : 스타산업으로의 도약 기반 구축

- 「2015년, 200억불 무역흑자 달성」을 목표로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 IT·BT·NT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전통 기계류·부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차세대 핵심전략 품목의 기술개발 지원
- 민·군겸용기술개발 사업의 내실화로 민·군간 기술교류 및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국방부 공동)
  - \* 『민·군겸용기술촉진법』 → 『민·군기술협력사업법』으로 개편 추진
- 한국형 헬기개발사업(KHP) 적기 추진('06년 510억원)
  - \* '11년 한국 고유형 헬기개발 완료 및 핵심 구성품 국산화를 목표
- 미국과 항공부품분야 상호인정협정(BASA) 체결 추진('07년 체결목표)

### ② 섬유 : 고부가가치화로 「섬유한국」 위상 업그레이드

- 나노섬유·제2피부(Second Skin) 등 신소재 개발을 통해 제품을 차별화하고, 디지털프린팅·스마트의류 등 고부가가치 생산기술 확보
- 주문형 의류생산시스템(Mass Customization)인 i-Fashion 육성
  - \* i-Fashion : 3차원 스캐닝 → 온라인 의류 주문 → 봉제·제작 → 배송
- 글로벌 브랜드 확보를 위한 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 강화
  - \* 컬러·패션트렌드 정보제공, 패션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및 전시회 참가지원

③ 신발 : 특수기능화의 독자브랜드화 및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개발 지원

-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특수기능화 개발 및 독자브랜드화 지원
  - \* Trekstar 등산화 시장점유율 : 내수 1위(45%), 일본 2위, 뉴질랜드 1위 (기술개발자금 약 9억원 기 지원)
- 고기능성·초경량·인체공학적 핵심 소재 및 부품 확보
  - \* 신발소재 수출추이: ('01)19억불, ('03)22억불, ('05)28억불
- 신발피혁연구소(전문생산연구소)를 기존의 신발분야 종합연구소에서 부품·소재 부문의 특화연구기관으로 기능 재편

**8-3 주력산업과 부품·소재의 동반견인형 선순환 구조 정착**

①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전문화 촉진

- 시장 자율적으로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부품·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M&A 및 분할·합병관련 제도 정비
  - \* 핵심기술 확보 중소기업간 합병 또는 전문 부품·소재기업과 수요대기업 분할 합병 등을 통해 글로벌소싱 참여, R&D역량 확보 등 시너지효과 창출 목적
  - 「부품·소재 M&A Desk」 신설 및 기업결합 요건 완화·간소화 등을 위해 부품·소재특별법 등 관련법령 정비 착수
- 중핵기업 후보군 중심의 모듈단위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
  - \* '06년부터 중핵기업후보군 대상 모듈단위 5개과제 지원(100억원)
  - \* 업종별 실태조사를 거쳐 중핵기업으로 성장이 유망한 226개 후보군 기선정('05.10월)

② 전략지향적 기술개발과제 신규 발굴·지원

- 대일무역역조 개선형, 첨단소재 원천기술확보형, 수요기업연계형 차세대 부품·소재 개발 지원('06년 1,800억원)

### ③ 소재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

- 3대 분야(금속, 화학, 세라믹) 전략적 핵심소재 원천기술 개발
- 물성정보 공유와 소재 응용력 제고를 위한 「소재정보은행」 및 「원천기술사업화지원센터」 설립

### ④ 혁신센터·신뢰성향상 등 부품·소재 혁신기반 확충

- 안산·부천에 혁신센터를 건립('06년 100억원)하여 중소부품·소재 기업의 R&D 등 혁신창출·지원기능 집중화를 유도
- 세계적 수준의 신뢰성 평가기관을 육성('06년 285억원)하고 '06년중 100건 이상의 신뢰성인증 추진
- 「부품·소재 신뢰성 할인쿠폰제도」를 도입('06년 20억원)하여 부품·소재 기업의 신뢰성 마인드 제고
  - \* 18개 신뢰성평가기관에 신뢰성평가·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부품·소재산업진흥원 발행)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연구인력을 지원(BK21 사업과 연계)하고 병역특례 배정인원 확대를 통해 기능인력 지원

### 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중견기업 맞춤형 「단기대형사업」 추진 (연간 20억, 3년 내외)
  - \* 세계일류상품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모듈화·원칩화 기술개발 지원
- 선진기업과 전략적 제휴·M&A를 통한 핵심기술 확보 지원
  - \* 'Deutsch Desk(독)', 'Japan Desk(일)' 설치·확대로 기술협력 알선 확대
- 성공 기업인의 경영혁신 Best Practice 확산을 위한 「글로벌 중견기업 CEO 교육」 실시(주관기관 : 생산성본부)
  - \* 종업원 200인이상, 매출액 400억원이상의 중견기업 CEO 1,000여명 대상

**과제 9**

**미래사회선도형 R&B<sup>27)</sup> 산업 기반확충 (RT, NT, B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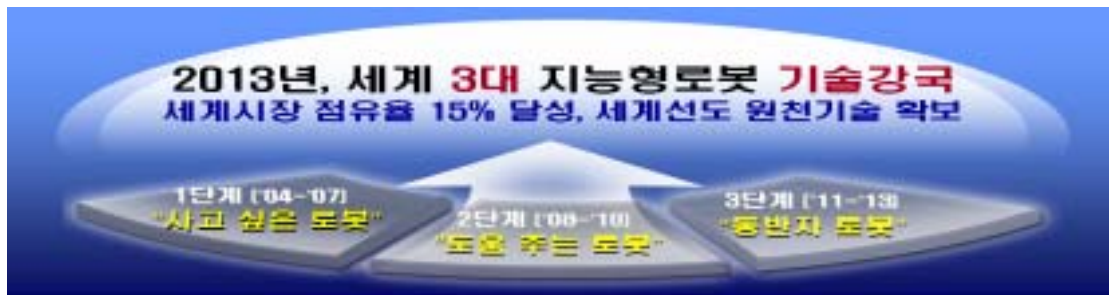
◇ 급속한 양적·질적 성장과 사회적 대변혁을 가져올 **Robot, Nano, Bio** 등 3大 “미래사회선도형산업”의 시장창출 촉진

	'06	'07	'08	추진전략
- Robot	교육시장	소방시장	가정	R&D 및 시범사업 추진
- Nano	기술집적센터 구축	장비요소개발	소재재료개발	인프라 구축
- Bio	신약 시험	cGMP구축	SW지원	R&D 및 기반구축

\* 로봇의 경우 산자·정통부 공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Master Plan** 수립('05.12.13)

- 산자부 (주관부처) : 산업용·개인서비스용·전문서비스용 로봇 담당
- 정통부 (협조부처) : 네트워크 기반 로봇 담당

**9-1 인간과 공존하는 1가구 1로봇 시대 개막**



① 로봇시범단지 등 로봇 **Testbed** 구축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도모

○ 교육기관, 소방청, 신규 아파트단지 등에 시범사업 추진

\* 교육용, 화재진압용, 개인서비스 등 개발 예정인 로봇을 시범 설치

- 이를 위해 관련 관련부처,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로봇 정책협의회” 구성, 구매조건·요구 사항 등을 협의

○ 인간과 가까운 로봇 이미지 구축활동 전개

- 기존 로봇전시회·경진대회를 통·폐합하고 민·관 합동으로 규모화·국제화를 추진하여 로봇기술력 홍보 극대화 도모

\* 독일 월드컵 4강전 개최 직전에 현지에서 “세계로봇축구대회” 개최

27) R&B : Robot Technology(R), Nano Technology(N; &), Bio Technology(B) 등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3대 테크놀로지를 합성한 신조어

## ②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적 「틀」 마련

- 로봇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로봇 '품질인증제도' (예: RT 마크) 도입 및 '하자이행보증제도' 적용
- 로봇의 보급 촉진을 위해 건축법·사회복지법·소방법 등 관련 제도 개선 요구
-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 **로봇표준포럼**을 구성·운영
  - \* 청소용 로봇의 KS 규격화, 로봇표준 연구, 한국형 표준 플랫폼/부품 보급 추진 등

## ③ 본격적인 산업군 도약을 위한 공인통계 발간

- 산재해 있는 로봇관련 산업통계를 통합, 공신력있는 통계자료를 확보, '06.8월 **최초 통계집 발간**(“산업표준분류체계연구회” 기동)

## ④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Killer Application) 개발 추진

- 국내 로봇기술 역량을 총 결집한 민·관 합동의 **대규모 R&D 추진**
  - 실질 수요를 바탕으로 시장창출이 가능한 개발사업 추진 (예: 사회안전로봇, 헬스케어로봇 등)
- 세계적인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지적재산권 확보
  - 업계의 **인공근육·인공두뇌·가상기술** 등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존 수행중인 프론티어사업 조정
  - 취약기술인 **시각센서** 등 범용 부품과 공유 SW, 플랫폼 등 **시스템 통합기술** 등 업계의 기술개발사업 지원
    - \* 현재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부품소재개발사업 내에 로봇분야 신설

## ⑤ 로봇기술 국제공동기술개발기반 구축

- 지능형로봇사업단 내에 “국제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
- 로봇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국제 현지연구실 운영 활성화 및 MIT 등과 신규기술협력 추진

## 9-2 나노기술 경쟁력의 조기 확보 및 산업화 촉진

### ① 제품 지향적 핵심기술 중점 개발

- 나노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전략적 R&D투자 지원('06년 568억원)으로 2015년까지 30개 이상의 최고수준 나노 실용화기술 확보
  - \* 나노플래시 메모리소자, 나노복합재료 및 소재, 나노 연료전지 등
- 여타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및 산업수요가 큰 기술개발 중점 지원
  - \* 노광기 요소기술, CNT<sup>28)</sup> 복합소재 등 나노공정시대를 뒷받침할 장비·재료 기술개발 추진

### ②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인프라 확충

- 나노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인프라의 확충 및 특성화 추진
  - \* 나노기술집적센터('04-'08, 2,668억원 투입), 나노부품실용화센터('06년 39억원) 등
- 범부처 나노 관련(MEMS<sup>29)</sup>, 반도체, 융합 등 포함) 인프라의 효율적 연계활용을 위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

### ③ 나노기술의 상품화 촉진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세계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기반을 마련
  - \* 나노기술표준화기반구축사업('06년 신규추진)을 통한 국제표준활동 강화
- 우수 나노 벤처기업 발굴·육성, 자금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NANO KOREA 등 3건), 설비구입자금지원 등

28) CNT(Carbon Nano Tube) : 탄소나노튜브

29)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 초미세전자기계시스템(하나의 시스템 내에 전자 및 기계적 부품을 집적화하는 마이크로 크기의 초정밀 기계제작 기술)

### 9-3 바이오산업(BT)의 수출산업화 기반 확충

#### ① 바이오 수출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美 식약청(FDA)기준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시설(cGMP) 구축으로 바이오제약품의 해외시장 진출기반 확보
  - \* 막대한 비용의 의약품생산시설(GMP)이 없더라도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를 이용, 자체 연구개발(R&D)한 바이오의약품을 美FDA기준(cGMP)에 맞춰 위탁생산 가능
- 국내 바이오기업은 물론, 아시아지역 바이오기업들의 위탁생산도 담당하는 바이오제약산업의 허브 역할 수행
  - \*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의 검증실시(Validation) · 시험생산 가동
- 코리아 Bio-Hub와 국제바이오클러스터(미·영·독 등) 네트워킹 구축

#### ② 세계적인 바이오제품 생산이 가능한 Bio-Star기업 육성

- 바이오의약품(단백질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바이오칩 등 경쟁력 있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임상시험 지원
  - \* 바이오스타 프로젝트('06년, 40억원)로 임상(1건), 전임상(2건) 추진
- 수출사업화 가능한 신약 · 제네릭 등 의약품, 소재 · 공정장비 개발(중기거점, 차세대신기술) 등 기술개발(R&D) 지원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 정비

#### ③ 바이오안전성(Bio-Safety) 강화 및 바이오의 신뢰 재건 추진

- 국민건강과 환경보전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시행
  - \* LMO의 인체위해성 평가등을 위해 LMO위해성평가센터 구축('04~'06)
- 최근 BT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불식 및 분위기 전환을 위해 Bio포럼 · 전시회 개최 등 바이오의 신뢰 재건 추진

**과제 10**

**차세대 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 촉진**

◇ 차세대 신제품을 조기 출시하여 세계시장 선점

	'06	'07	'08
- 개발 시제품수	20개	21개	28개

**10-1 핵심 제품기술 개발을 위한 R&D지원 강화**

①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추진방식으로 R&D 효과 극대화

- 제품별로 대기업(완제품)-중소기업(부품·소재)-대학·연구소(요소 기술)로 구성되는 일괄(One-set) 기술개발체제 운영
  - \* 부품·소재·장비는 공급중소기업과 수요대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 기술융합화 추세에 따라 유관 사업단간 횡적 연계 강화

② 차세대성장동력 육성의 가시적 성과 조기 도출

- '05년부터 시제품이 개발되면서 조기 제품출시 가능성 확대
  - \* '05년 개발 시제품 : 102인치 PDP, 청소용 로봇, 대용량 노트북용 2차전지 등
- 금년에는 초저가 TFT-LCD(15\$/인치)<sup>30)</sup> 등 조기 출시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에 R&D 역량 집중
  - \* ('05) 55개 과제, 1,182억원 지원 → ('06) 69개 과제, 1,449억원 지원

< '06년도 개발 시제품 >

성장산업	'06년 개발 시제품
디스플레이	· 초저가 TFT-LCD개발(15\$/인치, 30인치급) 등
미래형 자동차	· Hard Type 신동력시스템, 지능형 자동차 부분품 등
차세대 반도체	· 단거리 통신용 시스템 반도체, 512M PRAM 등
지능형 로봇	· 경비로봇 시제품 등
차세대 전지	·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용 고출력 이차전지 Cell 등

30) TFT-LCD(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 브라운관에 비해 초경량화가 가능한 디스플레이로 현재 브라운관 디스플레이를 대체중

## 10-2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 촉진

### ① 민간의 신산업 투자 및 세계시장 진출 지원

- 성장동력분야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사업단별로 □□사업화 전담팀□□을 구성, 제도개선·규제완화 등 투자촉진을 위한 과제를 발굴, 관계부처 협의 추진
    - \* '06년 산자부 주관 5개 성장동력분야에 약 9조원의 설비투자 전망
  - 차세대 성장동력 참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 지원
    - \* 투자설명회를 통한 벤처캐피털 투자유치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사업화 펀드 등을 통한 자금 지원 추진
- 성장동력분야 신기술의 글로벌 표준선점을 위해 국내기업의 국제표준화 제안 지원('06년 10억원)
  - \* 신기술의 국제표준화 제안 : '05년 26건 → '06년 40건
- 개발된 신제품의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등 마케팅 지원
  - \* 독일 하노버전시회, 디스플레이 전시회 등 국내외 전시회 지원

### ② 신기술제품 수요창출 지원

- 지자체·정부투가지관 등 공공기관의 성장동력 신제품 우선구매를 유도하여 성장기 초기 시장창출을 지원
  - 성장동력사업으로 개발된 신제품 등을 “신기술 인증제품 20% 구매 의무화 대상”에 반영 추진
- 하이브리드차는 현재 공공기관 구입시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를 지속 실시하고 보급대수 확대('05년 350대 → '06년 380대)
  - \* '08년까지 3,770대의 하이브리드차를 공공기관에 보급

**과제11**

**미래 고도소비사회에 대응한 산업기반 강화**

◇ 지식기반서비스의 국민경제적 비중을 꾸준히 제고

	'06	'07	'08	추진전략
- 유통산업 GDP비중(%)	9.0	9.5	10.0	유통·물류정보화 촉진
- 비즈니스서비스 GDP비중(%)	5.3	5.6	5.8	전문기업 성장기반 확충
- 기업 매출액 중 디자인 투자비중(%)	0.45	0.7	1.0	디자인 지향적 산업기반 조성

◇ 고령화·웰빙 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제도 확충

**11-1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① 유통·물류산업 발전기반 확충

○ 신기술을 활용한 유통·물류 정보화 촉진

- RFID 시범사업 및 국제물류플랫폼 기술개발 확대
-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정보화촉진을 위한 PDS<sup>31)</sup>사업 도입 확대

○ 유통물류 프로세스의 효율화 도모

- 기업물류비, 물류시설현황 등 산업물류 통계조사 및 DB구축
- 제조·유통업간 공급망관리 협력모델 개발을 지원

②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지원체제 구축

○ 비즈니스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요창출

- 연간 1만건의 전문기업 DB를 구축, 인터넷을 통해 정보제공
- 컨설팅사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검증 확인하는 실적 확인제도 활용·확산

31) PDS(Pos Data Service)는 판매시점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서비스

- 국내 중견 컨설팅업체(Glocal Consulting)<sup>32)</sup> 발전 지원
    - 사업내용에 대해 컨설팅을 받고 정책자금 지원시 인센티브 부여
    - 컨설팅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으로 인증 확대
  - 해외시장정보 제공 등을 통해 자동차·IT·조선 등 주력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국내 우수컨설팅사의 해외 진출 지원
- ③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체제 강화
- 지역디자인 혁신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디자인센터(RDC) 중심의 광역권별 연계망 구축 및 「지역디자인 혁신사업」 신설
    - \* 디자인혁신센터 및 특성화센터사업의 실태조사 후 기반구축사업 운영체제 개편
  - 시민이 향유하는 환경·시설 등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국가환경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 역량있는 디자인기업을 지원하는 「선도디자인 확산사업」 신설 및 영세디자인기업의 마케팅·경영역량 확충 지원
    - \* 디자인 홀닥터사업 지원확대 : ('05) 10억원 → ('06년) 15억원
  - 현장 중심형 인력양성을 위해 「디자인학과 계약운영제」 및 「Capstone-Design」 도입 등 디자인교육 혁신
  - 기업 CEO 및 非디자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 강좌 개설, 포럼 개최 등 디자인 문화 확산
    - \* 표준교재 개발('06년 상반기) 및 교양강좌 시범운영('06년 하반기)
  - 우수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자금 및 협업기업 관련 정보제공 및 법률서비스 등 디자인 보호기반 확충

32) 글로컬 컨설팅(Glocal Consulting)사 : 외국계(Global) 컨설팅사와 국내(Local) 컨설팅사의 특성을 혼합한 중견 컨설팅사로서 글로벌 출신 컨설턴트들이 독립하여 국내 컨설턴트와 함께 설립한 업체를 지칭

## 11-2 고령화 및 웰빙 친화산업 육성

### ① 고령친화산업 발전 인프라 확충 및 산업클러스터 구축

-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및 산업인식 확산
  -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및 고령친화산업발전협의회 구성·운영
- 표준화 Master Plan을 수립하여 국가표준(KS) 제정 확대 및 우수 제품과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추진
- 전략품목 핵심기술개발 지원 및 지역 특화자원을 고려한 산업 클러스터 전초기지 육성
  - \* 실버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KIST), U-헬스케어(부산), 고령친화클러스터(충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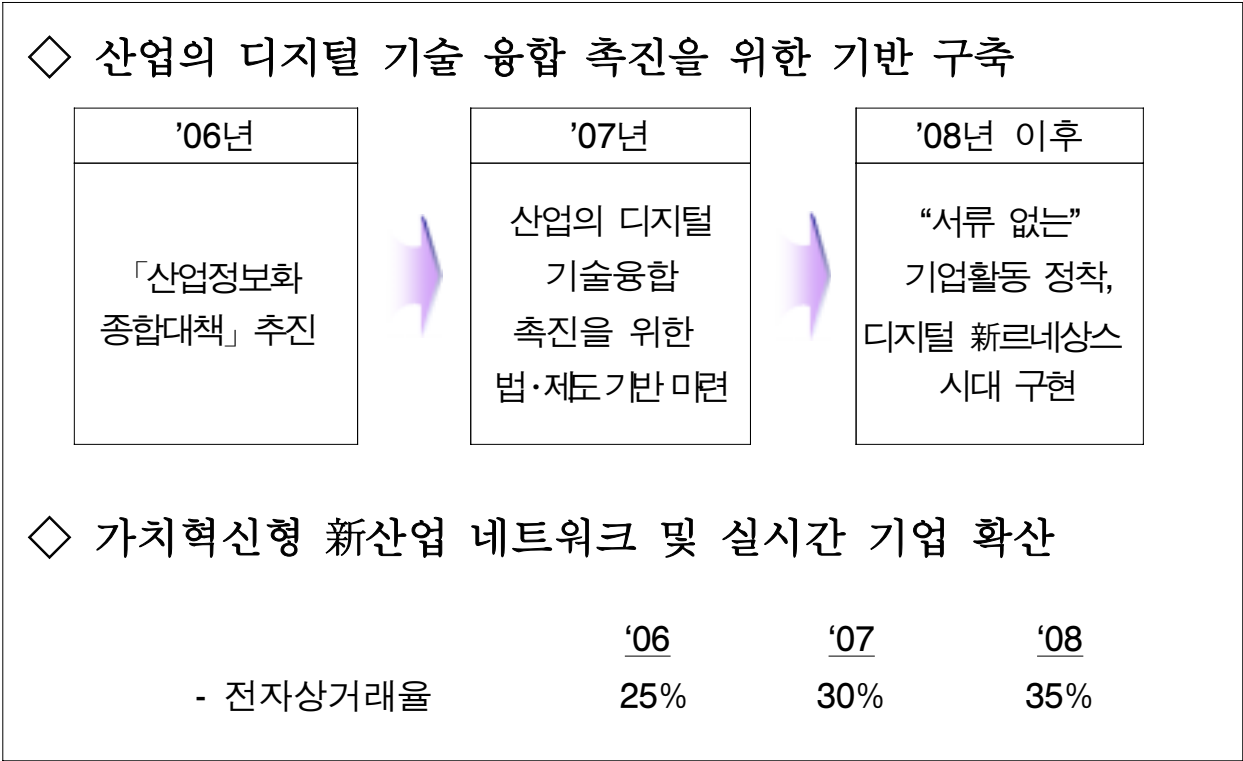
### ② 고령친화산업 기술력 강화 및 수요창출 촉진

- 고령친화 정보통신 보조기기 등 단기 상용화 과제 및 한방 체질 진단기 등 장기 대체의료기술 개발 공동 수행
- 고령자들이 기기·요양·문화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종합생활 체험서비스 시범사업 공동 추진
  - \* 고령친화기기·용구, 노화방지 기능성 식품 및 서비스 프로그램 등 제공

### ③ 웰빙친화산업 발전기반 구축

- 웰빙상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기술개발사업의 운영과 지역사업을 통한 웰빙트렌드 부합제품의 개발 지원
  - \* 대구섬유 : 고투습, 초발수, 항균 섬유 등, 전남·북경남·북 : BT응용 건강기능식품
- 산·학·연을 중심으로 “웰빙산업 전문가그룹”을 구성·운영하여 중·장기 웰빙친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과제12**      **디지털기술 융합을 통한 新산업혁명 기반 구축**



**12-1**      **산업의 디지털기술 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인프라 확충**

① “서류없는” 기업활동 기반 확충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도입, 종이문서의 전자화를 촉진
  - \* 금융, 제조업 등 연간 5,000억원 비용절감 효과
-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전자무역서비스(e-Trade플랫폼)와 연계, 수출기업에 대한 통합형 서비스 제공
  - \* 공인전자문서의 범용성 확보 및 전자무역보관소 기능과 연계

- 전자문서 활용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05년은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을 통해 28개 법률 56개 조항 개정

## ② 기업의 전자거래 표준 여건 및 규제 대응체제 개선

- 정보기술(IT) 인프라의 산업적용 표준모델을 정립·보급함으로써 끊임없는 전자거래 여건 조성

\* 영역별 표준화 수요조사 및 확산방안 마련

- 기업이 국내외 각종 규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IT기반의 규제대응 시스템 구축

\* 환경, 보안 등 각종 규제정보 제공 및 규제대응 표준 프로세스 개발

## ③ 기업의 IT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인력 인프라 확충

-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 핵심전략 기술분야 개발 추진

\* IT기술의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반영, 기술개발 지원시 시범단계 도입

\* 실시간기업, 공급망 관리, 고객관리, 지식검색 등 핵심 전략기술 개발

- IT 인력 수급 원활화 방안 추진

\* 중소기업의 IT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IT인력 아웃소싱' 방안 마련

\* IT 인력의 표준기술 수준 및 자격요건을 확립하여 업계에 보급

◇ '06년중 산업의 디지털기술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프라 확충 등의 「산업정보화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 12-2 가치혁신형 新산업 네트워크 조성

### ① e-러닝 및 e-헬스산업의 육성

-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성장 산업으로 e-러닝 산업 육성  
\* 표준화, 품질인증, 인력양성 등 e-러닝 확산기반 확충
-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서 e-헬스 산업 육성  
\* 신체모니터링, 의료정보전달 등 기술개발, 선박의료 시범사업 추진

### ② 新樹種산업으로 부상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 육성

-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핵심 원천기술 개발 추진  
\* 지능형 홈 SoC(System on Chip), 시큐리티, 오토메이션, 응용 솔루션 및 홈네트워크 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등
- 제품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시험·인증센터 확충, 전문 인력양성, 시설·장비·기술 전문정보 제공 등
- 홈 네트워크 표준을 제정하여 제품간 상호연동성을 확보  
\* 제조사, 서비스 사업자 등이 공동 참여하는 표준화 협의체를 운영

### ③ 디지털 新르네상스를 주도할 엔터테인먼트 산업기반 조성

- 게임·애니메이션·영화·방송·통신 등 다양한 부문에 활용 가능한 범용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기반 구축  
\* 디지털 콘텐츠 제작시설 확충, 제작·편집 기술개발 및 유통기반 조성
- 애니메이션 전문기업 및 게임산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국제 창작 네트워크 및 게임개발 시설·장비 공동활용체계 구축
- 엔터테인먼트 기기 및 기술의 개발 추진  
\* 가상현실응용기술, 실감형 3차원 응용단말기 및 음성정보기술(음성인식·음성합성·대화자인식)

④ 텔레매틱스<sup>33)</sup> 상용화기술 개발 및 신뢰성 기반 확충

- 텔레매틱스 상용화를 위한 소비자유인 서비스 발굴
  - \* 안전·교통정보 DB 구축, 보안·안전, 원격 고객관리 및 위치기반 서비스 등
- 텔레매틱스 기기 및 핵심기술 개발
  - \* 보급형 텔레매틱스 단말기, 차량 전자장치와의 네트워크 통합 인터페이스 모듈 및 주행 위험상태 경고시스템 등 기술개발
- 텔레매틱스 기업지원 서비스기반 확충
  - \* 테스트 베드(시험·평가) 구축, 표준화 및 신뢰성 인증 등

⑤ 전력IT 사업을 통한 전력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능력 제고

- 지능형 배전시스템, 전력선통신(PLC) 응용기술 등 전력IT 9대 핵심 연구개발사업 추진 (5년간 약 2,500억원 투자)
- 전력IT 인력양성 및 표준화사업 등 인프라 구축
  - \* 'R&D' - '상용화·벤처투자' -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3각 지원으로 기술 개발 결과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을 극대화

⑥ 기업간 e-협업 네트워크 확산기반 구축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e-협업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기업 가치사슬의 경쟁력을 제고
  - \* 업종별 협업군을 컨소시엄화하여 공급망 관리 솔루션 등 인프라 구축 지원
- e-매뉴팩처링을 통한 공정·품질혁신 협업기반 구축
  - \* 전통 제조업에 IT기술 접목을 통한 기업간 제조 정보의 지식화
  - \* 기업간 제조공정 통합화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05) 4개 협업허브 구축 → ('06) 협업허브 활성화(컨소시엄 및 제품군 확대)
- 기업 환경이 상이한 기업간·업종간·부문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이 확보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 차세대 e-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상반기), 시범사업(하반기)

33) 텔레매틱스(Telematics) : Telecommunication과 Informatics의 합성어로 위치정보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운전자와 차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12-3 산업의 유비쿼터스화 확산 기반 구축

#### ① 유비쿼터스<sup>34)</sup>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 광대역 통합망·유무선 인터넷 통신망 등 유비쿼터스 인프라의 산업활용 로드맵을 제시하고, 산업별 활용 가이드라인을 보급
  - \* 산업별 비즈니스 모델, 투자수익률 모델 등 구축
- 기업간 거래(B2B) 사업을 통해 구축된 산업별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간 네트워크 공유 추진 (既지원 48개 업종 대상)
  - \* 분야별 지능형 이력추적시스템 및 산업공동 정보저장소 구축 ('05년은 문광부와 공예품 이력추적시스템 공동구축)

#### ② 방송·통신 융합화 추세에 적극 대응

- 소비자가 콘텐츠 선택권·편성권을 향유하는 양방향 다매체 시대를 주도할 퍼스널 미디어기기와 관련 솔루션 개발
  - \* 퍼스널 미디어 : 스마트폰, DMB단말기, PVR(Personal Video Recorder)
- 인터넷 TV, 멀티미디어 휴대폰, 디지털 방송수신 PC 등 Triple Play Service(방송·전화·인터넷) 기반기술 개발

#### ③ 산업의 유비쿼터스화 저변 확대

- 「중소기업 IT화 사업」·「기업간 거래(B2B) 사업」 등을 통한 지원기업의 유비쿼터스 인프라(예. 무선인식(RFID)) 활용을 촉진
- 산업의 유비쿼터스화에 여성 경제인의 참여 제고
  - \* e여성 CEO 협의회 구성 및 운영

34) 유비쿼터스(Ubiquitous) : "언제, 어디서나 있는"을 뜻하며, 기업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처리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함을 의미

**목표 4 에너지강국 실현기반 확충**

**정책여건**

- 新고유가, 자원확보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관건으로 작용
- 기후변화협약 등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와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에너지 효율향상과 친환경 에너지체제 구축 필요성이 부각

**그간의 정책성과 및 추진방향**

- ◇ 여러 차례의 에너지 위기를 거치면서 단기적 에너지수급 위기 대응능력은 일정수준 확보하였으나 구조적인 대응역량은 미흡
  - 에너지효율 향상(에너지단위 : ('90)0.354→('04)0.303), 에너지원 다변화(석유비중(%): (90)53.8 → (04)45.6), 정부비축유 확보(74.5백만B)
- ◇ 참여정부 들어 에너지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에너지의 자주공급 역량 확충과 에너지안보를 강화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05), 신규원전 4기 건설 착수('05), 동해-1가스전 생산 개시('04), 자원 정상외교('04~'05)
  - 에너지기본법 제정, 국가에너지자문회의 운영 등 에너지 문제의 통합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체제를 정비
- ◇ 향후 新고유가 시대 대응을 위한 시스템 혁신과 중장기 에너지 확보전략을 수립하여 국민경제의 지속발전 역량 확보
  -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 확보, 에너지의 사회적 보편성 제고

**과제13**

**미래지향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 ◇ 에너지정책의 미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여 중장기 에너지 안보체제를 강화
- ◇ 에너지 공급 설비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선진형 에너지 수급 체계를 확립하고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부응
- ◇ 산유국-소비국간 에너지 안보협력 체제 구축 및 동북아 에너지 협력 활성화로 국제공조 강화

	'06	'07	'08
- 발전설비용량 확충(만kw)	6,500	6,928	7,284
-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처분방식결정	건설 착수	부분운영 개시

**13-1 에너지·자원 중장기 지원체제 구축**

①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운영

-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사안 등에 대해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최대한 확보
  - \*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추천위원(5인 이상)으로 위원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 대내외 환경변화와 미래 에너지 수급전망을 토대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인 전략목표를 제시하는 중장기 에너지전략 마련
  - \* 중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 에너지원별 비중, 자원확보 전략, 차세대 에너지 개발,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용후 핵연료 및 교통세 활용 등 자원확충 방안 등을 포함한 20년간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7~2026) 수립

## ② 해외자원개발 등 에너지 행정수요에 대비한 역량 강화

- 新고유가, 자원 확보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
  - 자원부국(쿠웨이트, 오만 등)등과의 자원협력위 확대 및 협력 강화
  - 중동·중앙아시아 등 전략지역의 산유국과 장기적·체계적인 민·관 국제협력사업 추진
    - \* 산유국 주요인사 초청·연수, 교육 및 기술협력, 석유·가스협력단 파견 등
  -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에너지源 탐사·개발(연구개발 및 정밀탐사, '05~'07)과 함께 국내 대륙붕 개발 강화
    - \* 가스하이드레이트는 2015년 상업생산 목표로 탐사·개발 3단계 사업 추진(2,257억원)
- 해외자원개발 역량과 에너지 기술개발 강화 등을 위한 체제 정비

## ③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에너지 시스템 정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지역내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에너지 공급망 점검
- 에너지 수급전망과 연계하여 각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 지역에너지 로드맵 수립
- 지역 에너지조례 제정 확대(5개시도 → 16개시도) 및 지역에너지 사업 확대('05년 400억 → '06년 475억)로 지역에너지 정책 추진역량 강화

## 13-2 에너지위기 대응 능력 제고

### ① 에너지위기 대응시스템 구축

- 석유수급 차질, 原電의 불시 정지 등 에너지의 수급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 에너지위기 대응시스템 구축 추진

### ② 세계 석유시장 불안에 대비, 석유위기 대응능력 제고

- '06년중 거제비축기지 추가 증설(7.5백만 배럴 규모)을 통해 총 비축능력을 123.5백만배럴까지 확충
  - \* '05년말 현재, 9개기지 116백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 보유
- '06년중 3.5백만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구입하여 총 7천8백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
  - \* IEA 주도로 비상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석유비축(90일 기준) 추진
- 국내 비축기지에 산유국의 원유를 저장하는 국제공동비축 사업을 확대하여 비축물량 증대 및 수익성 확보
  - \* '05년 20백만B(알제리, 노르웨이) → '06년 25백만B(알제리, 노르웨이, 쿠웨이트)

### ③ 에너지 위기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 제10차 IEF와 제2차 아시아 산유국-소비국 회의 등 산유국-소비국간 대화채널 강화 및 APEC-OPEC간 대화채널 개설 주도
- 동북아 지역내 새로운 “에너지 안보벨트” 구축 추진
  -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 운영 활성화
    - \* '05.11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정부간 협의체인 “동북아 에너지협력 고위급 회의” 구성
  - '06년중 제2차 동북아 에너지협력 고위급회의 개최 추진

### 13-3 수요에 부응한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

- ① 중장기 전력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전원구성을 포함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06~'20)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당진화력 6호기(50만kW, 3월), 양양양수 1·2호기(50만kW, 4월)의 건설로 6,50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능력 확보
  - \* 발전설비용량(만kW) : ('04) 5,996 → ('05) 6,226 → ('06) 6,500
  -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전력산업 환경을 고려한 다른 電源과의 비교분석 등 원전의 적정 비중 및 경제성 분석
- ② 수요 증가에 대응한 LNG 공급 설비 확충
- 3기의 LNG 저장시설(14만kℓ 급, 통영생산기지) 준공 및 LNG 지역배관망의 추가 건설(6km, 총연장 2,517km)로 공급기반 확대
  - \* LNG 저장율(%) : ('04) 8.9(418만kℓ) → ('05) 9.4(446만kℓ) → ('06) 10.0(488만kℓ)
- ③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차질없는 건설절차 이행
-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처분방식(천층, 동굴)을 결정하고, 상세 조사·설계를 거쳐 '07년 착공 및 '09년 운영 개시 예정
  - 특별지원금 지급, 유치지역 지원계획 수립, 韓水原 본사 이전 계획 확정, 양성자가속기사업 등 유치지역 지원 가시화
  - 방폐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방폐물 관리사업자 설립, 원전사후처리총당금 관리개선, 방폐물관리법 제정 등

**과제14**

**에너지 소비구조의 선진화**

- ◇ 에너지 이용 효율의 시스템화 및 “에너지원단위개선 계획”을 중장기적 정책추진 시스템으로 확대 발전
- ◇ 대중적 단기위주의 정부주도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친화형 에너지절약 시책 적극 발굴·시행
- ◇ 제도 개선, 기술개발 효율화, 해외 네트워크 활용 등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이행 기반 구축

	'06	'07	'08
- 에너지원단위 개선(TOE/'00 백만원)	0.299	0.291	0.290
- 에너지·자원 R&D 투자 확대(억원)	4,090	4,900	5,880

**14-1 중장기 에너지효율 향상대책 추진**

- ①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시행중인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05~'07)」의 지속 추진
  - 산업단지·도시 개발 등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확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 '06.상반기)
    - \* 공공 : 5천TOE 이상 → 2.5천TOE 이상, 민간: 1만TOE 이상 → 5천TOE 이상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활성화를 위해 실적우수 ESCO에 대해 '우수 ESCO 인증제도(Best ESCO(가칭))' 도입
    - 성과보증제 활성화, 민간자금 활용 확대 등 ESCO투자 재원의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12개 보일러업체(가정·상업용)와 자율적 에너지절약 협약 체결 및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해 자발적협약(VA) 확대
    - \* 총 445개 건물분야 대상사업장 중 협약참여 : ('05)61개 → ('06)90개
  - 배기량 위주의 '자동차 효율표시등급'을 중량 등을 감안하여 연비등급 재조정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기준 마련
    - \* 연구용역('06.6)을 거쳐 '자동차 소비효율개선 관련 고시' 개정
  - 주택·아파트단지 등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지역난방 등 집단 에너지와 소형 열병합발전 보급 확대 및 중장기계획 수립
    - \* 지역난방 보급(천호) : ('05)1,416 → ('06) 1,503
    - \* 소형 열병합발전(MW) : ('05) 128 → ('06) 145.7
  - '대기전력(Stand-by power) 저감 프로그램'의 대상품목 확대 ('05.18개 → '06.20개) 및 절전기준 강화(모니터, 프린터 등 11개 품목)
- ② 「원단위개선 3개년계획」의 보완·확대를 통해 '원단위개선 중·장기계획'으로 발전
- 기존 과제별로 실현 가능성, 개선방향 등에 대해 종합 점검하고, 신규 과제의 추가 발굴
  - 정기적 점검 체제(부처간 T/F운영 및 점검회의), '민간전문가 pool(100명 내외)' 및 '에너지절약시책자문회의' 운영
    - \* 수송 및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해 既 운영중인 산자부-건교부간 실무 협의회 역할 확대

## 14-2 시장친화적 에너지절약을 위한 저변 확충

### ① 합리적 에너지효율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및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도 도입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전면 개정 추진
  - \*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 정비와 함께 신규제도 도입
- 에너지진단 의무화의 도입에 따른 진단 전문인력 양성, “에너지진단사”의 국가 공인화 추진
-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명확화, 사업허가권 지자체 이양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추진

### ② 에너지다소비 서비스업종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유도

- 현재 참여중인 25개 업종(71만개 사업장)별 특성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방안을 발굴,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
  - 업종별 단체를 통해 추가적인 에너지절약방안을 전파하고, 교육 및 기술지도 등 효율적 절약 방안 제시
    - \* 에관공 지사(12개)내에 “자율적 에너지절약 지원반” 구성·운영
- 업종별로 에너지절약 이행 실태를 점검(분기별)하고 절약우수자에 대한 정부포상 확대, 에너지절약 교육·홍보·용자 우선 지원

### 14-3 통합형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본격 시행

#### ① 「국가 에너지·자원기술개발 10개년계획('06~'15)」 추진

- 실질적인 R&D 통합기획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에너지원별 조정이 가능하도록 '에너지·자원 R&D기획단' 기능 강화

\* 통합 R&D기획을 위한 제도적 기반 : ① 통합 운영규정 시행('06.1),  
② 연도별 통합 시행계획 수립

- 기술 가치평가, 특히 정밀분석 등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상시 수정·보완체계 구축(3개 사업 통합심의회 구성·운영)

#### ②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에너지자원 R&D기획단'의 민간 전문가 등으로 '법제 T/F'를 구성·운영('06.상반기)하여 통합형 R&D를 위한 법안 마련

#### ③ 에너지효율 국제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인프라 확충

- 5대 지역협력거점(K-GIN<sup>35)</sup> 기관을 활용한 양자간 협력대상 국가 선정 및 공동기술개발 협력 추진
- 아시아 국제전력 및 에너지기술 설비 박람회(10.10~13, 중국 상해) 및 ESCO업체의 해외 현지 기업설명회(IR) 지원
- IEA(CERT<sup>36)</sup>), APEC 등을 통한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

35) K-GIN : Korea Global Innovation Network

36) CERT : Committee on Energy Research and Technology

**과제15**

**차세대 친환경/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

- ◇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할 기술주도형 미래에너지원이자 청정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로 에너지자립도 제고
  - \* 총 1차 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05년 2.2%(잠정)에서 '06년 2.5%로 확대
- ◇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제협상력 제고 및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배출 감축 기반 강화
- ◇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확충을 통해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를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

	'06	'07	'08이후
- 신·재생 에너지 비중	2.5%	3.0%	('11) 5.0%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등록확대(누계)	70	120	200
- 주력산업의 환경경제 효율성	1	1.2	('15) 4

**15-1 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①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의 세부이행 사업 추진
  - 수소·연료전지 R&D 로드맵 작성 등 제도적 기반 확대
    - \* 「수소경제 이행촉진법」의 입법 타당성 검토
  - 수소·연료전지 실증연구 사업 추진
    - 30기 이상의 가정용 연료전지 실증 연구사업 추진
    - “인천~서울~용인”축의 수소 high-way 구축 및 인프라 지원 등 연료전지 자동차 실증연구(수소스테이션 2기 구축, 연료전지 자동차 시범운행)
  - 수소·연료전지 설비실증용 수소 파워파크 및 신재생에너지 체험 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건설착공

## ② 전략적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 확대

- 국내 최대 육상풍력단지 및 해상풍력 실증연구단지 조성
  - \* 강원풍력(98MW, 10월 예정), 해상풍력실증단지(4MW, 제주)
- 서민임대아파트 등 태양광 주택 3,600호 추가보급
- 바이오디젤(BD-5) 보급의 전국 확대 및 바이오에탄올 혼합연료 유통시스템 실증연구 추진
-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수준·설치단가·파급효과 등을 감안, 예산투입의 최적분배비율을 산정하고 에너지원별 발전전략 마련

### < 3대 전략분야별 사업목표 >

분 야	기술개발	실 증	(사범) 보급
태 양 광	태양전지용 실리콘소재 생산기술	추적식 태양광 발전 시스템	건물일체형 시범보급 10.5MW 일반보급
풍 력	3MW급 해상풍력	1.5MW급 육상풍력	국산 750kW급 시범보급 90MW 일반보급
수소· 연료전지	5kW급 용융탄산염 상업용 연료전지	80kW 고분자전해질 자동차용 연료전지	1~3kW급 가정용 연료 전지 30기

## ③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유도

- 대규모 에너지 사용·공급사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sup>37)</sup>) 및 외국과의 CDM<sup>38)</sup>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차액지원 기준 가격을 합리화하고 해상풍력, 바이오 등 신규수요가 있는 발전원에 대한 기준가격 설정추진
  - \* 발전단가 기준설정을 위한 연구용역('04.8~'06.3) 결과를 토대로 발전차액 지원지침 개정 예정(상반기)

37)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 정부와 에너지공급사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협약

38)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교토의정서상의 부속서 I 국가(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가 비부속서 I 국가(비의무부담국: 한국 등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시행하여 달성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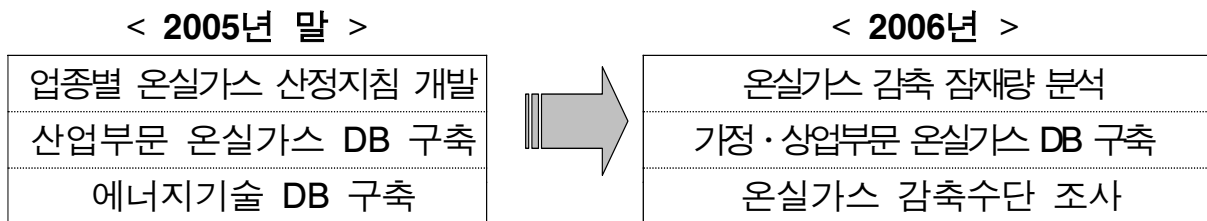
## 15-2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강화

① 기후변화 관련 국제논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 산업계의 대응 능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전략 마련

- 교토의정서상 제2차 의무이행기간('13~'17)이후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사내배출권거래제도 및 CDM 사업 활성화 추진
- 아·태 기후변화 6개국 파트너십 참여를 통한 청정에너지 기술력 제고 및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새로운 시장·투자기회 창출

② 온실가스 배출 통계체제 지속 확충

-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을 위한 감축잠재량 분석 기반 확립



③ 에너지·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반 및 홍보강화

- 감축실적 검증체제 확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활성화
  - \* '05.10월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제도 실시
- 온실가스 처리(포집·분리 등) 관련 기술 개발 계획 수립·추진
- 기업/지자체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산업계·민간의 대응능력 배양
  - '기후변화 대책 Week('06.2)', 'CDM Market Fair'('06.9) 개최 및 "기후변화 원스톱 정보시스템" 가동으로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

### 15-3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 확충

#### ① 주력산업의 환경경제 효율성 제고 기반 구축

##### ○ '환경경제효율 개선 프로젝트' 추진 기반 마련

- 업종별 환경개선 특성을 반영한 환경경제효율성 측정지표 개발

\* 주력산업의 환경경제효율성(Eco-efficiency, 경제적가치/환경부하)을 '15년까지 4배('06기준) 증대

##### ○ 산업계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 대기업의 공급망을 활용한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구축사업' 확대 추진

- 지속가능 제품생산 촉진을 위한 평가기법 및 가이드라인 개발

#### ②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기반 조성

##### ○ 자원이용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생태산업단지(EIP) 구축사업 추진

-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2차 시범단지 선정('06.2)

\* '05.10월 포항, 울산, 여수 3개 단지를 1차 시범단지로 선정

-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환경관련 전문가·지자체·환경단체로 구성된 'EIP 평가자문위' 운영

##### ○ 자원사용 절감을 위한 재제조(Re-manufacturing) 산업 활성화

- '재제조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품질인증 시범사업' 실시

#### ③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한 산업계 경쟁력 강화

○ 산업계의 대응 현황점검 및 지원을 위한 '국제환경규제 대책반' 가동

○ 국제환경규제 주요 대상 업종인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 집중지원

○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종합지원사업 추진

**과제16**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복지 확충**

◇ 에너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기반 조성 및 따뜻하고 안전한 에너지사회 구현

	'06	'07	'08
- 사회적약자 지원 강화	지원체제 개선	프로그램 개발	형평성 제고

**16-1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①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에너지 공급의 사회적 보편성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 프로그램, 재원조달 방안, 지원체제 등을 포함하는 종합대책 마련

②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관리기구 설립 추진

-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의 제공 등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협의회(사단법인)를 에너지재단으로 개편

**16-2 Energy Help Program 추진**

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에너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에너지 요금 할인
  - \* 전기 : 100kWh/월이하 사용자(206만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80만가구) 35~15%
  - \* 지역난방 :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한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 감면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본요금감면 확대 시행 ('05)30%→('06)50%
  - \* 가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가스요금 경감('05년 6,200개소 → '06년 7,150개소)

- 전기요금 체납세대에 대한 **최소한(110w)의 전기공급 및 흑서기·흑한기의 공급중단 유예**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불편 최소화
  - \* 단전대상 주택(월평균 3.2만가구)에 여름(7-9월) 및 겨울(12-2월)에는 단전유예, 봄(3-6월) 및 가을(9-11월)에는 단전대신 최소한의 전류(110w)공급
- **고효율 조명기기의 무상공급 확대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공부방에 대한 시설교체·리모델링 지원**
  - \*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공급 : '05년 40,000호(70억원) → '06년 50,000호(78억원)
  - \* 공부방 리모델링 : '05년 6개소 → '06년 10개소

## ② 저소득층·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금제도 개선

- LPG 차량을 보유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LPG보조금** ('06년 2,715억원)의 합리적 개선 추진
- 단계적으로 **연탄 가격보조**를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보조로 전환 추진

## ③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안전점검 강화

- 누전차단기·개폐기 교체 및 옥내배선 정리 등 **불량전기 시설물에 대한 무료 개·보수** 활동 전개
  - \* ('05) 18,860개소(9.9억원) → ('06) 22,200(11.7억원)
- LP 가스시설 개선, 퓨즈콕(안전기기) 보급 등 **취약계층 가스 시설 무료 개선** 추진
  - \* ('05) 22,000개소(36억원) → ('06) 23,000개소(37억원)

## 목표 5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촉진

### 정책여건

- 수출은 내수부진을 보완하며 국민경제 성장을 주도
  - \* 수출의 경제성장기여율(%) : ('00) 28 → ('02) 41 → ('04) 93
- 최근 외국인투자의 건수 및 투자국이 증대하여, 외국인투자의 저변이 크게 확대
  - \* 외국인투자건수 : ('02) 2,408건 → ('03) 2,564건 → ('04) 3,073건 → ('05) 3,666건
- 세계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 · 지역화(Localization) 진전
  - \*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비중(%) : (싱가포르)53.3, (중국)17.7, (한국)0.3
- 한반도 내부적으로는 긴장완화에 따른 남북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외부적으로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치열한 자원확보 경쟁 전개

### 그간의 정책성과 및 추진방향

- ◇ '95년 WTO출범 이후 무역 · 투자자유화를 추진하고, 수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글로벌 경영여건 조성에 주력
  - 그러나, 특정 국가 · 품목에의 수출의존도 심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부족 등 무역 · 투자 분야의 질적여건 개선은 미흡
- ◇ 참여정부 출범 후 무역흑자기조의 안정적 유지 및 외국인 투자의 질적 고도화, 해외자원개발 · 남북간 경제협력 확대 추진
  - 선진 무역인프라 확충,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및 첨단산업 중심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정상외교를 통한 자원개발 실시
- ◇ 향후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및 네트워크형 투자유치를 지원하여, 무역 1조달러시대에 걸맞는 무역 · 투자체제를 구축

**과제17**

**산업강국 견인형 新무역체제 구축**

- ◇ 무역1조달러 달성을 위한 선진 무역인프라 구축
- ◇ 수출상품의 글로벌 해외마케팅 지원체제 확충

	'06	'07	'08
- 수출(억불)	3,180	3,600	4,050
- 무역규모(억불)	6,130	7,000	7,850

**17-1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무역인프라 조성**

① 세계일류 전자무역망 구축

- 마케팅·물류·통관·외환 등 모든 무역유관기관을 국가 전자무역망과 연계하여 무역업체에게 단일창구(Single Window) 서비스 제공 추진
  - e-Trade 플랫폼을 구축('07년 완료)하여 동북아 전자무역 Hub를 위한 기반조성
  - \* '06년 중 전자무역문서 유통관리시스템 확충 및 전자무역 포털 구축
-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주요 교역국간 전자무역 협력을 확대
  - 전자원산지증명서 적용을 위한 MOU 체결을 추진(싱가포르)하고 전자문서 유통방식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

② 선진형 전시산업 육성

- 업종별로 '브랜드전시회'를 선정, 해외홍보활동을 중점 지원하여 국제규모의 대표적 전시회를 육성
  - \* 한국전자전, 대한민국섬유교역전 등 7개 브랜드전시회 개최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지역특화전시회를 선정·지원하여 지역전시장을 활성화
  - \* 지역특화전시회 : 국제섬유기계전(대구), 국제광산업전(광주), 국제기계박람회(창원),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부산)

- 전시장의 적정수급을 고려한 전시시설 확충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전시시설 확보

- \* KINTEX 2단계 건립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절차 진행('06년 상반기)

- 비즈니스호텔, 지역문화체험시설 등 전시장과 연계된 지원 시설 확충을 추진

- \* '06년 상반기 지자체, 지방전시장 대상 수요조사 및 타당성조사 실시

### ③ 수출입물류시스템 효율화

- 수출입물류에 RFID 시범적용을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관리 기법 확산으로 물류시스템 효율화

- \* RFID 적용례 : 자동차부품 해상물류, 전자부품 항공물류

-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물류거점 투자에 대한 유통물류합리화자금을 지원('06년 300억원)

- 물류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단계 축소를 위해 수출입 물류비를 조사·발표

### ④ 고객친화형 전략물자관리체제 정착

- 전략물자 중개·환적·무형기술이전 통제 등 UN안보리결의사항 국내 수용

- \* 대외무역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추진

- 중소기업용 전략물자관리 프로그램 개발, 품목별 통제리스트·해설서 제작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이행유도

- \* 기업자율준수제도 도입기업 : ('05) 4개 → ('06) 20개

- 전략물자 전문가양성 기반구축

- \* 기업 실무자를 위한 전략물자 교과과정 개설

## 17-2 미래 수출동력의 확충

### ① 세계일류상품의 활력제고

- 한류상품을 포함한 문화·서비스 품목 및 차세대 성장동력 제품 등을 세계일류상품으로 발굴('05년 505개 → '10년 1,000개)
- 세계일류상품 지원제도 확충('05년 56억원 → '06년 59억원)
  - 해외일류상품전 개최, 전시회참가 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
  - 세계일류상품 로고 보급,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우대,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투자마트 개최 등 지원제도 확충

### ② 중동 오일달러 환류를 위한 플랜트 수주확대('05년 158억불 → '06년 180억불) 지원 강화

- 플랜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별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플랜트 로드맵을 작성
- 중동지역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설치, 수주사절단 파견 및 발주처 유력인사 초청 등 밀착형 지원체제를 구축
-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대, 유망플랜트 타당성 조사·벤더등록 등 지원

### ③ 수출보험의 수출지원기능 제고

- 수출보험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수요자 니즈에 맞는 상품개발
  - \*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 ('05) 76조원 → ('06) 84조원
- 중소수출기업의 「환위험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선물환 보험은 기업의 수요에 따라 계약체결한도 없이 인수

### 17-3 수출시장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기반 강화

#### ① 국내외 무역지원기관들간 해외마케팅 협력기반 조성

- 지방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클러스터와 국내 KOTRA 무역관의 수출지원 기능을 연계
  - \* 반월시화, 창원, 구미 등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의 해외마케팅 지원체제 구축
- 주요품목별 유관기관(협회, 단체)과 KOTRA 국내·외 무역관을 연계하여 통합 해외마케팅 체계 구축
  - \* '06년중 자동차부품, 기계·플랜트, 섬유, 환경 등 8개 전략분야 선정

#### ②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마케팅 지원

- 해외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
  - \* ('05)5개(토론토, 로테르담, 뉴욕, 성도, 두바이) → ('06)7개(부다페스트, 마이애미 추가)
-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을 강화하여 해외마케팅 지원
  - \* ('05)1,500개사 → ('06)1,600개사, 고객특성에 부합한 차별적 서비스 제공 등
- 해외한인무역인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agent화하여 중소기업 해외무역네트워크로 활용

#### ③ 해외마케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종합정보지원시스템<sup>39)</sup>」의 '판로·수출분야' 운영지원
  - \* '06.1월 현재 293개의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재
- 무역·투자 관련 「정보포탈」인 「Global Window」 운영(KOTRA)
  - \* 분산된 무역/투자정보를 통합하여 D/B 구축 및 온라인 제공
  - \* 중소수출업체에 해외 시장정보 「Global Window Weekly」를 이메일로 제공
- 수출유망상품 정보의 수집·전파
  - \* 해외시장 히트상품, 틈새상품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100대 유망 수출상품 D/B 구축

39) 중소기업종합정보지원시스템 :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1개의 Web-Site에 DB화하여 제공하는 온라인시스템으로서, 06년 7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시주소, <http://211.233.139.188>)

## 〈 참고 〉 수출시장별 차별화된 진출전략

-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전방위 총력마케팅**
  - KOTRA ·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 진출기업간 네트워크를 강화
    - \* BRICs 지역 시장정보 수집 및 온라인 정보공유 강화 등
  - 해외전시회 지원확대 및 한국일류상품전 개최('06년 : 인도)
    -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회) : ('05) 58 → ('06) 63
  -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시장개척사업 추진
    - \* '06.2월중 수요조사를 거쳐 BRICs 시장조사사업 확정
  
- **韓流 열풍지역(ASEAN, 중화권, 일본) : 국가브랜드 활용**
  - 한류 열풍지역의 문화 · 서비스 상품수출 기반 강화
    - \* KOTRA 서비스거점무역관 : ('05) 3개 → ('06) 7개(중국, 일본, 대만 등 신설)
  - 한류를 직접적인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류 상품화 본격 추진
    - \* 한류아이디어공모전, 한류 상품개발 상담회 개최 등
  
- **틈새시장(정부조달, 글로벌아웃소싱시장) : 테마중심 시장개척**
  -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 \* 캐나다 IT 정부조달 전시회('06.10월), 북미/EU지역 유력바이오 초청 조달 상담회('06.6, 10월), 주요 선진국 조달 시장 진출 지원
    - \* 월드뱅크 조달설명회(1/4분기), 2010 남아공월드컵 시개단 파견('06.2월)
  -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TV홈쇼핑 등 대형유통망 진출 지원
    - \* 자동차부품 아웃소싱 로드쇼(유럽, 북미 등), 글로벌유통망 초청 종합 상담회(4월)

**과제 18**

**네트워크형 외국인투자의 전략적 유치**

- ◇ 동북아 비즈니스허브 연계형 외국기업 중점 유치
- ◇ 투자환경, 전문인력 등 외국인투자 인프라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06년	07년	08년
- FDI 유치액(억불)	110	120	130
- FDI 중 부품·소재 비중(%)	20	25	30
- 네트워크형 FDI 유치건수 (R&D센터, 물류센터, 지역본부)	30	40	50

**18-1 新FDI 비전 및 전략적 외자유치체계 구축**

① 중장기 新FDI 비전 및 전략 수립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2015년 외국인투자정책의 비전·전략 및 실천과제 도출 (KIET용역 수행중)
  - \* 참여정부 출범시('03.2월) 수립한 FDI 전망의 재조명 필요
- GDP 대비 FDI 비중, 주요 업종별 투자유치전략, FDI 통계의 국제기준화, 해외직접투자수지\* 통계 등 포함
  - \* 해외직접투자수지 = 외국인직접투자(inflow) - 해외직접투자(outflow)
- 자동적 투자인센티브 부여 시스템에서 산업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 등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한 인센티브제도로 개편 (KIEP 용역 수행중)

## ② 既진출 기업의 증액투자 활성화 시스템 구축

- 국내진출기업에 대한 애로해결위주에서 부품조달, 판로개척, 국내파트너 연결 등 적극적 현지화 지원전략으로 전환
  - \* 증액투자 비중(%) : ('03) 60.8 → ('04) 43.4 → ('05) 66.5
- 증액투자유치 국내 IR 개최, 해외본사에 대한 맞춤형 유치단 파견, 본사 CEO초청 Red-carpet 서비스 등 유치활동 전개

## ③ 지역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한 외국인투자유치

- 클러스터별 가치사슬 분석을 통한 중점유치업종 타겟팅, 중점업종 위주의 인센티브 운영 추진
- 중앙·지자체 합동 IR, 투자정보 공유, 투자담당관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등을 통한 지자체의 외자유치능력 제고

## ④ Invest KOREA의 전략적 개편

- 뉴욕·런던·상해 등 12개 해외무역관을 투자핵심무역관으로 지정, 투자전담관을 '07년말까지 대폭 증원(21명→31명)
- 대외홍보 및 투자자문을 위한 투자자문관 신설
- 대학·컨설팅·법률 등 전문가 인력Pool 조성 및 프로젝트 매니저(PM)의 전문성 보장
- PM 증원('05: 82명→ '06: 100명) 및 PM관리 프로젝트 확대('05: 162개→ '06: 200개)

## ⑤ 세계 투자분야 논의에 적극 참여로 투자정책 정보교류 강화

- OECD, UNCTA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공동 FDI프로젝트 추진, 국제세미나 개최 및 해외투자환경설명회 참석

## 18-2 고부가가치 네트워크형 FDI 중점 유치

### ① 전략적 유치업종 중심의 투자유치 타겟팅

- IT·자동차부품 등 주요 업종별 산업경쟁력 분석을 통해 유치 가능성 및 국민경제기여도가 높은 타겟업종 선정(KIET용역 수행중)
- 업종별 민관합동 T/F 구성, 산자부내 업종별 투자담당관 (Task Manager) 지정 등을 통해 전략적 유치업종 선정 및 효율적 유치활동 전개

### ② 동북아 비즈니스허브 기여형 R&D 센터, 다국적기업 지역 본부 및 물류센터 중점 유치

- 기술적 파급효과가 높은 IT·BT·NT 등 첨단업종 중심으로 10개 타겟 R&D센터 선정
  - \* R&D 입지희망국 조사('05 UNCTAD): 중국(62%), 인도(29%), 싱가포르(4%),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3%)
- Fortune 500대 기업 등의 타겟팅을 통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
- 미국계 Fedex·UPS, 네덜란드계 TNT 등 글로벌 특급배송 업체의 동북아 거점 물류센터 타겟팅
  - \* DHL은 인천국제공항내 초대형 물류허브(6,800평) 건설 예정(2천만달러)

### ③ 부품·소재분야 외국인투자 집중 유치

- 제품가치사슬에 기초한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완성품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소재기업 유치 주력
- 부품·소재기업 유치비중 확대('05.1~9월: 19.2% → '06: 30%) 및 부품조달 비중이 높은 내수중심형 FDI 적극 발굴
  - \*日 LCD부품소재기업 HOYA유치효과 : 수입대체효과 1,200억원('06~'08)

### 18-3 외국인투자 인프라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 ①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작업의 조기 마무리
  - 기존 발굴된 151개 중장기 개선과제 추진을 가속화
    - \* 용산외국인학교 건립 완공('06.7월) 및 개교('06.8월) 예정
  -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개선과제의 추가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② 외국기업 인력알선센터 확충 및 전국순회 취업박람회 실시
  - IK·외국기업협회·주한외국상의·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외국기업 수요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고,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
- ③ 외국인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Invest KOREA Plaza**('06.10월 준공 예정)를 외국인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로 활용
    - \* 외국기업 창업지원연구센터, 종합생활문화센터 및 애로상담 콜센터 등 종합 지원서비스 운영
  -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사업 확산을 통해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포털지원 서비스 제공
- ④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활성화
  - IK 고충처리팀의 옴부즈만 직속 이관, 홈닥터 증원 등을 통해 고충처리 집행 및 실질적인 애로해결에 주력
  -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 체험단' 운영으로 문제 발생 이전의 고충 예방활동 강화
- ⑤ **Foreign Investment Week** 운영
  - 현행 외국기업의 날 행사를 확대하여, 외투기업을 국민경제의 일원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주간행사 실시
    - \* 외투기업 CEO Roundtable, 외투기업 성공사례 워크샵, 고위간부의 외국인 커뮤니티 1일통장제, 외국학교 1일교사 등

**과제19**

**통상환경 개선을 통한 글로벌경영 활성화**

- ◇ 지역 및 다자통상 확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 ◇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경영 지원체제 구축

	'06	'07	'08
- FTA체결국과의교역비중*(%)	12	30	75
- 해외투자액(억불)	61	70	85

\*FTA 체결 가정 ('06년) 칠레, EFTA, 아세안, 캐나다  
 ('07년) 미국, 인도, 남미공동시장, 멕시코  
 ('08년 이후) 일본, EU, 중국 등

**19-1 FTA 등 통상여건 조성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① 산업발전전략에 입각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

-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수출시장의 안정적 유지 및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의 계기로 활용

- 선진경제권과의 경제통합을 통한 우리 산업의 국제분업체제 편입 및 기술융합을 통한 미래기술의 상업화 촉진

\* ASEAN: 상품협정 실질타결('06년 발효), 서비스/투자협정 '06년말 완료목표

\* 미국 : 스크린쿼터 등 양국통상현안 해결 이후 협상개시 추진

- BRICs 등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확대를 통해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전략 수출거점 확보

\* 인도, 남미공동시장 : 협상개시 전단계인 「공동연구」 진행 중

## ② FTA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협상 추진

-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통해 시장개방 확대에 주력하되, 국내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설정 등 **전략적 양허협상 추진**
  - 특히, ASEAN·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해서는 **對日 수출경쟁 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예: 자동차·철강시장 개방 주력)
    - \* FTA 대상국별로 제조업 분야 9,500여개 품목의 경쟁력 분석과 업계실태조사 실시를 통한 협상안 마련
- FTA체결국간 교역을 촉진하되, 제3국산 제품의 우회수입방지를 위해 품목별 생산패턴 및 경쟁력을 고려한 **원산지규정 마련**
- 관세 이외에도 비관세장벽 철폐 및 서비스·투자 자유화 등 **포괄적인 협상**을 통한 FTA 효과 극대화

## ③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보완대책 마련

-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으로 피해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
  - 무역조정지원법 제정후 세부시행방안을 마련(시행령·시행규칙 연내 제정)하여 '07년부터 지원 개시
    -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05.11월)

## ④ DDA협상 등 국제논의 적극 참가를 통한 무역장벽 완화

- **WTO/DDA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sup>40)</sup>**, 서비스·규범협상 등에 적극 참가하여 외국의 관세·비관세장벽을 완화
- **OECD, IEA** 등 국제기구 활동을 통한 다자간 무역 및 에너지안보협력 강화

40) NAMA :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 19-2 해외진출기업의 글로벌경영 지원 강화

### ① 해외진출 희망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종합포탈사이트 구축('06년도 상반기)으로 진출기업에 대한 종합정보 지원
  - 해외투자 관련 정보검색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기업 상호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場 구축
  - \* 진출기업의 애로에 대한 온라인컨설팅 기능 강화 및 기업애로 DB구축 추진
- 현지 지원기관협의회 및 진출기업협의회 개최를 통해 기업 지원기관과 상공인단체의 조직화 유도

### ② CHINVEST<sup>41)</sup>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경영 지원 확대

- 유망진출지역인 CHINVEST에 대한 기업의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
  - 현지 경영애로가 큰 CHINVEST를 중심으로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 확대 운영
  - \* 현행 3개소(중국 북경, 상해, 청도)에서 '06년 중국 광주, 베트남 호치민 등으로 확대

지 역	진 출 지 원 전 략
중 국	○ 중국내 투자지역 다변화(동부연안→서부·내륙)를 위해 「중국 서부지역 및 동북3성 진출전략」 수립 추진 * 현재 진행중인 지표성(Land Mark) 프로젝트를 선정, 투자성공 사례 창출을 통한 잠재투자가 발굴 및 구체적 투자유망 프로젝트와 관련정보 DB 구축
인 도	○ '뉴델리'에서 '캘커타'로 투자지역을 확대하고 IT 및 석유 화학분야 협력 확대 ○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를 활용 진출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
베 트 남	○ 현지 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한국기업용 산업단지」 조성 추진 ○ 「한·베트남 투자협력공동위원회」를 통해 진출기업지원
중 동	○ 두바이 「플랜트·건설 수주지원센터」 설치 및 「e-Plant 수주 지원센터」를 통한 발주정보 실시간 제공 ○ 민간중심의 「대중동 교류협력위원회」 설치·운영 추진

41)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진출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CHina), 인도(INdia), 베트남(ViEtnam), 중동(middle-eaST)지역

○ 다양한 투자협력채널 구축

- 현지 경영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투자협력위원회 이외의 다양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 진출국 투자청 등에 한국기업 지원전담창구 설치 확대 유도
- \* 베트남(투자청), 인도(상공부), 필리핀 정부에 **Korea Desk** 설치방안 협의

**19-3 정상외교 성과의 후속조치 및 양자 산업협력 강화**

① 정상외교 성과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 기술협력채널 확대, 중소기업협력 활성화 등 산업·자원 분야 협력의 지속적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영여건 확보

< '06년 주요 추진과제 >

순방지('04-'05)	주요 과제
러시아·카자흐스탄	서캅차카 광구 공동개발
인도·베트남	포스코 인도 제철소 건설 베트남 한국산업공단 조성
아르헨·브라질·칠레	한-브라질 공동연구개발 추진
영국·폴란드·프랑스	과학기술혁신 파트너십 약정 이행 클러스터 지원기관간 협력 강화
독일·터키	Techno Caravan을 계기로 한 산업기술협력 활성화 터키와의 수출보험 협력 강화
우즈베키스탄	중소기업협력 활성화
멕시코·코스타리카	한-멕시코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강화 철강·석유화학 분야의 협력채널 구축
말레이시아·필리핀	중소기업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확대 필리핀과 발전소 등 전력산업 협력 강화
중국 (한중정상회담, 05.11, 서울)	2012 한중 교역 2,000억불 달성 한중 무역구제협력 MOU 세부이행방안 마련

② 올해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기존의 협력틀도 활성화

- \* 중동지역 진출 대책 수립(총리 중동 5개국 순방 후속조치), 북아프리카(플랜트·자원), 프랑스(한·불 수교 120주년 계기), 중국(산업협력위원회 및 투자협력위원회)

## 19-4 선진국형 무역구제체제 실현

### ① WTO규범 위반사건 조사기능 및 조기경보체제 가동

- 교역상대국의 WTO규범 위반사건 조사 및 외국의 무역장벽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선진국형 무역구제기관으로 위상제고
  - \* 산업피해구제법령에 법적근거 마련('06.1월)
- 수입시장 감시 및 조기경보체제 가동
  - \*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주요 업종별단체등으로 수입감시시스템 既구축
  - 무역구제 Portal System을 통해 조기경보체제를 가동하여 산업 피해예방 및 관련 정보제공 강화등 구제기능의 내실화

### ② 해외에서의 被訴기업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 피소기업지원단 구성·운영으로 피소기업 지원기반 구축
  - \* 미주, 구주, 중국, 인도, 기타지역 5개 권역별 팀구성('06.1/4)
- 외국의 반덤핑조치 등 사전예방 및 피소업체 사후대응 지원 강화

### ③ 주요교역국 무역구제기관간 Global Network체제 구축

- 한·중, 한-EU, 한-멕시코 등 무역구제기관간 협력회의 개최
- 미국·캐나다·EU 등 선진 무역구제기관간 조사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등 협력확대

### ④ 수요자 위주의 무역구제에 대한 홍보 및 인식제고

- 무역구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 및 대학생등 미래수요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된 64개 무역구제 지원센터의 홍보·교육기능 대폭 강화
- 무역구제 양자협력 강화를 위한 서울국제포럼 확대 개최
- 무역구제 정보제공 강화 및 조사관·대리인 교육프로그램 가동
  - \* 「Trade Remedy Review」지 학술진흥재단 등록을 통해 전문성 제고
- 산업경쟁력 조사사업의 내실화 및 효율적 활용

**과제20**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확대**

- ◇ '08년 자주개발을 10%를 목표로 대형 유망광구 투자확대
- ◇ 에너지산업 동반진출, 제도혁신 등 선진형 자원개발 기반조성

	'06	'07	'08
- 신규 투자규모 :	9억불	12억불	16억불
- 신규 추정매장량* :	49억배럴	55억배럴	60억배럴

\* 당해년도 신규 탐사광구중 우리측 지분을 감안한 추정매장량

**20-1 자원부국과의 전략적 자원협력 확대**

① 정상 자원외교의 성과 극대화 및 자원협력 확대

- 대형 유전, 철·우라늄광 등 자원외교 성과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해당국과의 자원협력을 더욱 확대

국 가	주요 사업명	'06년 추진계획
러시아	○ 서캄차카 유전개발	· 본계약 체결(상반기중), 시추준비
	○ 한·러 가스협력협정	· 가스협력협정 체결(상반기중)
카자흐	○ 잠빌광구 개발	· 본계약 체결(2월) 및 탐사착수(상반기중)
	○ 브제노브스코예 우라늄광	· 합작법인 설립(상반기중) 및 탐사착수
우즈벡	○ 아랄해 해상유전	· 생산물분배계약 체결(2월), 탐사착수
	○ 자파드 금광개발	· 합작계약 승인에 따른 탐사착수
인 도	○ 인도 철광석 개발	· 제철소 기공식(하반기중) 및 개발 착수
	○ 베트남 유전개발	· 11-2 광구 생산시설 준공(하반기중)
남 미	○ 브라질 해상광구	· BMC 30/32광구 탐사시추 예정(하반기중)
	○ 멕·아르헨 자원협력위	· 한·멕, 한·아르헨 자원협력위 개최(3월)

② 해외 대형광구 신규개발을 통해 안정적 자원 확보 강화

- 정상외교 성과 및 민간의 자원개발 투자확대 등을 바탕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대형 탐사광구에 집중 투자

< '06년 주요광구별 추진계획 >

국 가	사 업 명	'06년 추진계획
나 이 지리아	○ 심해 해상광구 2개 (OPL 321, OPL 323)	· 본계약 체결, 탐사 개시 · 발전부문 타당성검토
카자흐	○ 주반담 광구	· 지분인수계약 체결, 탐사 개시
예 멘	○ 4광구	· 본계약 체결, 탐사 개시
	○ 39광구	· 본계약 체결, 탐사 개시
	○ 16광구	· 본계약 체결, 탐사 개시
러시아	○ 캄차카 육상 2개광구 (Tigil 및 Icha)	· 본계약 체결, 탐사 개시
	○ 러시아 사할린 III (키린스키 광구)	· 컨소시움 구성, 입찰 참여

③ 신규 유망지역에 대한 자원외교 지속 추진

- 아프리카·중동 등 자원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 외교력을 집중하여 자원개발 기회를 선점

지역	필요성
나이지리아, 남아공 등 아프리카	· 상대적으로 미탐사, 미개발된 아프리카의 자원개발 가능성 · 나이지리아 심해유전 개발 및 발전부문 투자 착수
이라크 리비아 등 중동지역	· 이라크의 잠재적 가치 (세계 제2위의 매장보유량) 및 경제 재건을 위한 신규 유전개발 가능성 높음 · 중동지역과의 지속적 유대, 비축 등 자원협력 강화

- 러시아·인니·호주 등 17개국과 자원협력위를 개최, 해외자원 공동개발 등 자원협력 프로젝트를 발굴·추진

장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한국	미얀마	칠레, 인니	베트남, 호주	페루
해당국	우즈베크, 아르헨, 멕시코	카자흐, 브라질	러시아, 필리핀, 몽골, 콩고	오만, 중국

## 20-2 유전개발 펀드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시스템의 혁신

### 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유전개발 펀드 본격 도입

- 민간의 유동자금이 유전개발 신규재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전개발펀드를 도입('06년중 2천억원 규모)
- 유전개발펀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투자위험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고, 연내 초기펀드 출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투자 위험도를 감안, 만기시 일정 부분의 원금손실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유전개발안정화자금'을 운용
    - \* 사업성 판단 및 기술심사 능력을 보유한 석유공사에서 운용
  - 효과적인 투자유인책으로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 협의

### ②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경쟁력 있는 석유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석유공사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출자 지원확대
  - \* 석유공사 출자 지원규모 : ('05) 731억원 → ('06) 1,645억원
- 석유공사의 개발부문 분리를 통한 자회사 설립을 위해 「석유공사법」 개정 추진(하반기부터)
  - \* 주요 개정사항 : 기업분할(물적분할)을 위해 상법상 주식회사 관련조항 적용, 해외 유전개발 관련 인·허가의 자회사 자동승계 등

### ③ 석유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인력 유입

- 금년부터 자원공학과 연관 분야간 다학제적 접근이 가능한 「석유개발 아카데미」를 설치·운영
- 국내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석유개발기업 M&A 및 글로벌 메이저사 은퇴 기술인력을 적극 유치
  - \* 매장량 2억배럴 규모의 회사 인수시, 신규인력 230명 확보 효과

### 20-3 자원개발과 에너지인프라 동반진출 활성화

① 민·관 공동의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 구성·운영

- 자원개발과 에너지 인프라(전력, 가스 등)와의 동반진출 촉진을 위해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기업, 한전 등 전력업계, 플랜트 및 해외건설업체, 기타 지원기관(kotra, 전경련, 수출입은행), 산자부 등

- 동반진출 단계별 밀착지원을 통해 지역별 동반진출 유망 프로젝트의 발굴 및 수주

단계	주요 지원내용
조사·분석 단계	· 분기별 협의회 개최를 통한 업계 정보공유 · 지역별 민관 공동조사단 파견(아프리카 등 '06년 4회) · 지역별 동반진출 로드맵 수립
프로젝트 발굴단계	· 세부 타당성 조사(F/S) 지원 · 국내업계 강점의 체계적 홍보 및 경쟁국 동향분석
프로젝트 수주단계	· 업계간 이해조정 및 컨소시움 구성 · 민관 공동의 협상단 파견

②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전담회사」 설립 유도

- 프로젝트 전담회사에 성공불융자, 타당성조사 우선지원 및 유전개발펀드 투자 등 지원을 집중

\* 프로젝트 전담회사의 자원개발에는 성공불 융자비율 우대(80%→90%)

\* 유전을 포함한 프로젝트(발전 등)에 대해서도 유전개발펀드 투자대상과 같이 지원

③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동반진출 촉진

- 수출입은행 자원개발 금융지원('06년 2,000억원) 및 자원개발 연계형 플랜트 수출보증보험도 지속 지원

④ 정유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

- 고유가상황을 활용, 정유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조세감면(법인세 10%공제) 등 고도화시설 투자 촉진

\* 정유부문 투자규모(조원) : ('04) 0.6 → ('05) 1.3 → ('07) 1.6

\* 정유부문 수출추이(억\$) : ('04) 103 → ('05) 155

**과제21**

**남북 상생의 산업·자원 협력기반 구축**

- ◇ 남·북 교역·투자 확대
- ◇ 남·북 경제협력성화를 위한 에너지협력 기반 구축
- ◇ 남북 산업자원협력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21-1 경공업·자원개발 연계 수익모델 창출**

- ◇ 남·북한간 상업적 방식을 통해 상호 win-win을 위한 경공업·광물자원개발협력 추진 (제10차 남북경추위 합의사항)

① 경공업 원자재 공급에 따른 협력증진

- 원자재 공급규모에 대한 남북 합의 후, 원자재 공급방안 마련
-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과 남북 경제협력 증진방안 마련

② 북한 광물자원 개발 지원 방안 마련

- 원자재 공급과 연계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
  - 광산·광종별 광물자원 개발방안 마련, 북측과 협의 추진
- \* 북한 주요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남한의 24배로 추정. 특히, 우리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아연, 마그네사이트, 철, 몰리브덴 등이 풍부

③ 남북간 경공업 분야 산업기술 협력 확대

- 개도국들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섬유산업 협력 추진
  - 우리측 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을 활용한 협력 모델 발굴
- 경공업의 업종간 및 업종내 남·북간 상호보완적인 분야를 발굴, 남북경협 수익모델로 확대 발전

## **21-2 남북 경협활성화를 위한 에너지협력 기반 구축**

### ① 6자회담 합의결과에 따른 대북 송전사업 검토

- 6자회담을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이 합의될 경우 남북당국간 전력공급 이행합의서 체결·추진

\* 남북 당국간 업무협조를 위한 「남북전력공급 실무협의회」 구성

- 북한 전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남북합동 조사사업」 추진

### ② 개성공단 진출 국내업체에 대한 전력공급

- 시범단지(2.8만평)에 1.5만kW 전력 공급중(22.9kV 배전방식)
- 개성공단(총 100만평)에 10만kW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154kV 송전선 건설 추진

## **21-3 남북 교역·투자 확대기반 마련**

### ① 개성공단 진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 본단지 1단계(100만평)에 대한 진출업종 및 업체선정 기준(안) 마련
- 개성공단 진출 활성화를 위해 투자사절단, 상담회, 박람회 등 개최

### ② 생산기반기술 협력을 통해 전방위 산업연관효과 도모

- 당국간 협상을 통해 6대(주조,금형,도금 등)부문별 협력방안 도출
- 시너지효과를 위해 출연기관, 재료·장비업체 등 동반진출 유도

③ 통일된 산업표준 마련을 위해 남북 표준 협력방안 마련

- 정부·전문기관·업계·학계 등으로 “남북표준협의회(가칭)” 구성
- 주요 표준(물류표준, 기초소재·측정표준 등)에 대한 당국간 협의 추진

④ 대북 진출업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대북 진출업계, 지원기관 등을 연결하는 산업자원협력 협의체 구성
  - 산·학·연·관으로 「산업자원협력위원회」 설치·운영
  - 주요 분야별 협의회 및 각 지원기관 협의회를 운영
- 민간 주도로 「남북경제교류센터」 설립·운영
  - 대북 진출업체 정보제공·거래주선 및 대정부 창구역할
  - \* 동 센터는 남북경협 사업발굴 및 거래주선, 정보제공 등 역할을 수행하고 남북협력사업자 및 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은 통일부에서 담당
- 남북 산업·자원협력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재원방안 강구
  - 보증·보험 등 상품 개발 및 금융지원 방안 마련

⑤ 남북 산업·자원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추진

- 남북간 상호 보완적인 산업관계 정착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 \* 정책옹역사업('05. 12 ~ ), 유관기관·업계 등 의견 수렴 후 종합계획 수립

### III. '06년 역점추진 혁신과제

#### < 2005년 혁신추진 성과 및 시사점 >

- 2005년 산자부는 『가장 효율적인 부처, 가장 신뢰받는 부처』라는 혁신목표 아래 다양한 노력을 전개
  - 정책품질관리·성과관리·갈등관리 등 3개 공통혁신과제의 선도부처로서 성공사례 창출 및 매뉴얼 보급
  -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체제 구축, 조직·역량의 혁신 등의 고유혁신과제를 추진하여 고객지향적 혁신활동에 주력
  - 혁신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동아리 활성화 등을 통한 혁신 학습활동과 혁신활동에 대한 합리적 평가-보상체계 운영으로 혁신성과 가시화단계에 진입
- 그러나, 고객만족도와 정책-혁신의 연계성 등의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
- '06년에는 고객과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의 정착 및 정책-혁신의 통합으로 최우수 수준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

- ① 민원·제도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 해결
- ② 전문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한 무역구제기능 활성화
- ③ 표준분야의 KMS 활성화로 국제표준 선도기능 제고
- ④ R&D 지원업무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 ⑤ 갈등관리를 통한 에너지분야 현안과제 해결체제 구축

**과제1**

**민원·제도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 해결**

**그간의 추진현황과 평가**

- '04년부터 고객감동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제도개선 추진중
  - 각종 정책수립시 고객의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반영
  - 기업애로조정심의회 설치·운영 및 중소기업체험단 파견을 통해 민원을 적극 발굴·해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민원시스템 구축미비로 고객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 \* 산업자원부 민원서비스 만족도 : ('04) 57.6점 → ('05) 60점
  -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는 민원사항이 유형화되기 어렵고 여러부처에 걸쳐 있는 사안인 경우가 많아 기존의 정형화된 민원·제도개선 방식으로는 한계
  - 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노력과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으로 중복민원 지속발생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체계적 민원·제도개선과제 발굴체제 구축**

- 산자부·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KOTRA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외투기업체험단」을 운영하여,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제기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 해결
  - \* 해당기업 방문 공무원을 제도개선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련 민원과 연계된 제도개선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
- 외국인투자 애로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3/4분기) 및 신규 개선과제 제로베이스 검토실시(4/4분기)

② On-line 공동정보이용 및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부담 감소

- 행정기관간 표준화된 공동 DB 구축을 통해 외국인신원 확인정보를 웹상에서 연계·공동 이용하여(4/4분기), 외국인의 중복 민원서류 제출부담 감축 추진

\* 법무부·노동부 등의 외국인정보 표준화 및 공동이용 DB구축

-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고도화를 통해 고용·취업 및 출입국·체류 관련 민원서비스의 온라인 처리기반 구축

③ 불필요한 민원제기 부담의 事前해소체제 구축

- 문의사항이 많은 정책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안내한 「외국인 고객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 英·中·日·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

- 주요 투자기업별 전담 홈닥터 증원(7→12명)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사전해결 강화

④ 민원-제도개선 연결체계 강화를 통한 산자부 민원혁신 추진

- 산자부내 민원전담부서인 '고객만족행정팀'을 신설하여 민원·제도개선 통합 관리

\* 고객만족행정팀에서 국별 민원심의결과와 자체발굴과제, 외부기관 이첩 민원 등을 검토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 차관)에 상정·심의

- '05년에 제기된 중복민원을 全數 분석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제도개선 가능여부 전면 재검토(2/4분기중, 局 단위)

< 성과목표 >

① 외국인 애로사항의 해결건수 : ('05) 330건 → ('06) 350건

② 민원의 제도개선 연결 건수 : ('05) 33건→ ('06) 40건

**과제2**

**전문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한 무역구제기능 활성화**

**그간의 무역구제현황 평가**

- 무역위원회는 설립('87.7) 후 총 379건\*의 조사신청 처리(연평균 약 20건)로 국내산업피해보호와 공정한 국내 시장경쟁을 촉진
  - \* 반덤핑 88건, 세이프가드 33건, 불공정무역행위 258건
- 그러나, 그 동안의 무역구제 처리는 신청인 등 제한된 수요자 위주로 이루어져 양방향 접근방식의 무역구제체제는 미흡
  - \* 최근 3년간 반덤핑 조사신청 건수 : ('03)7건 → ('04)5건 → ('05)4건
- 또한, WTO 체제 출범('95) 이후 무역자유화 확대 및 불공정무역 발생 가능성 확대로 수입시장 감시체제 구축 시급
- 이에 따라, 무역구제제도 관련 정보제공체계 개선 및 종합적인 홍보체제의 확립을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 필요성 증대
  -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과 민원업무처리로 무역구제제도의 적시성·접근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① 수입시장 실시간 감시 및 조기경보체제 구축**

- 수입통관정보의 DB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입시장의 이상 징후를 분석하는 온라인 조기경보체제 가동
  - \* 수입시장(806개 품목)별로 일정주기의 시계열 분석자료 제공(깍은선 그래프)
- '수입시장감시협의회'\*를 통한 수입시장 감시와 '무역구제 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로 정보수집·전달체제 강화
  - \* 수입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산자부·경제단체(5개)·업종별 단체(5개)의 협의체

②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

- 무역구제제도별 온라인 신청·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단계별 담당자·조사내용·향후일정 등 제공
  - \* 조사절차 : 조사신청→ 조사개시결정→ 예비조사→ 본조사→ 최종판정
- 사건별 게시판 및 온라인 대화창구 제공으로 민원인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제소사례 열람·질의응답·FAQ기능으로 민원인의 편의 제고

③ 무역구제 관련 정보의 체계적 제공

- 무역구제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 연구발간자료, 조사통계자료, 국가별구제정보, 국내외 구제사례 등
-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제도별 업무 매뉴얼 및 교육자료\* 제공
  - \* 플래시, 동영상 등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개발

④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로 「온라인 문제해결의 場」 마련

- 사용자간 정보교류를 위한 토론방, 무역구제 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블로그 및 지식검색시스템 제공
  - \* 사용자 상호간, 제소기업간, 피제소기업간 의견교환 및 각 주체별 정보교류
- 특정조사와 관련된 조사위원·변호사·당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이버 공청회 등 활성화 지원

< 성과목표 >

- ① 반덤핑 등 무역구제 신청 건수 : ('05) 11건 → ('06) 15건
- ② 외국에서 피제소된 기업 지원건수 : ('05) 0건 → ('06) 10건

**과제3**

**표준분야의 KMS 활성화로 국제표준 선도기능 제고**

**그간의 표준분야 지식관리현황 평가**

- 기술표준원은 05년말 현재 21,000여종의 국가표준(KS)을 운영중이며 국내기술·표준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도 적극 추진
  - 국제표준안 검토시 자국의 산업보호 및 보유기술 반영을 위해서는 분야별 고도의 전문성 및 표준정보의 축적·이력관리 필요
    - \*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품목별 기술위원회(900여개)에 전문적 대응을 위하여 각국별 기술위원회 운영 → 국내에도 560여개의 기술위원회 구성·운영
- 그러나, 표준분야별 민·관 연계 전문지식·정보 공유체제의 부재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국제표준 대응기반 미흡
  - 동일 기술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국제표준안 검토 참여 및 국제회의 참가 여부에 따라 최신 표준 지식·정보 수준에 차이
    - \* 현행 국제표준안의 국내 검토는 간사기관에서 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의견 수렴 → 개개인의 의견 및 투표 결과에 대한 지식·정보 미공유
  - 인사이동 및 신규직원 전입시 표준관련 업무파악에 많은 시간소요

**① 'e-국제표준문서투표시스템' 활성화**

- ISO/IEC에서 검토 중인 국제표준안에 대한 국내 전문가(6,000여명)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인터넷 투표사이트 활성화('05.11월부터 시범운영)
  - \* e-국제표준문서투표시스템 : 국제규격심의에 대한 전과정(문서발송, 위원별 심의 및 투표)이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으로 진행 → 책임성, 투명성 제고
- 국내 위원별 국제표준 검토의견 및 각국의 국제표준안 투표 결과의 DB화로 분야별 국제표준 지식·정보이력 관리

② 국제표준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업무-지식 프로세스의 통합

- 내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을 'e-국제표준문서투표시스템'과 인터넷상에서 연계하여 '국제표준 통합지식관리시스템' 구축('06.9월)
- 이를 통해 내·외부 표준전문가들이 각국의 국제표준안 검토 결과 및 국제회의 참가보고서 등 각종 국제표준 동향 정보를 공유 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Q&A 활동 전개

③ 전략적 지식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구성·운영

- 기술표준원장을 지식관리책임관(CKO)으로 임명하고 지식관리 선포식 등을 통해 책임감있는 지식관리 활동 전개
- 내외부 전문가로 지식관리자\*를 구성하여 지식품질 향상 유도  
\* 지식관리자에게는 지식인증·반려·삭제 권한 부여
- 내·외부 전문가가 동참하는 표준연구회(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 활성화

④ 지식마인드 확산을 위한 지식관리 활성화 활동 전개

- 전문가 DB 구축 및 전문가 O&A제도 운영으로 업무상 궁금한 사항을 분야별 전문가에게 질의·답변
- 민간전문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보상제도 운영, 지식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식컨테스트 및 지식정보사냥대회 개최(반기별)

< 성과목표 >

- ① 국제표준에의 제안 및 반영 건수 : (05) 25건 → ('06) 45건
- ② 국제표준문건 처리기간 단축(평균) : ('05) 30일 → ('06) 15일

**과제4**

**R&D 지원업무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그간의 산업기술 R&D 사업관리 현황평가**

- 산업기술 R&D를 산업기술평가원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분산 관리함으로써 체계적 사업관리 곤란
  - \* 산자부 R&D : 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혁신기술개발 등 18,934억원(05년도 기준)
  - 각 기관별 R&D 사업정보(사업결과, 장비활용 여부 등)의 비표준화 및 공유시스템 미비로 사업 결과물의 종합적 활용체계 미흡
  - 정보제공 주체의 정보화 격차로 인한 관련정보의 상호연관성 및 다양한 사업현황 분석에 한계
- 이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보제공체계 개선 및 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R&D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 증대

**① R&D 지원업무 효율화를 위한 표준화 및 통합기반 마련**

- R&D 사업의 수혜자 그룹별 요구사항 및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업무·정보·서식의 연계표준안 마련('06. 6월)
  - \* 행정수요자인 고객(연구기관, 산업계, 국민)의 입장에서 표준화를 실시
- R&D 관련 정보제공체계 및 정보활용 개선을 위한 “산업기술 e-R&D 시스템” 구조(Architecture) 설계(7월)
  - \* "e-R&D" : 산·학·연, 산자부, 유관기관(20개)이 사용할 산업기술혁신 통합정보 시스템

- 유관기관 기관장급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R&D 지원제도의 정비·시행(12월)

\* 산자부,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기술거래소, 테크노파크 등의 기관장 참여

② 산업기술기반 정보 D/B 및 R&D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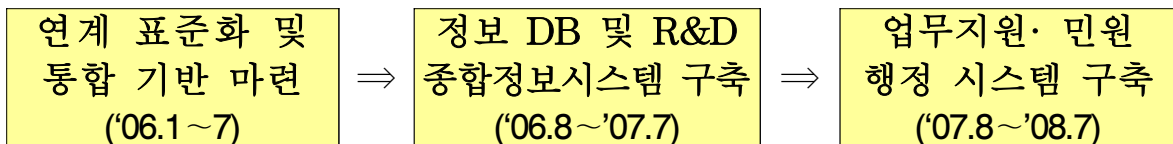
- R&D 관련정보(장비·과제·인력 등)의 DB 구축('06.8~'07.7)
- 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각종 통계 제공, 사업평가정보 및 사후 관리정보 등 R&D 종합정보시스템 구축('06.8~'07.7)

\* R&D 예산투입 대비 집행현황, 사업별/기술별 예산변화 추이 등의 정보를 제공

③ R&D 관련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 R&D 사업 수행기관간 정보공유 및 연계 업무 처리환경 구현  
→ 산·학·연·관의 협업적 R&D 사업추진체계 확립
- 산·학·연 사용자 중심의 One-Stop 민원업무 처리 환경 조성

\* 산업기술 e-R&D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 전자협약 등의 기능 제공



< 성과목표 >

- ① R&D 업무·정보·서식에 대한 표준화 여부 : 3개 분야('06년)
- ② 구축장비 활용 제고를 위한 D/B 구축 정도 : ('05)7,500건 → ('06)20,000건

**과제5**

**갈등관리를 통한 에너지분야 현안과제 해결체제 구축**

**그간의 갈등관리 추진현황**

- 수도권 입지규제완화, 에너지시설 설립 등의 산자부 정책을 둘러싼 빈번한 갈등표출 지속
    - 05년에는 방폐장 선정, 전력량계 유효기간 조정(갈등관리 포럼사업) 등의 성공을 통해 일반적 갈등관리 Model과 Manual 정립 성공
  - 최근 신규 원전건설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 시민·환경단체의 사회적 공론화 요구 등으로 사회적 갈등 야기 양상
    -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환경영향평가부실 등을 이유로 신고리 원전 1,2호기 건설승인 취소소송을 제기 중('05.4.11)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원전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 및 걱정수준에 대한 평가 필요성 제기
      - \* 시민·환경단체 : 신규 원전건설 추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지속주장
      - \* 국회: 원전건설시 주민투표실시를 의무화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계류 중('05.5.13)
- ※ 우리나라는 2017년까지 총 8기의 신규원전을 건설할 계획

구 분	발전소명	위 치	용 량 (만kW)	준공시기	비 고
건설 중(4기)	新고리 1,2	부산 기장	100×2	2010/2011	'05.1.11승인
	新월성 1,2	경북 경주	100×2	2011/2012	'05.9.30승인
건설준비중(2기)	新고리 3,4	울산 울주	140×2	2012/2013	
건설계획중(2기)	新울진 1,2	경북 울진	140×2	2014/2015	

① 신규 원전건설 관련 갈등영향분석 실시

-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 지자체, 환경단체 및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 파악(1/4분기)
  - \* 갈등개요·이해관계자분석·원인분석·동향에 대한 단계별 체크리스트 작성 (필요시 전문기관에 정책용역 수행)
-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신규원전의 역할과 적정수준에 대한 평가시행(상반기)

② 다양한 정책홍보기법 도입으로 지속적 대화·협력관계 형성

- 신규 원전건설 지역 지자체와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공청회 개최 및 지역 민원사항의 합리적 해결 도모(분기별)
- 다음·엠파스 등 유명 포털사이트 배너 설치, 방송매체에 PPL 광고, 이동 원자력전시관 운영, 청소년 원자력캠프 운영, 지하철·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광고 등으로 원전 이미지 개선(연중)

\* PPL(Product Placement) : 영화·드라마 등에 특정 소재를 노출시켜 간접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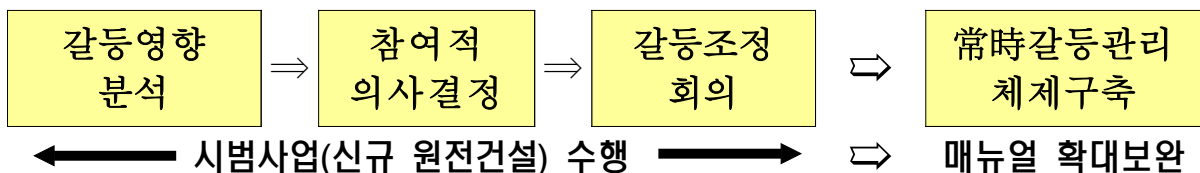
③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회의' 구성·운영

- 원전과 관련한 합리적 정책방향과 합의점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합의 유도(하반기)
- \* 환경단체 등 극단적 원전 반대론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확보 실패시 적용 가능한 정책방향 결정모델 정립

④ 산업자원분야 常時的 갈등관리체제 구축(하반기)

- 전력량계 유효기간조정(05년 시범사업), 방폐장 부지선정, 신규원전 건설 등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기존의 갈등관리 매뉴얼을 보완
- 에너지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갈등유발 가능사업을 발굴·해결하는 상시 갈등관리체제 구축

※ 원전건설 소과정에 대한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한 단계별 점검으로 정책실패 예방



< 성과목표 >

- ①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한 신규원전 건설관련 합의점 도출 여부
- ② 갈등관리 매뉴얼 보완 및 에너지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 IV. 성과측정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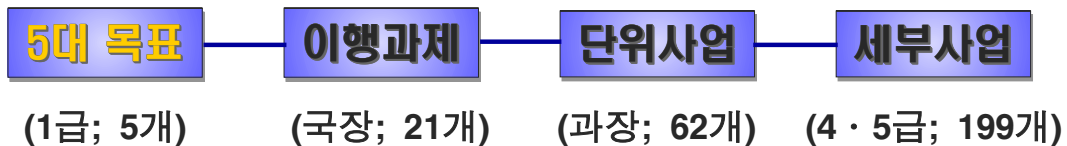
### 1 성과관리 추진체계

#### □□ 정책과제와 혁신과제를 Code화하여 IT시스템으로 추진상황 관리

- On-Line "정책과제관리시스템"으로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

#### □□ “직무미션제” 실시 및 직무성과계약 체결 (5급 이상)

- 업무계획상의 과제에 대하여 직급별로 책임자 지정 (첨부 4)



- 장관과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반기별로 평가

#### □□ 성과지표를 토대로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성과급 등에 연계

- 정책과제별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지표별로 목표치를 설정 (정책부문 : 49개, 혁신부문 10개)
- 직무성과계약 달성도, 정책, 업무혁신 등을 평가하여 자체 통합평가지시스템에 반영

<통합평가지시스템 구성항목> (%)

직무성과계약 달성도	다면평가		정책평가		업무 혁신	홍보관리 (PCRM 포함)	전자 정부	학습 교육	계
	단순	다차원	자체평가	수요자평가					
30	9	6	10	10	20	10	3	2	100

- 평가결과를 인사·성과급·조직·예산배분 등에 반영

## 2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 포괄 지표

지표 제목	관련 정책	성과 지표 (‘05년→’06년)	평가기준 /방식
<b>정책부문</b>			
① 수출	· 신무역체제를 구축하고 무역 1조불시대 조기진입 견인	① 총수출액 (2,847억불 → 3,180억불)	○ 관세청 통관통계
② 외국인 투자유치	· 네트워크형 외국인투자의 전략적 유치	② 외국인투자유치액 (115억불 → 110억불)	○ 산자부 공식통계
③ 설비투자	· 투자활성화를 위한 총력 지원시스템 가동	③ 200대 기업 설비투자액 (43조원 → 50조원)	○ 산자부 공식통계
④ 에너지수급상황	· 공급설비의 지속적 확충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도모	④ 에너지공급능력 확충 - 석유비축량 (74.5 → 78백만배럴) - LNG저장율 (9.4 → 10.0%) - 발전설비용량 (6,226 → 6,543만kw)	○ 에너지원별 통계 종합
<b>혁신부문</b>			
① 고객 만족도	· 민원·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① 민원서비스 만족도 (60점 → 65점)	국무조정실 조사
② 혁신 단계	· 정책-혁신 통합으로 정책혁신 강화	② 혁신수준 (5단계 유지)	혁신관리 평가단 평가

## □ 과제별 지표

## 〈정책부문〉

이행과제	주요내용	성과지표 (‘05년→’06년)	평가기준/방식
<b>목표 1 : 실물경제의 활성화 촉진</b>			
① 설비투자 확대 및 내수활성화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밀착형 설비투자 지원</li> <li>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li> </ul>	① 200대기업 설비투자액 (43조원 → 50조원) ② 업종별 투자로드맵 수립 : 5개 업종 ③ 기업호감도 지수 (48.5 →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자부 공식통계</li> <li>○ 산자부 자체조사</li> <li>○ 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li> </ul>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업 주도의 상생협력 분위기 정착</li> <li>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사례 확산</li> </ul>	① 대기업의 상생경영 투자실적 (8,317억원 → 9,700억원) ② 성과공유제 실시업체수 (공기업 1, 민간기업 1 → 공기업 2, 민간기업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자부·전경련 공동조사</li> <li>○ 산자부·전경련 공동조사</li> </ul>
③ 중소기업형 업종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세중소업체의 생산기반확충 및 마케팅 지원</li> <li>중소유통업체 마케팅 역량 강화</li> </ul>	① 생활용품 및 봉제기업 선도기업 매출 (5.36조원 → 5.5조원) ② 중소기업유통관매시점관리시스템 (POS) 도입 비율 (14.1%→1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신용정보 ‘Kis-Line’ 기업정보</li> <li>○ 물류유통진흥원 통계</li> </ul>

이행과제	주요내용	성과지표 (‘05년→’06년)	평가기준/방식
<b>목표 2 : 혁신형 산업생태계의 구축</b>			
① 기술혁신 선순환구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향적 R&amp;D 추진 및 사업화 활성화</li> <li>· 개발기술의 이전·사업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최근 3년간 과제 사업화 성공률 (34% → 35%)</li> <li>②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 (18.5% → 2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기술평가원 통계</li> <li>○ 한국기술거래소 통계</li> </ul>
② 국가 표준 인증, 및 제품안전관리 체제의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표준·인증제도의 통합·정비</li> <li>· 국제표준 주도국으로의 도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표준인증제도 정비 진척도 (‘06년 국가인증제도 혁신 추진단 구성)</li> <li>② ISO/IEC에 기술 반영 : 150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자부 자체조사</li> <li>○ 산자부 자체조사 및 ISO/IEC 자료</li> </ul>
③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산업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계 수요에 맞는 공학교육 혁신</li> <li>· 해외기술인력 유치 확대</li> <li>· 고령 노동인력 전직 지원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학교육인증을 통과한 프로그램 수 (40건 → 67건)</li> <li>② 해외기술인력 유치실적 (122명 → 200명)</li> <li>③ 퇴직인력 재취업률 (47.4% → 5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공학교육 인증원 통계</li> <li>○ 산자부 자체통계 (골드카드 추진실적)</li> <li>○ 경총 Outplacement 센터 통계</li> </ul>
④ 지역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성장잠재력 강화</li> <li>· 네트워크 기능의 접목을 통한 산업단지클러스터화</li> <li>· 지역투자 확대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역특화센터 입주기업 매출액 (8,000억원 → 8,800억원)</li> <li>②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협의체 참여업체 (1,500개 → 2,000개사)</li> <li>- 산학연 협력활동을 통한 애로해결 과제수 (190건 → 250건)</li> </ul> </li> <li>③ 지역공장설립 대행서비스 수혜 기업수(1,443개 → 1,500개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산업종합 정보망 DB조사</li> <li>○ 주관기관 보고서 (7개 시범단지)</li> <li>○ 산자부 공장설립 정보망 통계</li> </ul>

이행과제	주요내용	성과지표 (‘05년→’06년)	평가기준/방식
<b>목표 3 : 초일류 성장산업군의 육성</b>			
① 주력산업의 글로벌리더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력산업의 수출규모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li> <li>·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li> </ul>	① 8대 주력산업 수출중 첨단 품목 수출 비중 (25.7% → 26.0%) <small>*8대 주력산업: 자동차, 일반기계, 반도체, 조선, 섬유, 전자, 철강, 석유화학</small> ② 수출액중 부품·소재의 비중 (43% → 44%)	산자부 자체통계  기계공업진흥회 등 유관기관 공동조사
② 미래사회선도형 R&B산업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li> <li>· 나노기술경쟁력의 조기 확보</li> <li>· 바이오산업 수출산업화 기반 강화</li> </ul>	① 로봇(세계시장 점유율) (2.8% → 2.9%) ② 나노기술 상용화 출시 제품수 (118개 → 148개) ③ 바이오산업(세계시장 점유율) (2.3% → 2.6%)	산자부 자체통계
③ 차세대 성장동력의 조기산업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주력 유망분야 성장기반 확충</li> </ul>	① 개발 시제품 수 (19개 → 20개) ② 성장동력분야 특허출원 건수 (476건 → 500건)	산자부 자체통계
④ 미래 고도소비 사회에 대응한 산업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기반 비즈니스 서비스 육성</li> </ul>	① 유통물류 표준설비 인증확대 (164개 → 200개) ② 비즈니스 서비스 활동지수 (2.3% → 2.5%) ③ 디자인기술개발 성공상품 매출증가 (30% → 32%)	산자부 자체통계  통계청 생산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화·웰빙 친화산업 육성</li> </ul>	④ 고령화 제품·서비스 표준 확대 (78개 → 90개)	산자부 자체통계
⑤ 디지털기술 융합을 통한 新산업혁명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액 규모 확대</li> </ul>	① 전자상거래액 (351조원 → 382조원)	통계청 생산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비즈니스 인덱스 개선</li> </ul>	② e비즈니스 인덱스 (47.3 → 50.0)	산자부 자체통계

이행과제	주요내용	성과지표 (‘05년→’06년)	주요 평가 기준/방식
<b>목표 4 : 에너지 강국 실현기반 확충</b>			
① 미래지향적 에너지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위기 대응능력제고</li> <li>· LNG 공급설비 확충</li> <li>· 발전설비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석유비축유 보유량 (74.5 → 78백만배럴)</li> <li>② LNG 저장비율 (9.4% → 10.0%)</li> <li>③ 발전설비용량 (6,226 → 6,543만kW)</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공사 통계</li> <li>○ 가스공사 통계</li> <li>○ 전력거래소 통계</li> </ul>
② 에너지 소비구조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 추진</li> <li>·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자발적 협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에너지 절감량 (4,808 → 6,083천TOE)</li> <li>② 건물분야 자발적 협약 체결 업체수 (63개 → 93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자부 통계 (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 추진실적)</li> </ul>
③ 친환경/ 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li> <li>·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차 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2.2 → 2.5%)</li> <li>② 환경경영체제 인증 건수 (3,266건 → 4,000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관리공단 통계(신재생에너지)</li> <li>○ 한국인정원 통계 (인증기업수)</li> </ul>
④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복지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요금 할인</li> <li>· 전기·가스시설 무료 개·보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에너지 서비스 대상 확대정도 (15만 → 80만가구)</li> <li>② 취약계층 에너지안전 시설 개선 (4.1만건 → 4.5만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력 통계</li> <li>○ 전기·가스 안전공사 통계</li> </ul>

이행과제	주요내용	성과지표 (‘05년→’06년)	평가기준/방식
<b>목표 5 :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촉진</b>			
① 산업강국 견인형 新무역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li> <li>·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외플랜트수주액 (158억불 → 180억불)</li> <li>②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계약액 (19억불 → 21억불)</li> </ul>	○ 산자부 집계 실적 및 통계
② 네트워크형 외국인 투자의 전략적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적 고부가가치 네트워크형 FDI중점유치</li> <li>· 외국인친화적 생활환경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부가가치네트워크형(R&amp;D 센터, 물류센터, 지역본부, 부품 소재) 외국인투자 유치금액 (22.4억불 → 25억불)</li> <li>②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과제 이행 진도율 (47% → 53%)</li> </ul>	○ 산자부 집계 실적 및 통계
③ 통상환경 개선을 통한 글로벌경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환경 개선을 통한 글로벌경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외진출기업 애로해결건수 (20회 → 25회)</li> <li>② 투자·산업협력위 개최건수 (6회 → 9회)</li> </ul>	○ 산자부 집계 실적 및 통계
④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자원개발 투자촉진</li> <li>· 확보매장량의 지속적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외자원개발 신규진출 (28건 → 30건)</li> <li>② 해외자원개발 투자 (8억불 → 9.5억불)</li> <li>③ 확보 가채매장량(석유) (6.7억배럴 → 8.1억배럴)</li> </ul>	○ 산자부 집계 실적 및 통계
⑤ 남북상생의 산업·자원 협력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 경제협력 기반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남북간 교역금액 (10.6억불 → 13억불)</li> <li>② 남북 산업·자원협력 중장기 계획수립 ‘06년 완료</li> </ul>	○ 산자부 집계 실적 및 통계

< 혁신과제 >

이행과제	주요내용	성과지표 (‘05년→’06년)	평가기준/방식
① 민원·제도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기업 애로 해결	· 민원서비스 제고와 이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① 외국인 애로사항 해결건수 (330건 → 350건) ② 민원의 제도개선 연결건수 (33건 → 40건)	○ 산자부 자체 조사 결과 ○ 산자부 자체 실적 및 통계
② 전문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한 무역구제 기능 활성화	· 포털시스템 구축으로 무역구제제도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	① 반덤핑 등 무역구제 신청건수 (11건 → 15건) ② 외국에서 피소된 기업지원건수 (0건 → 10건)	○ 산자부 자체 조사 결과 ○ 산자부 자체 추진실적
③ 표준분야의 KMS 활성화로 국제표준 선도기능 제고	· 내-외부 전문가를 연결하는 업무지원형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① 국제표준에의 제안 및 반영건수 (25건 → 45건) ② 국제표준문건 처리기간 단축(평균) (30일 → 15일)	○ 산자부 자체 추진실적 ○ 산자부 자체 조사 결과
④ R&D 지원업무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업무재설계를 통한 R&D 업무 효율화	① R&D 업무·정보·서식에 대한 표준화 여부 : 3개분야 ② R&D 관련정보 D/B 구축정도 (7,500건 → 20,000건)	○ 산자부 자체 실적 및 통계
⑤ 갈등관리를 통한 에너지분야 현안과제 해결 체제 구축	· 시범사업 해결을 통한 상시 갈등관리체제 구축	①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한 신규 원전 건설관련 합의점 도출 여부 ② 갈등관리 매뉴얼 보완 및 에너지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 산자부 자체 추진실적

## V. 맺음말

□ 정책목표별 이행과제, 대통령 해외순방 후속조치 등을 특별관리과제로 선정, code화하여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겠음

□ 또한, 민원제도개선, 전자정부, 지식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갈등관리 등 공동혁신과제의 정책연계를 통하여 혁신 일류부처로 도약하겠음

⇒ 이를 통하여 2006년중에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2008년 세계 산업 4강, 무역 8강 및 에너지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 < 산업·자원부문 발전비전 >

부문별	2006년 목표	2008년 비전
•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물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체감경기 개선</li> <li>- 혁신형 산업생태계의 구축으로 세계일류 기업여건 조성</li> <li>- 주력기간산업의 세계시장 지배력 유지</li> <li>- 차세대성장동력·지역산업균형발전의 가시적 성과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산업4강</li> <li>- 기업혁신역량 1등국가</li> <li>- 자립형 지방화 시대</li> </ul>
• 무역·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3,180억불, 외국인투자 110억불 달성</li> <li>- 기업의 글로벌경영여건 조성</li> <li>- 남북한간 산업·자원협력기반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무역8강</li> <li>- 남북 상생의 경제 협력 정착</li> </ul>
•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 에너지 공급</li> <li>- 해외자원개발 확대</li> <li>- 에너지원 구성 및 소비구조 선진화</li> <li>- 사회적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자주공급률 10%</li> <li>-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친화에너지 선진국</li> </ul>